

연구보고서

2010. 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 주요국(미·일) 비교 포함 -

(제1부 베이비붐 세대 대량퇴직의 경제·정책적 함의)

- 목 차 -

<요약>

I. 서론.....	1
II. 노동시장 파급효과.....	21
III. 자산시장 파급효과.....	40
IV. 국가재정 파급효과.....	75
V. 해외 사례.....	94
VI. 정책 제언.....	130

작성 : 정호성 수석연구원(3780-8048)
panco88@seri.org
강성원, 문외솔, 박준, 손민중 수석
이찬영, 이은미, 이민훈 수석
박번순 연구전문위원

... 목 차 ...

I. 서론	(정호성, 이민훈)
1. 연구배경 및 의의	1
2. 베이비붐 세대 현황 및 특징	8
II. 노동시장 파급효과	(문외솔, 박준)
1. 연구배경	21
2. 취업현황 및 특징	22
3. 파급효과 분석 및 전망	30
4. 소결	37
III. 자산시장 파급효과	(이은미, 이찬영, 손민중)
1. 연구배경	40
2. 보유현황 및 특징	46
3. 파급효과 분석 및 전망	50
4. 소결	70
IV. 국가재정 파급효과	(강성원)
1. 연구배경	75
2. 파급효과 분석 및 전망	78
3. 소결	90
V. 해외 사례	(정호성)
1. 일본	94
2. 미국	121
VI. 정책 제언	130
1. 노동시장	131
2. 자산시장	142
3. 재정	157
4. 실버산업	161
부록	163
참고문헌	167

《 Executive Summary 》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만형 격인 1955년생들이 2010년 기업의 일반적 정년연령인 55세에 달하면서 ‘베이비붐 세대 대량은퇴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714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 약 75.8%에 해당하는 549만 명의 취업자가 10년에 걸쳐 기업의 근로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썰물 은퇴’가 시작된 것이다. 인구구조상 돌출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동시에 산업 현장을 떠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즉 ① 생산 현장에서 노동력이 감소하고, ② 자산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자산 가격의 하락 압력이 확대되고, ③ 사회복지비용을 증대시켜 국가 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에 거주 주택을 처분하려 할 경우, 단기적인 공급 증가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부동산 가격 붕괴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노동시장, 자산시장, 국가재정의 3부분에 걸쳐 현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정적 효과의 현실화 가능성 및 그 강도를 추정했다. 그 결과, 첫째 향후 10년간 정년 대상자는 최대 140만~150만 명에 불과해, 은퇴로 인한 노동력 감소 효과는 우려한 수준보다 약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력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기근속 상용근로자 수의 비중이 동 세대 전체 취업자 수의 3분의 1에 불과해 10년간 실제 정년퇴직자 수는 연평균 14만~15만 명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은퇴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 자산을 일시에 처분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주 가구 중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약 12.9%에 불과하며, 평균 주식보유금액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 재무상황이 타 연령대에 비해 취약하지 않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택 보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은퇴 이후 주택을 동시에 처분할 확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보건 및 복지 지출이 늘어나겠지만, 고령자 관련 공공지출은 2009년 GDP 대비 5.9%에서 2018년 7.3%로 1.4%p 증가에 그치는 등 재정 부담도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동 세대의 대량퇴직이 단기적으로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의 관점에서 볼 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거대 인구집단이 동시에 고령 인구에 편입됨을 의미한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동 세대의 은퇴가 막바지에 달하는 2018년에는 65세 인구 수가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10년간은 단기적 관점의 정책 대응을 자제하고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노동력의 양적 감소보다는 숙련단절로 인한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직능자격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직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학습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의 양적 감소에 대비해 임금피크제 확대, 정년퇴직자를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자산시장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이거나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해갈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 소득원으로서 역모기지의 잠재적 수요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공급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정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이 있으므로 은퇴 준비가 미비한 저소득층 고령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요약 》

I. 서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정년퇴직 연령에 진입

- 베이비붐 세대의 만형 격인 1955년생들이 2010년에 기업의 일반적 정년 연령인 만 55세에 도달
- 약 55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기업의 근로 현장을 떠나게 되는 이른바 ‘썰물 은퇴’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수는 약 549.1만 명 수준

사회 전반에서 우려감이 고조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가 확산

- 2010년부터 동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썰물 은퇴’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확대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 문제가 이슈화¹⁾
- 노동력 감소, 자산시장 수급불균형 심화,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탄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 특히 주택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초래해 한국경제의 경착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²⁾

1)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대량퇴직이 이른바 ‘2007년 문제’라 불리며, 사회적 이슈화

2) 대량퇴직이 급격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부동산 가격 붕괴론(melt down)’까지 등장

은퇴의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

- 최근 우려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현실화 가능성 및 그 강도를 추정함으로써 은퇴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
 - 다음 세 부문별로 부정적 영향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 일본, 미국 등 해외사례와의 공통점 및 차별점을 파악해 시사점을 도출
 - 노동시장(Ⅱ장):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령 도달이 대량퇴직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로 인해 노동력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인가?
 - 자산시장(Ⅲ장):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보유자산을 처분할 것인가? 이로 인해 자산 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인가?
 - 국가재정(Ⅳ장):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사회복지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인가? 또한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 해외사례(Ⅴ장): 일본과 미국 사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에 대해 어떤 우려를 안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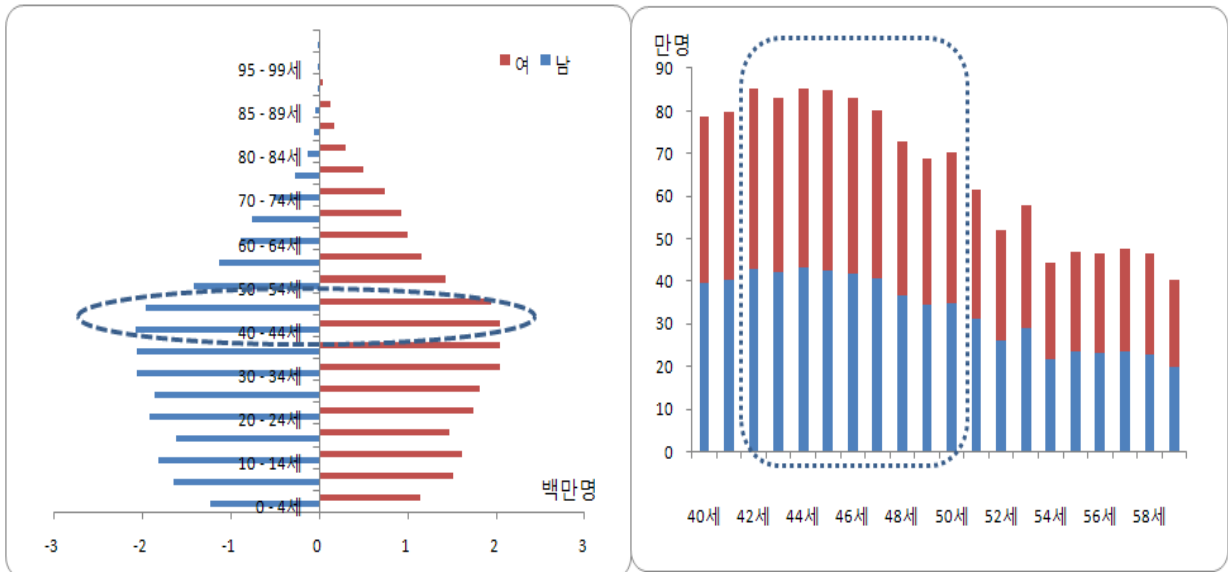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

- 대량퇴직이 한국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기업-국가의 역할을 제언
 - 현재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노동, 자산, 재정 부문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부문별 대응방안을 마련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정부 및 기업이 담당해야 할 각각의 역할을 제시

베이비붐 세대는 약 714만 명 수준

-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통상적으로 1955년에서 1963년의 9년간 출생한 약 713.8만 명의 세대를 지칭³⁾
 - 베이비붐 세대란 출산율이 급등한 특정 기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
 - 전 세계적으로도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많은 수의 베이비부머가 출생
 - 2010년 기준 총인구의 약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
 - 분류 기준에 따라 한 해 평균 90만 명 이상 출생한 1974년생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963년생까지를 지칭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주: 2005년 총인구조사 당시 베이비붐 세대는 만 42~50세에 해당
 자료: 통계청 (2005). “총인구조사.”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가 취업 상태

- 베이비붐 세대의 대부분은 취업 상태에 있으나 자발적·비자발적 은퇴 등으로 인해 취업자 수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

3) 총인구조사, 노동패널 등 통계의 종류에 따라 약 10만~20만 명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 노동패널은 베이비붐 세대 경제활동 인구를 2009년 기준으로 약 724.5만 명으로 추정
- 이 중 취업자는 549만 명이며 고용률은 75.8%에 달함
-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임시직·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
 - 상용근로자 수는 189만 명으로 동세대 취업자의 26.1%를 차지
 - 임시직·일용직, 고용주·자영자 수는 각각 187만 명, 185만 명이며 합산할 경우 동 세대의 약 50%를 차지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족

-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유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는 은퇴 이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노출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은 전체 평균보다 약 10%가 많은 3억 1,063억 원이지만 주요국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
 - 미국(약 80만 달러), 일본(약 5,556만 엔)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음⁴⁾
 - 총 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76% 이상을 차지하는 등 유사시 현금 확보 여력이 떨어져 질병이나 기타 위급 상황에 취약
 - 노후생활 자급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퇴직연금도 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소득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
 - 연금소득대체율⁵⁾은 42.1%로 OECD 평균인 68.4%에 비해 턱없이 낮고 퇴직연금도 아직 도입 단계
 - 은퇴 이후 공적 연금을 수급하기까지 약 5~10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

4) 미국은 45~64세 평균, 일본은 60대 기준 (V장의 해외사례 참조)

5) 연금소득을 은퇴 전 소득으로 나눈 수치로서 100에 가까울수록 은퇴 전과 다름없는 수준의 생활이 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前·後 세대와 구별되는 특징이 다수

- 베이비붐 세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사회적 격변 속에서 ‘성장동력’의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사회적 책임과 함께 가정에 대한 책임까지 성실히 수행
 - 직장에서는 일을 최우선시하면서도 집안에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 등에 충실
 - 최근의 세대변화를 수용하여 은퇴 후에도 경제적, 문화적 자립을 희망하는 등 자립의식이 강한 편
 - 노후에 자식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이 확고하며 일에 대한 의욕이 다른 세대보다 강함
 - 그러나 은퇴 이후 경제적, 문화적 박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

以前 세대와 구별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사회적 역할	· 선진화로 인한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성장에 따른 진통까지 목격하고 체험한 세대 ·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서 무엇보다 일을 최우선시하며 휴일근무, 초과근무 등을 당연시
세대 관계	· 소비 지출 중 부모 생활비, 자녀 교육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며 자녀 결혼비용 등도 자신이 책임질 몫으로 인식 · 반면, 자신에 대한 배우자와 자식의 의무는 상대적으로 덜 기대하는 편이어서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베이비붐 세대가 다수
건강 인식	·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전체 인구 대비 다소 높은 편이며 향후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높은 편 · 특히 2009년 전후 경제위기 기간 중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체관리뿐 아니라 ‘마음 관리’에도 주의할 필요성을 인식
미래 전망	·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 의식’에 관해 ‘중간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가구주 대비 높은 편 · 앞으로 소득 수준에 대해 대체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연금 이외에 마땅한 노후 준비는 없는 실정
對사회 기대	· 사회적 활동을 위한 자신의 체력과 활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확신하며 사회·심리적 위로의 시선보다는 스스로 경제·실리적 혜택 및 안정을 추구
은퇴 후 거주	· 현재 보유한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이며 만족스러운 처분이 어려우므로 은퇴 이후에도 현 거주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문화적 특성	· 급속한 선진화와 문화적 풍요를 만끽한 세대인 만큼 부유층 베이비붐 세대를 제외한 상당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 ‘금전 자원 축소’와 ‘증대된 문화 욕구’ 간 괴리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

II. 노동시장 파급효과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나 고령자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

□ 약 714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 정년을 앞둔 사람은 최대 140만~150만 명으로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

- 정년퇴직을 통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상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들에 국한
 - 상용근로자 수는 2009년 189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26.1%를 차지
 - 이 중 2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은 모두 151.6만 명이며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141.5만 명 수준
- 베이비붐 세대 140만~150만 명이 정년을 맞아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자 수는 매년 14만~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연평균 퇴직 대상자는 10년 앞선 1945~1954년생의 2배 규모이나, 전체 취업자의 2.7% 수준에 그침

□ 실제 노동시장을 떠나는 수는 이보다 더 축소될 수 있어 노동력의 양적인 감소폭은 제한적이나, 고령자 재취업 문제가 중장기 과제로 부상

- 재취업 등을 통해 근로현장으로 U턴하는 사람을 고려할 경우 실제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수는 이보다 축소될 것
 -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일시적으로 떠나더라도 다른 고용형태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큰 상황⁶⁾
- 비정규직 증가, 고령자 일자리 부족, 청년실업 악화 등 동 세대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 기존 고용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 고령자 창업 지원 등 고령자 재취업 촉진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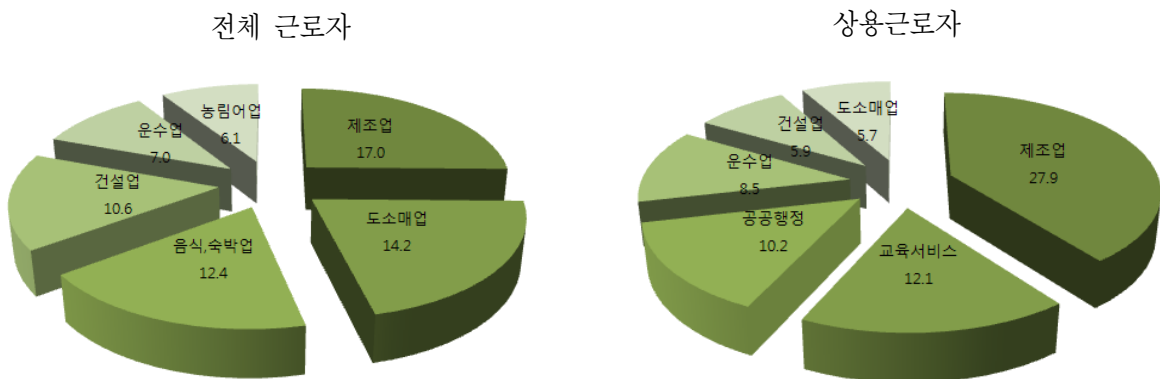
6) 동 세대가 가족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높고,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가운데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통계청 의식조사에 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대응책을 마련

- 베이비붐 세대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은퇴로 인한 노동력의 양적 감소 및 질적 저하의 문제가 심각
 - 동 세대의 54.3%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에 집중
 - 특히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약 27.9%가 제조업에 집중
 - 다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자영업 비중이 높고 건설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서 정년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할 가능성

업종별 베이비붐 세대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인력의 양적·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2020년 이후의 양적 감소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구축
 - 대부분 고졸 학력인 제조업 기능 인력의 경우, 고령화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으며 이들이 은퇴할 경우 숙련단절이 우려
 -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해 개개인의 학습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노동력의 질적 유지를 위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
 - 10년 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동력 감소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의 확대, 점진적 정년연령 제고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

Ⅲ. 자산시장 파급효과

은퇴 이후 보유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은 제한적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소득보전을 위해 보유주식을 일시에 대량으로 처분하거나,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
 - 가구주 연령과 주식 보유 여부 및 보유금액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주 가구 중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비중은 12.9%에 불과하며 이들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속함
 - 주식보유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주의 연령대별 주식보유 비중은 역U자형인 반면, 평균 주식보유 금액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증가
 -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주식보유가구의 소득 및 자산 총액은 주식미보유가구를 크게 상회
 - 가구주 나이가 60세 이상인 주식보유가구의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총액은 주식미보유가구보다 각각 3.7배, 2.6배나 높음
 - 주식을 보유한 계층은 나이가 들어도 주식을 처분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개인투자자의 연령대별 주식시장 참여율은 역U자형을 나타내고 있으나, 50대 이상의 주식시장 참여율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
 - 개인투자자의 주식보유 비중은 50대를 넘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40대 이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
- 중장기적으로 볼 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고령화는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 및 새로운 금융 수요계층 출현의 기회
 -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각종 펀드, 연금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인 하락 압력에 직면

- 가계 재무상황, 주택보유 성향 및 주택수요를 감안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부채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 가구 중 6% 정도만이 주택처분 가능성에 노출(전체 가구의 1.2~1.3%에 해당)
 - 연간 소득 대비 순금융 부채가 2배 이상인 가구를 가계 재무상황 악화 시 주택처분 가능성이 높은 가구로 간주해 추정
 - 60대 초반까지도 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요는 고령층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일정 연령이 넘어서도 주택보유 성향이 지속되는 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즉각적인 주택자산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
 -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퇴직 시점이 50대 중반임을 감안할 때, 퇴직 이후 곧바로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
 - 한국의 주택가격은 인구구조 변화보다는 경기의 부침, 소득 및 주택공급 여건, 정부 정책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
 - 임금과 건물건설투자는 주택가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인구구조와 관련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고령인구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감소에 따른 주택 처분 압력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
 -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을 중장기적으로 확충
 - 은퇴 이후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역모기지론 등 주택 관련 금융상품의 활성화를 유도
 - 역모기지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

IV. 국가재정 파급효과

보건 및 복지 지출은 늘지만 향후 10년간 증가폭은 제한적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고령자 복지 관련 부문에서 정부 지출이 증대
 -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연령에 근접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축소되면서 재정 부담이 되는 이전소득 의존이 심화⁷⁾
 - 이로 인해 고령자가 수혜를 많이 받는 연금, 보건 및 복지 관련 부문에서 정부 지출이 증대할 가능성
 -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 수혜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만성질환 비중이 높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을 증대
- 다만 향후 10년간 공공지출의 총 증가폭은 제한적일 가능성
 - 고령자 비중 증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9개 공공사업을 선별하여 은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추정⁸⁾한 결과, 고령자 비중 증가에 따른 공공 지출 증가 규모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
 - GDP 대비 공공 지출 증가 규모: 5.9%(2009년) → 7.3%(2018년)
 - GDP 대비 보건 지출도 동 기간 3.4%에서 4.0%로 0.6%p 증가에 그칠 전망

고령자 관련 9개 사업

구분	사업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보건사업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생활안정 ⁹⁾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11.17.).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지식경제·보건복지가족부).”

7) 동 세대는 2018년까지 은퇴 연령인 55세를 맞아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소득도 점차 하락
 8) 4개 공적연금, 3개 보건사업, 2개 복지사업 총지출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0~2018년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추계
 9) 보건복지부 관할예산 중 ‘노인생활안정’으로 분류되는 사업(대한민국정부(2009.11.17.).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 (지식경제·보건복지가족부).”)

정부 지출 증대로 인한 성장률 하락폭도 제한적

- GDP 대비 고령자 관련 공공 지출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부담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
 -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9%에서 2018년 2.6%로, 보건 지출은 3.4%에서 4.0%로, 노인복지 지출은 0.59%에서 0.7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건 지출 증대가 총지출 증대의 54.7%, 연금 지출 증대가 35.7%를 차지
 - 연금 지출이 연 10.9%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이로 인해 고령자 관련 재정 지출 중 연금 지출 비중이 2009년 32.1%에서 35.7%로 증대
 - 재정 지출 증대로 인한 2010~2018년 성장률 하락폭은 0.04~0.31%p로 연평균 약 0.15%p에 그칠 가능성¹⁰⁾
 - 통합재정 지출을 2009년 기준 GDP 대비 24%에서 2%만 추가 투입하면 재정 지출 확대에 의한 국가채무의 증가분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¹¹⁾

고령층 진입 이후의 복지 지출의 급증에 대비

-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을 활용해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
 - 정부 부담 증대 및 성장률 하락 등의 단기적인 파급효과는 작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고령층에 진입할 경우 복지 지출의 급증이 우려
 - 고령층 진입 이후 고용률 및 소득 하락 등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잔존
 -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을 활용한 한시적 지원,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지출 자체를 줄이는 전략을 병행
 - 55세 정년으로 인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연금, 거주 등 재정 지원을 강화

10) OECD 국가의 고령자 관련 지출과 성장률 간의 관계를 적용해 분석

11) 국민부담률을 GDP 대비 연 0.5%p만 증가시키면 재정 지출 확대를 조달할 재원 마련이 가능

V. 해외 사례

일본: 노동력 감소 문제에 정년 연장으로 대응

□ 단카이(團塊) 세대가 2012년 정년연령에 달하면서 퇴직이 본격화될 전망

- 단카이 세대는 1947~1949년 종전 이후 1차 베이비붐 기간에 태어난 약 664만 명을 지칭하며 2009년 기준 총인구(1억 2,751만 명)의 5.21%를 차지
- 만형 격인 62세(1947년생) 근로자가 2012년에 일반적인 일본기업의 정년 연령인 65세에 달하면서 은퇴하기 시작
 - 2012~2014년이라는 단기간에 걸쳐 약 739만 명에 달하는 단카이 세대 취업자가 정년을 맞아 직장을 떠나게 될 전망
- 이로 인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7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약 44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전망

□ 일본정부는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기업을 상대로 고령자 재고용을 유도¹²⁾

- 2004년 12월 「고용안정법(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2006년 4월부터 이를 시행
 -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주는 정년 65세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제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
- 정년제가 있는 사업소 비중이 2004년 74.4%에서 2008년 73.5%로 감소하는 등 일정의 성과를 시현
 - 동 기간 정년 연령 60세의 사업체 비중은 88.3%에서 82.0%로 축소된 반면, 65세 이상을 택한 사업체 비중은 8.3%에서 14.8%로 확대

12) 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의 은퇴로 인한 노동력 감소 및 숙련 단절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동 세대가 은퇴 이후 곧바로 고령층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고령화 문제와도 연결

미국: 퇴직연금을 육성해 개인 책임의 노후준비를 유도

- 미국은 법적인 은퇴 연령이 없고 노동력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
 -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6~1964년 기간에 태어난 약 7,585만 명을 지칭하며 2005년 6월 기준으로 약 7,82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최고령인 1946년생이 2008년 연금 수급연령인 62세에 달하면서 은퇴를 시작했지만 은퇴 이후에도 오랫동안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
 - 1986년 「고령자보호법」을 통해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
 - 생산가능인구가 2008년 기준 약 1억 5,400만 명에서 2016년 1억 6,4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은퇴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개인이 스스로 노후생활을 책임지도록 유도하고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일반적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은퇴는 오히려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
 - 노동력 감소, 자산시장 가격하락 압력의 증대 가능성이 희박
 - 개인 금융자산이 풍부하고 연금소득대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노후준비 상황도 한국과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 퇴직연금을 집중 육성하는 등 기업이 은퇴 설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가 이를 측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 2009년 6월 말 기준 미국 퇴직연금의 총 자산은 14.4조 달러로 가계 금융자산의 약 34%를 차지 아래 문장 주술구조 확인 요망
 - 정부는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교육 강화, 세대 간 유대감 증진, 소외계층 지원 등의 활동에 고령자를 적극 활용

VI. 정책 제언

은퇴 이후(Post-Retire)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

- 노동, 자산, 재정의 3개 부문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은퇴의 충격이 시차를 두고 고령화 문제와 동반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정책의 과잉대응(Overkill)¹³⁾에 유의하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되는 시점에 대비해 점진적으로 정년 연장 및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

구분	은퇴 쇼크(기존 논조)	분석 결과	대응방향
노동	- 노동력 공급난 심화 - 기능/노하우 손실 및 질적 저하	- 노동력 공급 감소 효과 미미 · 은퇴자 수 연평균 15만 명 이하 ·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 증대 - 일부에서 기능/노하우 손실 · 기능 승계 시스템 미비	· 기업자율 선택 · 점진적인 정년 연장(일본식)
자산	- 매도우위(가치 하락) - 부동산 가격붕괴론 (melt down)	- 자산 지속 보유 가능성 高 · 부유층 베이비붐 세대 집중 보유 · 매도 가능성이 높은 층에서 보유 비중이 낮은 경향 - 주택 보유 지속 · 가구원 수 감소, 이민 증가	· 부동산 정책 일관성 유지 (한국 특수) · 역모기지 촉진
재정	- 사회보장비용 급상승 - 재정 건전성 악화	- 비용 상승 미미 (GDP 1.4%p) - 재정에 미치는 효과 미약 · 성장률 하락 연평균 약 0.15%p	· 연금 수급연령 제고 · 수급액 삭감 (일본식)
개인	- 고령 빈곤층 급증 - 고령 실업자 증가 (실업률 상승)	- 미취업 고령층의 취약계층 전략 · 의료/개호 비용 증가 - 고령 빈곤층(실업자) 증가 위험	· 개인책임 강조 · 고령일자리 창출 (미국식)

13) 최근 Y2K, 신종플루 등 불확실한 공포로 과잉대응(Overkill)을 함으로써 사회적 피해가 커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ex. 검은 백조: Black Swan, 인디언 추장의 딜레마: Dilemma of an Indian Chief).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문제도 충격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정책의 과잉대응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노동: 단기적으로는 숙련단절, 장기적으로는 양적 감소에 대비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숙련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초점
 -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탈피해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 근속연수 대신 직무 능력의 향상에 따라 임금이 오르도록 함으로써 생산직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학습 인센티브 강화하도록 유도
 - 직능자격 취득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생산 현장의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도록 유도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직능자격지표를 활용해 후세대에게 필요한 숙련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유도
 - 정부는 물론 학교와 기업에서도 퇴직자들을 다시 노동현장으로 불러들이 이들이 가진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기능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
 -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각 지방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하에 퇴직 단카이 세대와 지방 공업고등학교를 연결하는 사업 등을 전개¹⁴⁾
-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양적 확충에 주력
 - 베이비붐 세대가 집중되어 있는 제조현장에서는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
 - 지금까지 공공부문과 금융권의 사무직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온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제조 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임금피크제도는 정년퇴직 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고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

14) 日本 經濟産業省 (2007). "地域經濟回生のための緊急プログラム".

생산현장의 학습 조직화가 필요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단기적으로 양적 감소보다는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더 크므로 생산현장의 학습조직화를 통해 대응
 - 근로자의 자기개발욕구를 저하시키는 현행 연공 중심의 평가보상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직능자격제도’의 도입을 고려
 - 직능자격제도는 근속연수 대신 직무능력에 따라 임금 인상과 승진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도입 시 자발적인 학습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효과
 - 노사협력을 통해 평가보상의 기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제도 정착의 관건
 - 직능자격 취득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생산현장의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시키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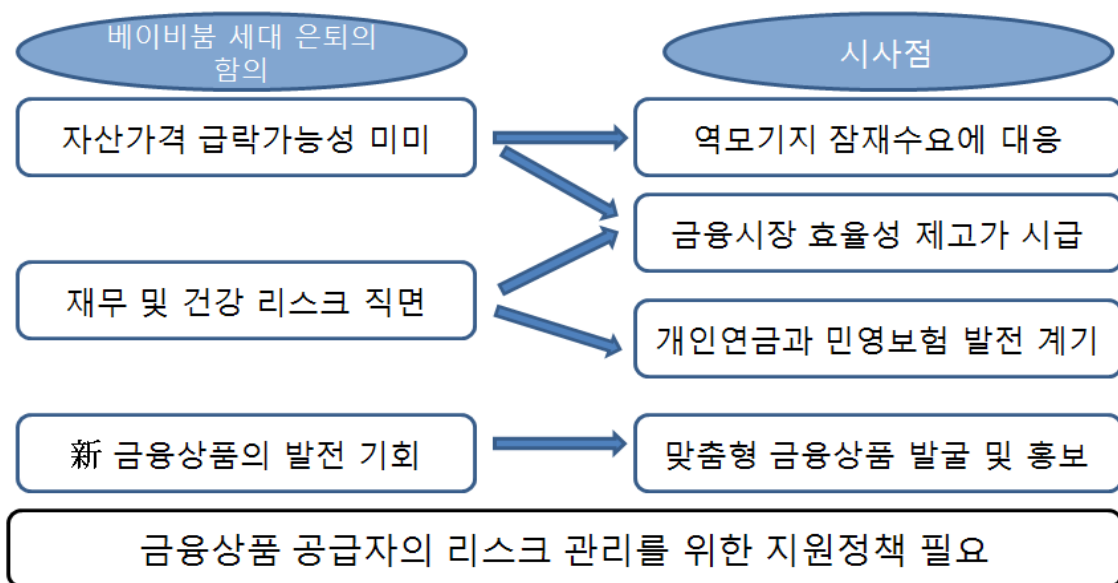
정년 연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

- 정년 연장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기업이 자사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의 법적 강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등 협상에 난항
 -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해 정년 연장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증가, 인사적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
 - 현 인사제도하에서 임금 및 고용의 유연화 없이 기업에게 정년 연장을 강제할 경우 신규채용 감소, 인사적체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 정년 연장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신규채용 감소 및 청년취업난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가 은퇴 연령에 달하는 2020년까지 법적 정년 연령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

자산(금융):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기회로 활용

- 은퇴로 인한 자산 가격의 급락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은퇴를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및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재무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이로 인해 주택과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낮음
 - 재무상황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60대까지도 주택수요가 지속
 - 주식의 경우도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기보다 유지하는 경향이 많으며, 주식을 처분할 유인도 적을 것으로 예상
 - 한편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재무 및 건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新금융상품 출시 및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이 필요
 - 개인연금, 기업연금(퇴직연금), 민영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역모기지 등에 대한 잠재수요도 증가
 -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금 예상규모가 38.6조 원에 달해 기존 금융상품의 발전과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래를 견인할 동력으로 작용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함의와 부문별 시사점



자산(부동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처분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

- 가계 재무상황과 주택보유 성향 등을 감안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전망
 -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고령인구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감소에 따른 주택 처분 압력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주택 처분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역모기지론 등 주택 관련 금융 신상품의 출시를 활성화
 -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부동산 자산의 일시적인 처분 가능성을 낮추는 수단으로 역모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 역모기지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역모기지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제도적 정비가 선행될 필요
 - 역모기지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가입자와 금융기관을 함께 보호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유도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로 인해 오피스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오피스에 대한 투자 유인책도 마련
 - 사무직 근로자의 감소는 오피스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오피스 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
 - 특히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오피스의 수급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
 - 오피스를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객관화하여 투자처로서의 오피스 매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
 -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업용부동산 지수 및 거래 DB를 구축함으로써 오피스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제고
 - 최근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재정: 재정 활용과 사회보험 지출의 억제 병행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경미하지만, 이들이 고령층에 편입되는 2020년 이후에는 재정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위험
 - 202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연 0.5%p 상승하나 2020~2040년간 연 0.8%p 이상 상승하여 재정 부담의 급격한 확대가 우려
 - 2018년에는 55세 이상 인구가 29.5%, 65세 이상 인구가 14.3%였으나 2050년에는 각각 53.7%, 38.2%에 달하여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
-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을 활용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령자 빈곤을 해소하는 데 정부 정책을 집중
 - 현재 10~20세 연령층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2020~2040년에 노동의 주요 공급자가 되므로 이들의 1인당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
 -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이 있으므로 은퇴 준비가 미비한 저소득층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 국민기초생활보상제도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의무자 범주에서 제외하는 정책도 검토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 부담 심화에 대응
 - 연금 및 보건 지출 증대가 고령자 관련 지출 증대를 주도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
 - 사회보험 가입자는 소득기반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용한 소득기반인 주택연금 및 퇴직연금을 확충하고 사회보험 의존도를 축소
 - 공공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수령한 이후에는 수급기간에 반비례하도록 조정하고, 건강보험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의료 서비스 남용을 억제

I. 서론

1. 연구배경 및 의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정년퇴직 연령에 진입

- 베이비붐 세대의 만형 격인 1955년생들이 2010년에 기업의 일반적 정년 연령인 만 55세에 달함
- 이미 직장을 떠난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 대다수의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근로 현장에서 이탈할 전망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조기 퇴직제(명예퇴직)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를 방출¹⁵⁾

□ 향후 약 20년간 ‘베이비붐 세대 대량퇴직의 시대’가 지속될 전망

- 2010년부터 약 55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기업의 근로현장을 떠나게 되는 이른바 ‘썰물 은퇴’에 대한 우려가 확산
 -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수는 약 549.1만 명 수준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전망
 - 2020년부터는 자녀 세대인 제2차 베이비붐 세대¹⁶⁾도 은퇴 대열에 합류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최근 한국사회 전반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

15) 2009년 KT가 사상 최대 규모인 5,992명의 명예퇴직을 실시했으며, 신한은행, 농협 등도 시행

16)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4~1974년생(1,089만 명)을 지칭하며 2010년 현재 36~46세에 해당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움직임이 보이면서 언론과 학계 등 사회 각지에서 소위 ‘썰물 은퇴’에 대한 우려가 확산
 - 노동력 규모 감소, 자산시장의 수급 악화,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탄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부동산 시장 수급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부동산 거품 붕괴론(melt down)’까지 등장
- 거시 경제적 측면 외에도 은퇴자 개인의 노후생활 문제, 고령 빈곤층 확대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 등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
-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노후대비 수준이 떨어져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
 - 보험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개발한 노후대비지표에서도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쳐 노후준비가 취약¹⁷⁾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 빈곤층의 증가로 현역 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세대 간 갈등 확대에 의한 사회적 마찰 위험성도 증가할 소지

① 노동력 감소

-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으로 인한 노동력의 양적 감소로 산업현장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베이비붐 세대 714만 명 중 약 500만 명에 가까운 취업자가 근로현장을 떠나게 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는 주장
 -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수는 549.1만 명 수준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도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를 가중

17) 노후대비지수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은 47로 OECD 평균 100을 하회하고, 소득대체율도 한국은 42.1%로 주요 선진국의 70% 수준 (“베이비붐 세대 은퇴쇼크 시작됐다.” (2010. 2. 2.). 『매일경제신문』.)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추세의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잠재 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¹⁸⁾
- 특히 숙련도가 요구되는 조선, 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 현장에서는 숙련 노동자 수의 급감으로 기업 경쟁력까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세계 최강 조선국이었던 일본도 단카이(團塊)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기능 및 노하우 손실로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에 근거

② 자산 가격 급락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전체 가구의 총 자산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주 가구가 대량퇴직할 경우 수급 악화로 인해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주장
- 단기적인 충격을 피한다 하더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통한 자산관리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 은퇴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공급 증가로 인해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
- 지난 20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였던 주택수요 주 연령층(35~54세)의 감소도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중

③ 재정 부담 증가

- 은퇴로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소득이 축소되면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전 소득 의존도가 제고되는 등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18) 잠재성장률은 1986~1990년에 10.1%, 1991~1995년 7.5%, 1996~2000년 5.4%, 2001~2005년 5.1%, 2006~2009년 3.0%로 추정되며,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데는 한국사회에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력 공급이 둔화됐고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투입도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지적(대한상공회의소(2010).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 베이비붐 세대는 2010~2018년에 걸쳐서 은퇴 연령인 55세를 맞이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출되고 소득도 점차 하락
- 이로 인해 고령자가 수혜를 많이 받는 연금, 보건 및 복지 관련 지출이 증대한다는 주장
 - 동 세대는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 수혜자격이 있고 만성질환 비중도 높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인식

사회 전반에 걸친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존재

- 대량퇴직에 따른 일정 정도의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기존의 문헌과 언론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존재
 - 대다수 기존 문헌의 논조가 베이비붐 세대 전체가 일시에 퇴직을 하는 듯한 인상을 풍김으로써 심각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 실제 퇴직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일정 기간 내에 퇴직할 가능성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수는 제한적
 - 일례로 전체 베이비붐 세대 714만 명 중 퇴직 대상이 되는 상용직 근로자 수는 약 189만 명으로 26.1% 수준¹⁹⁾
- 은퇴 당사자가 곧바로 고령인구에 편입된다고 인식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혼동하는 경우도 다수²⁰⁾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곧바로 고령화 인구에 편입된다고 인식함으로써 대량퇴직으로 인한 파급효과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혼동
 - 하지만 55세 은퇴 이후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에 포함되기까지 약 10년의 여유 기간이 존재
 - 대응 여력을 활용하고 중장기적 측면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

19) 이들 또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퇴직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시장을 완전히 이탈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할 때 은퇴자 수는 더욱 감소

20) “베이비붐 세대 은퇴쇼크 시작됐다.” (2010. 2. 2.). 『매일경제신문』.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인도 다수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도 다수
 - 은퇴와 더불어 생기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소비로 전환하면서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
 - 한국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의 고령층 은퇴자에 비해 소비 의욕이 왕성한 편이며 자아성취를 위해서 소비를 늘릴 여력이 충분
 - 고령자를 대상으로 신산업 창출 및 기업 마케팅을 활성화
 - 실버산업 등 고령자 대상의 신산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창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제품 출시도 경제활력 증대에 기여

파급효과 개념도



주: 대량퇴직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해 작성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실질 GDP의 확대 및 감소 효과가 동시에 실현되므로 부정적인 영향은 일정 정도 희석될 가능성

- 대량퇴직으로 노동력에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청년실업 문제도 완화될 가능성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축소로 설비투자가 증가하며, 고령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신상품 및 신산업이 등장하는 등 기업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
- 부동산의 경우 수요 감소로 자산 가격 하락 압력이 제기될 수 있지만 가구 수 증가, 이민 등의 신규 수요 증가가 가격 급락을 억제

부정적 효과의 현실화 가능성을 진단할 필요

- 부정적 효과가 현실화될 것인지의 여부 및 그 강도를 추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과장된 불안감을 완화시킬 필요
 - 현재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대량퇴직에 대한 공포는 부정적 효과가 일시에 현실화될 경우를 상정
 - 하지만 실제로 부정적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를 동반하므로 효과가 반감되거나 희석될 여지는 충분
- 부정적 효과의 항목별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
 - 노동시장: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대량퇴직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노동력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인지를 추정
 - 자산시장: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보유자산을 처분할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자산 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인지를 추정
 - 특히 부동산 가격의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급 증대와 신수요 창출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엄밀한 분석이 필요
 - 국가재정: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사회복지비용이 얼마나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 악화될 것인지를 가늠

장 · 단기 대응방안을 함께 고려

- 대량퇴직이 한국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기업-국가의 역할을 제언
 - 현재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노동, 자산, 재정 부문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각 부문별로 장 · 단기 대응방안을 제시
 - 과잉대응을 억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대응 능력을 2020년 이후의 급작스러운 고령화 인구 증대에 따른 경제 ·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활용
 - 한국경제가 ‘대량 은퇴-고령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충격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패키지화된 정책을 도출
 -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은퇴 이후 이어질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조합을 제안

베이비붐 세대 연구의 특징

- ▷ 베이비붐 세대와 관련된 연구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행동 방향을 예측하는 연구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행동 방식을 추정하는 데 있어 과거 세대가 보여준 행동 패턴은 중요한 참고 자료
 - 하지만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과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일지를 추측하는 것이 중요
 - 확연히 구분되는 세대 특성이 존재할 경우 과거 세대의 행동 방식만으로는 예측이 불가능
- ▷ 고령화 연구와 차별화될 필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은퇴 이후 곧 진입하게 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은퇴 이후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심리적 불안 위협에 노출되면서 고령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고령화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
 - 202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되고 이들이 고령화 인구에 포함될 경우, 고령화에 따른 경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화될 소지
 - 대량퇴직과 고령화 문제는 약 10년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발생하므로 두 문제 사이에 존재하는 시차를 활용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악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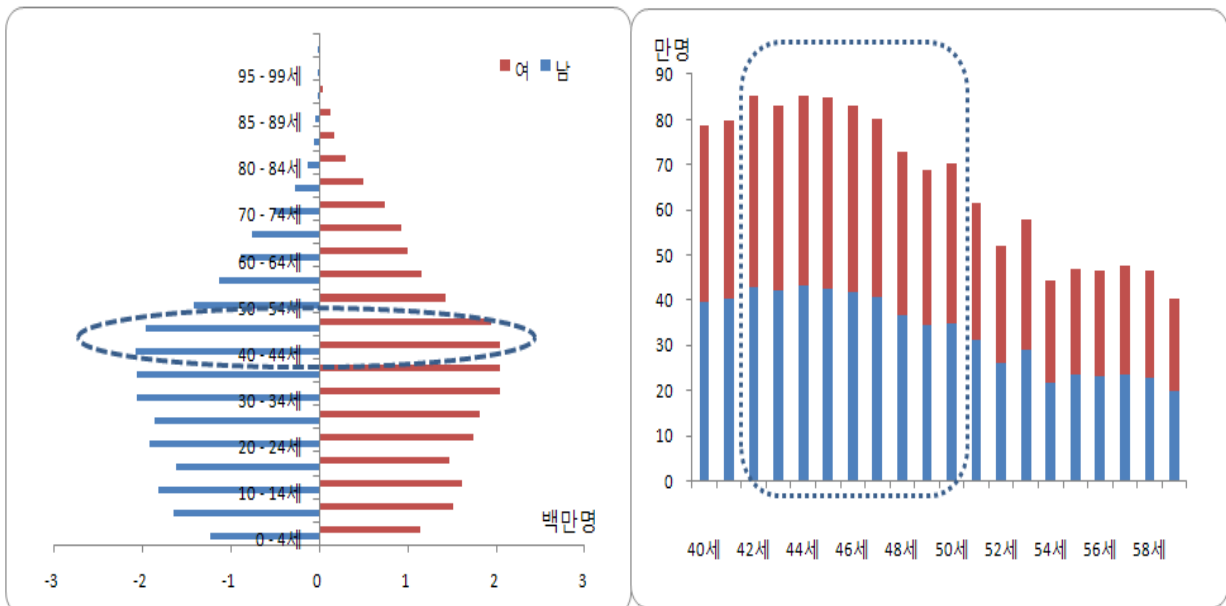
2.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특징

1) 베이비붐 세대 현황

약 714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존재

-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통상적으로 1955년에서 1963년의 9년간 출생한 약 713.8만 명의 세대를 지칭
 - 베이비붐 세대란 출산율이 급등한 특정 기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며, 세계적으로도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많은 수의 베이비붐 세대가 출생
 -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기준으로 총인구의 약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
 - 6.25 전쟁이 종결되고 한국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베이비붐이 촉발되었고, 이후 산아제한 정책의 실시로 베이비붐이 종식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주: 2005년 총인구조사 당시 베이비붐 세대는 42~50세에 해당

자료: 통계청 (2005). “총인구조사.”

-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2차 대전 종결 이후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장기호황의 기대로 인해 베이비붐이 조성
 -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소위 단카이 세대²¹⁾라 불리며 1947~1949년 기간 태어난 약 664만 명을 지칭²²⁾
 -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출생했고 퇴직도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이나 미국과는 차이
 - 미국 베이비붐 세대는 1946~1964년 기간에 태어난 약 7,585만 명을 지칭하며, 2008년을 기준으로 총인구의 25.4%를 차지

각국의 베이비붐 세대

구분	출생연도	총수(만 명)	비중(%)
한국	1955~1963	714	14.6
일본	1947~1949	683	5.2
미국	1945~1955	7,585	25.4

자료: 각국 통계청

대다수가 취업 중이나 그 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

-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는 취업 상태에 있으나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은퇴로 인해 취업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
 - 연령계층별로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을 기준으로 약 724.5만 명으로 추정²³⁾
 -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는 2009년 기준 약 549만 명이고, 고용률은 75.8%를 기록
 - 2007년과 비교하면 약 19.4만 명이 감소한 수치이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21) 단카이(團塊)'란 원래 '뭉쳐 있는 덩어리'라는 뜻으로 소설가 사카이야 다이의 1976년 작 『團塊世代』에 처음 등장한 후 현재 일본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뜻하는 인구사회학적 용어로 정착

22) 시대, 문화적 공통성에 따라 1946~1954년생(1,670만 명)을 광의의 베이비붐 세대로 분류하기도 함

23) 통계 종류에 따라 10만~20만 명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임시직·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
 - 상용근로자 수는 약 189만 명으로 전체 세대의 약 26.1%를 차지
 - 은퇴의 의미를 타의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피고용자로 한정할 경우 상용근로자가 주된 은퇴 대상
 - 임시직·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수는 각각 187만 명과 185만 명으로 이를 합할 경우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약 50%에 해당

풍족하지 못한 자산 등 노후대비가 부족

- 한국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를 대비한 보유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은퇴 이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주요국에 비해 큰 상황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은 전체 가구 평균보다 약 10%가 많은 3억 1,063억 원 수준
 - 그러나 미국과 일본과 비교할 때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
 - 총 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약 76%로 현금 확보 여력이 떨어져 질병이나 기타 위급 상황에 취약
- 노후생활 자급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금도 도입 단계에 있어 은퇴 이후의 소득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
 - 연금소득대체율²⁴⁾은 약 42.1%로 OECD 평균인 68.4%에 비해 턱없이 낮음
 - 노후대비지표에서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²⁵⁾
 - 은퇴 이후 연금 수급까지 5~10년의 공백 기간이 존재

24) 연금소득을 은퇴 전 소득으로 나눈 수치로서 100에 가까울수록 은퇴 전과 다름없는 수준의 생활이 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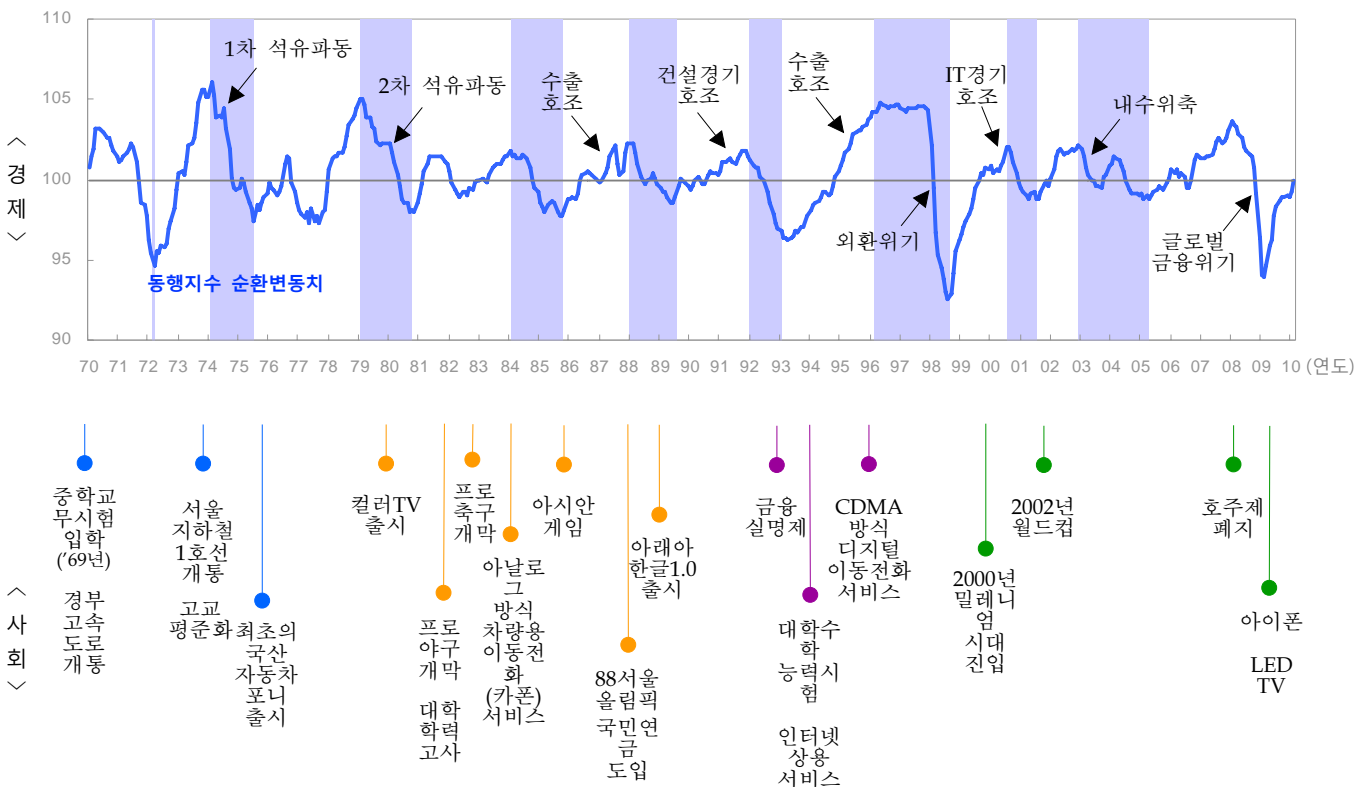
25) 보험연구원 (2008. 6. 9.). “은퇴 이후의 삶과 노후대책.” 보도자료에서는 근로자의 소득 및 소비 패턴을 감안한 적정소득대체율을 65.0~75.6%로 규정

2)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경제·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성장의 중추적 역할 담당

- 선진화로 인한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성장에 따른 진통까지 목격하고 체험한 세대
-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년), 서울 지하철(1974년)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인구 도시 집중화 현상을 체험하며 성장
 -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79달러에서 2009년 1만 7,175달러로 217.4배 증가
- 초등학교 시절을 과밀학급에서 보낸 후 중학교 무시험 입학(1969년), 고교 평준화(1974년) 등을 거치면서 학업환경이 급변
 - 2009년 현재 초등학교 학급 인원이 27.8명인 반면, 1967년 64.8명(1967년)
 - 1979년 대학 진학률은 남자 29.2%, 여자 20.7%로 입시 경쟁이 치열

베이비붐 세대가 겪은 경제·사회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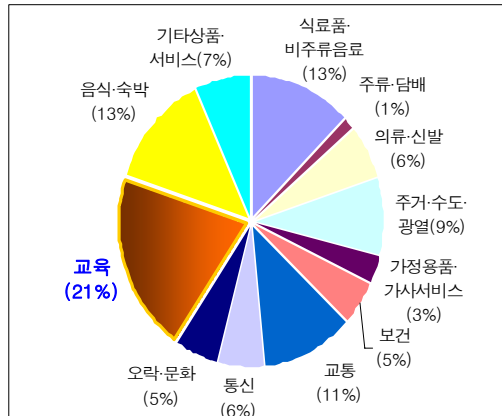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0. 5. 7).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도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서 무엇보다 직장에서의 ‘일’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일과 삶의 불균형을 감내
 - 베이비붐 세대가 40대 초반이었을 무렵에는 주5일제 시행 이전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이 현재 수준을 크게 상회
 - 최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40~44세 남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08년 기준 189시간인데 반해, 동 세대가 40대 초반이었던 2000년에는 209시간

선대로부터의 책임의식과 현대의 세대 변화를 동시에 수용

- 부모 봉양의 의무, 자녀 뒷바라지를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면서도 자신이 책임져야 할 몫으로 인식하는 경향
 -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는 전체 중 68.5%
 -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 중 68.6%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등으로부터 여전히 생활비 도움을 받는 것으로 확인
 - 연령대별 소비 지출 규모를 보면 40~49세가 가장 크며, 소비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자녀 교육비에 할애
 - 2009년 40~49세 월평균 소비 지출은 252.8만 원으로 연령대 중 최고 수준
 - ‘자녀의 대학교육비’에 대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99.1%가, ‘자녀 결혼비용’에 대해서는 90.0%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전체 평균보다 높음
 -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이 과거 경제적 제약으로 누리지 못했던 교육 기회를 자녀에게는 충분히 주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한국의 높은 교육열로 연결
 - 베이비붐 세대의 64.2%가 충분한 교육기회를 누리지 못했고 그중 80%가 경제적 형편이 주된 이유
 - 40~49세의 소비 지출 구조에서 교육비 비중이 약 21%로 최고

40~49세의 소비 지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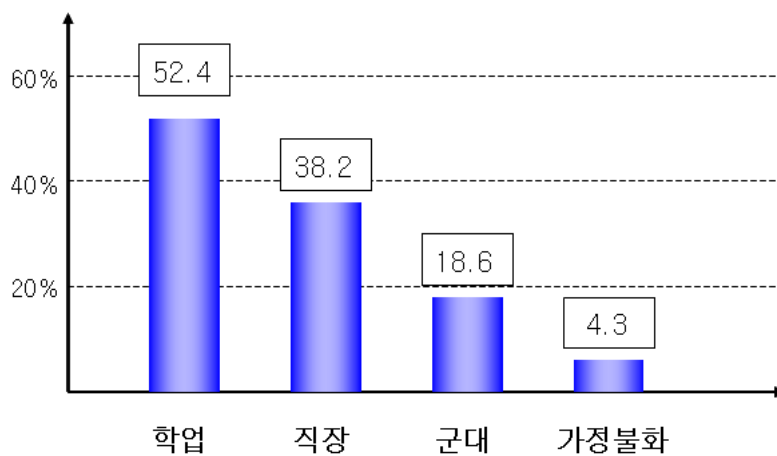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KOSIS.

□ 자신에 대한 배우자와 자식의 의무는 상대적으로 덜 기대하는 편

-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는 25.5%로 전체 가구주(16.5%)보다 높음
- 베이비붐 세대 가구 중 배우자나 미혼자녀의 국외 거주 비율은 12.4%로 전체 가구(11.4%)보다 높으며 이유는 ‘학업’이 52.4%로 가장 큰 비중
-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의 ‘국외’ 거주 비중과 ‘학업’ 때문에 떨어져 사는 비중이 큼

배우자 및 미혼 자녀가 따로 사는 주된 이유 (2008)



주: 복수답 허용

자료: 통계청(2010. 5. 7.).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도자료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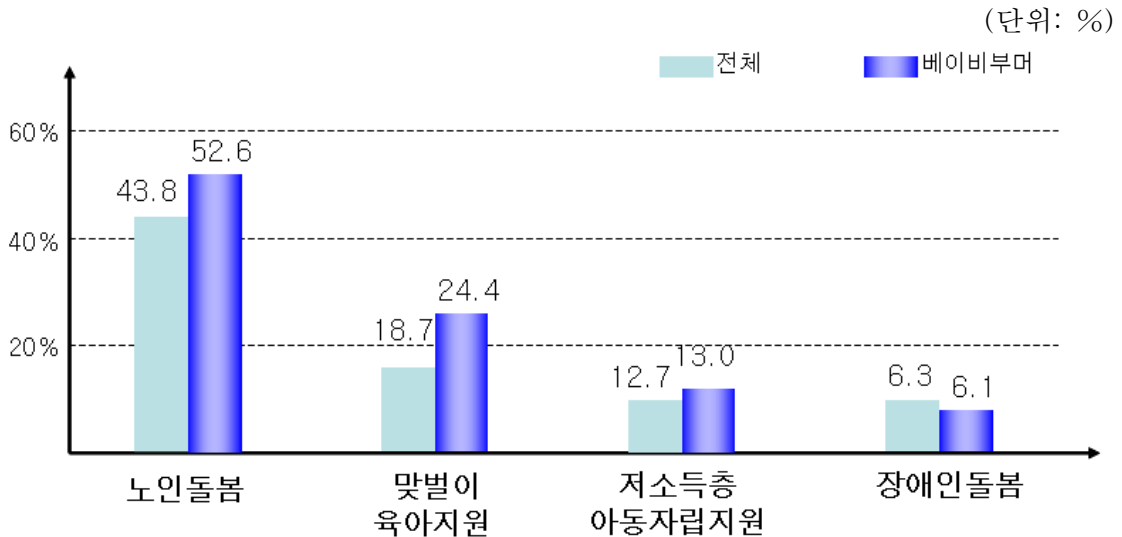
- 심지어 베이비붐 세대의 74.3%가 미취업 성인자녀의 용돈을 부모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감수하는 경향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이 확고

□ 건강 문제로 인해 노후에 자식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평소 건강관리에도 철저

-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15세 이상 전체 인구보다 다소 높은 편
 -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 이상(53.9%)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 건강검진을 하는 비율이 상승
-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장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 서비스는 ‘노인 돌봄 서비스(52.6%)’

향후 증가를 기대하는 주요 복지서비스 (2009)



자료: 통계청(2010. 5. 7.).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도자료를 재구성

□ 2009년 전후 경제위기 기간 중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체 관리뿐 아니라 ‘마음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

- ‘육체와 정신의 균형 있는 건강 추구’가 글로벌 트렌드로 정착

- 사이코패스형 범죄, 유명한 자살 등을 목격하면서 극도의 긴장감, 소외감, 우울증을 방치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²⁶⁾
- 실제로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사망원인을 보면 암이나 뇌졸중과 더불어 ‘자살’이 최고 수준을 기록
- 40대 남녀 사망원인을 보면 2008년 ‘자살’ 순위가 모두 2위로 올라섰을 정도

2000년 주요 사망원인		2008년 주요 사망원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악성신생물(암)	1. 악성신생물(암)	1. 악성신생물(암)	1. 악성신생물(암)
2. 간질환	2. 뇌혈관 질환	2. 자살	2. 자살
3. 운수사고	3. 운수사고	3. 간질환	3. 뇌혈관질환
4. 심장질환	4. 자살	4. 운수사고	4. 운수사고
5. 뇌혈관 질환	5. 심장질환	5. 심장질환	5. 심장질환
6. 자살	6. 간질환	6. 뇌혈관질환	6. 간질환
7. 당뇨병	7. 당뇨병	7. 당뇨병	7. 당뇨병
8. 알콜중독 등	8. 피살	8. 추락사고	8. 피살
9. 추락사고	9. 호흡기 결핵	9. 정신/행동 장애	9. 바이러스 감염
10. 호흡기 결핵	10. 만성하기도질환	10. 바이러스 감염	10. 호흡기 결핵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전국편).”을 토대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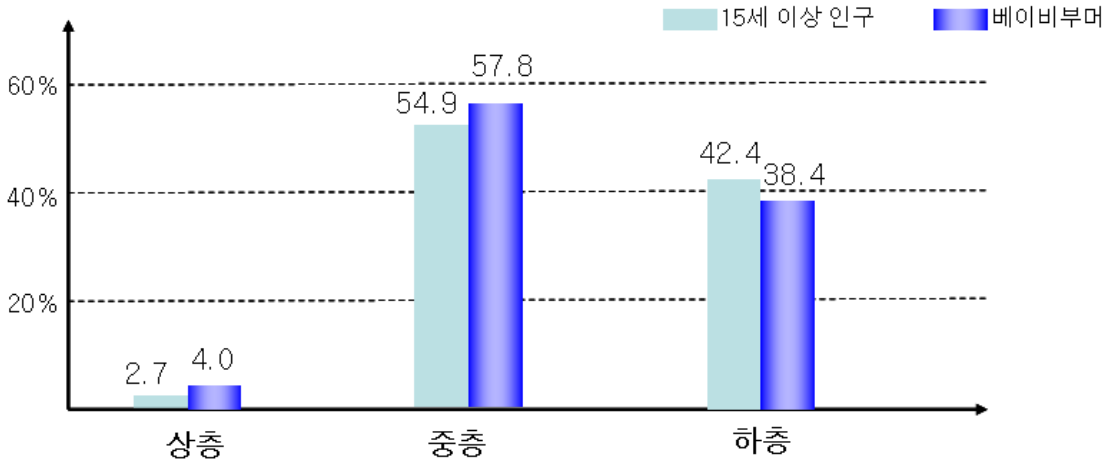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해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

□ 은퇴 이전인 현재 자신이 구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긍정적으로 인식

- 베이비붐 세대 중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class as perceived by respondents)를 ‘중간층 이상(중층+상층)’이라고 생각한 가구주가 61.6%로 높음
- 남자 가구주의 계층의식(중간층 이상 64.4%)이 여자(중간층 이상 48.1%)보다 높음

26) 최근 5년간 국내 항우울제 소비가 52%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7. 26.). “2004~2008년 우울증 환자 항우울증 진료실적”. 보도자료.

가구주의 주관적 계층의식(2009)



자료: 통계청(2010. 5. 7).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도자료를 재구성

□ 2010년 이후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체로 부정적으로 예측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은 부재한 상황

- 2009년 현재 소득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 인구 중 앞으로 소득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0.5%에 불과
- 직업별로는 기능노무(78.4%), 농어업(74.8%), 서비스 판매(73.2%)의 경우 70% 이상이 향후 소득이 같거나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전문관리직은 49.4%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노후 준비가 크게 미흡하며 상당수가 노후 준비로 연금에 의존
- 통계청의 2008~200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4명이 연금을 유일한 노후 준비로 꼽았으며, 심지어 10명 중 2명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

사회·심리적 위로보다 경제·실리적 혜택 및 안정을 기대

□ 사회 전반적인 우려와 달리 사회적 활동을 위한 자신의 체력과 활력이 충분하다고 확신

- 최근 식습관 개선으로 한국인의 ‘체형’이 서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 면을 비교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청소년기와 큰 차이가 없는 편

- 17세 학생의 체력은 1970년대 이후 증가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했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과거 체력이 앞서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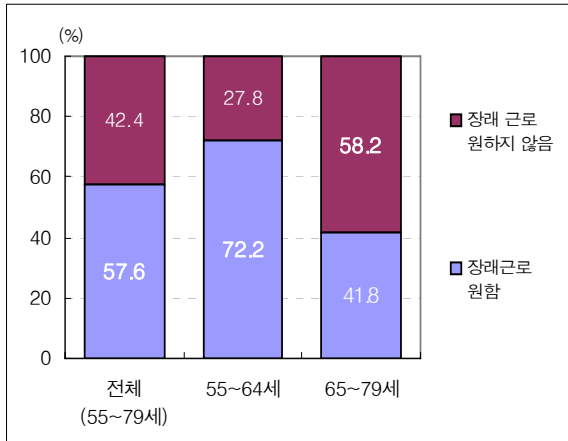
1979년과 2008년의 17세 체력 비교

- ▶ 대표적인 체력검사 항목인 1분당 윗몸일으키기 횟수를 보면 1979년 17세 남자는 44회, 여자는 25.5회, 2008년 남자는 45회, 여자는 29회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 ▶ 제자리멀리뛰기의 경우 1979년 17세 남자는 243.3cm, 여자는 181.6cm, 2008년 남자는 222.8cm, 여자는 155.4cm로 오히려 1979년 청소년의 기록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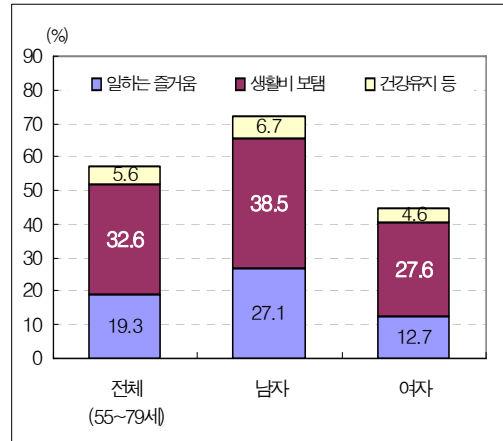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7). 『교육통계연보』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

- 고령층(55~79세) 인구 중에서도 일에 대한 의욕이 특히 높은 세대
 - 향후 취업 희망자는 57.6%인데, 연령구조별로 보면 55~64세 비율이 72.2%를 차지
 - 이들의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남녀 모두 ‘생활비에 보태기 위함’

고령자의 취업의사



장래근로 원하는 고령자의 이유



자료: 통계청, KOSIS.

□ 베이비붐 세대가 느끼는 일상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경제적 문제에 기인

- 베이비붐 세대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65.2%)는 15세 이상 인구(60.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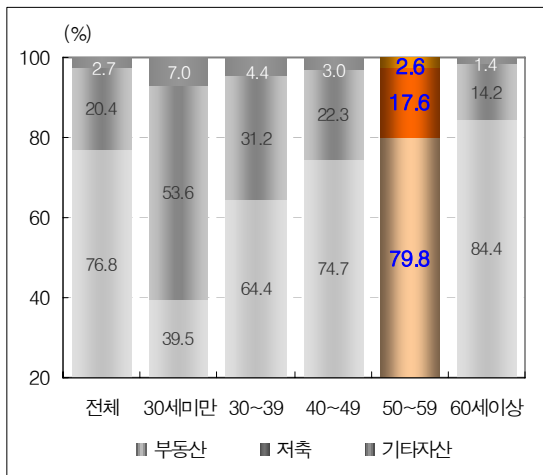
- 부문별로는 직장생활에서 78.9%, 가정생활에서 52.2%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
- 베이비붐 세대의 7.1%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다고 응답
-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52.8%)’이었고, 다음은 ‘가정불화(18.0%)’와 ‘외로움·고독(10.6%)’ 순
- 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가정불화’와 ‘외로움·고독’에 대한 심적 고통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

은퇴 이후에도 현 거주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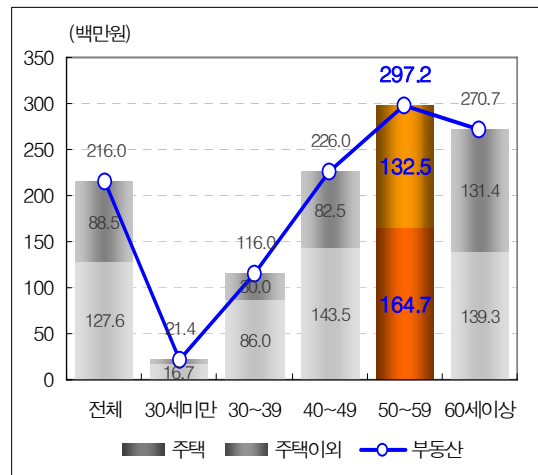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 보유한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

- 부동산 보유액은 2억 9,700만 원 정도이며, 총 자산 중 약 80%를 차지
- 부동산 보유액 중 주택(1억 6,470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5.4%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보유 비중



부동산 자산보유 현황(50~5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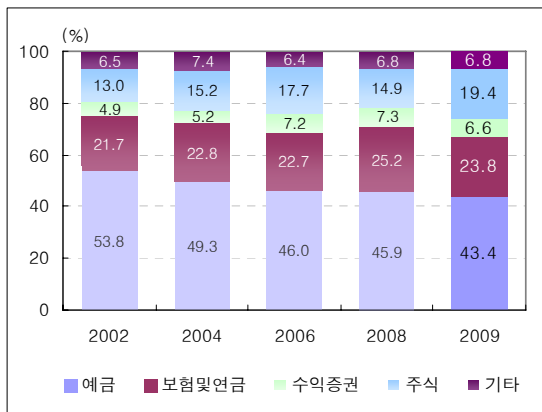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베이비붐 세대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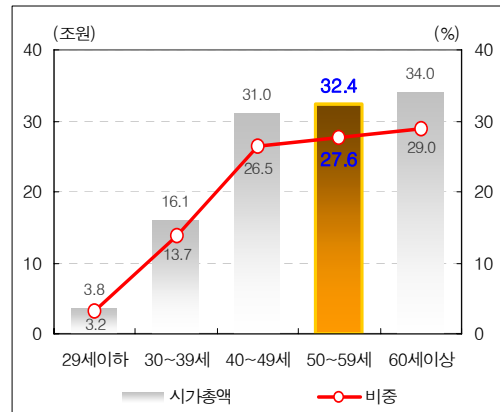
- 역사적으로 한국인에게 있어 부동산은 영토 부족에 대한 강박관념, 현대적인 풍요로운 삶 등 상징적 의미가 강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애착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
- 더욱이 현재 베이비붐 세대들이 소유한 아파트를 소유자가 기대하는 가격 수준으로 처분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
 - 2010년에 1975년생이 만 35세로 생애 첫 주택구입에 나서는 등 30대의 주택 구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인구 수 면에서도 베이비붐 세대 대비 턱없이 낮은 상황
-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금융자산 관리를 통해 운용 수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
 - 현재 개인의 금융자산 추이를 보면 은행예금 등 대부분 유동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식 등의 운용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 특징
 -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의 주식 보유 비중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

개인의 금융자산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연령대별 주식보유 현황(2008년)



자료: 한국거래소(2009). 『KRX Market』, 5월호.

문화적 ‘박탈감 vs. 충족감’에 관한 소득계층별 접근이 필요

- 급속한 선진화와 문화적 풍요를 만끽한 세대인 만큼 은퇴 이후 ‘금전 자원 축소’와 ‘증대된 문화 욕구’ 간 괴리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소지

- 최초의 국산 자동차 ‘포니’ 출시(1976년), 컬러 TV 출시(1980년) 인터넷 상용 서비스(1994년) 등으로 과거 대비 필수 지출 항목이 증가한 셈
 - 40~49세의 2009년 소비 지출 구조를 보면 최고 지출항목인 교육비(21%) 외에도 교통(11%), 통신(6%), 오락·문화(5%)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
 -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대중문화의 확산을 경험하면서 눈높이도 크게 향상된 상태
 - 1982년 서울운동장(동대문운동장)에서 최초로 열린 개막전을 시작으로 프로야구는 1983년 도입된 프로축구와 함께 한국 최고의 스포츠로 부상
 - 1980년대 유입된 팝과 더불어 대학가요제가 인기를 누리면서 <나 어떡해>, <젊은 연인들>, <연가> 등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한 fun을 향유
- 반면, 건강미와 세련미를 갖춘 부유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증대된 소비 자원을 토대로 소비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전망
- 은퇴한 VIP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금전’과 ‘시간’이라는 양대 소비 자원을 모두 보유한 유력 소비층
 - 보안/안전 욕구와 맞물려 CCTV 등의 주거 장치 및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요트, 승마 등 직접 체험을 요하는 상품 소비가 증가할 전망
 - 2009년 중국의 新귀족 연구 결과에서도 미래 은퇴 후 계획으로 6명 중 1명은 자가용 비행기, 2명 중 1명은 요트 구입을 희망하는 등 체험을 동반하는 상품 소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²⁷⁾
 -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경험한 가치와 향수는 新소비 트렌드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할 움직임
 - 탁주와 약주 소비량은 1980년 143억 3,000kl에서 2008년 20억 4,000kl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웰빙 및 복고 문화와 맞물려 탁주 소비량이 증가세

27) 林文杰 外 (2010). “千万富豪品牌倾向调查”. 『胡潤百富』, 1月.

Ⅱ. 노동시장²⁸⁾ 파급효과

1. 연구배경

-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으로 인한 노동력의 양적감소로 산업현장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베이비붐 세대 714만 명 중 약 500만 명에 가까운 취업자가 근로 현장을 떠나게 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는 주장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도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를 가중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추세의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잠재 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 특히 숙련도가 요구되는 조선, 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 현장에서는 숙련 노동자 수의 급감으로 기업 경쟁력까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세계 최강 조선국이었던 일본도 단카이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기능 및 노하우의 손실로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에 근거
- 통계분석을 통해 동 세대의 은퇴 예상 인원을 추정하고 대규모 퇴직 발생 여부를 판단한 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단기 정책 대안을 제시
 - 2020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수를 예상(projection)하고 매년 노동시장을 떠나는 인원을 추정
 - 장단기적 관점에서 동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
 - 충격이 시차를 두고 고령화 문제와 중복되어 나타날 가능성을 점검

28) 본 장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인구총조사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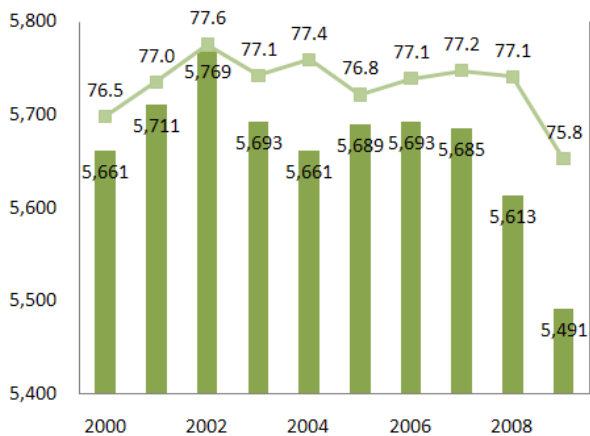
2. 취업 현황 및 특징

취업자 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용률을 유지

□ 2009년 말 기준 취업자 수는 549만 명이고 고용률은 75.8%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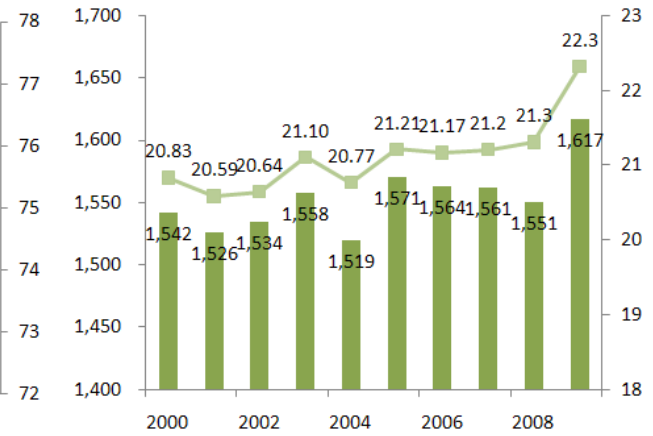
- 2007년 취업자 수 568.5만 명과 비교했을 때 약 19.4만 명 감소했고, 고용률도 동 기간 77.2%에서 75.8%로 1.4%p 하락
 - 지난 10년간 취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02년에 비해서는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각각 27.8만 명, 1.8%p 하락
- 2005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던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162만 명으로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도 22.3%로 전년 대비 1%p 상승
 -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

취업자 및 고용률



비경제활동인구 및 비경활률

(단위: 천 명(좌), %(우))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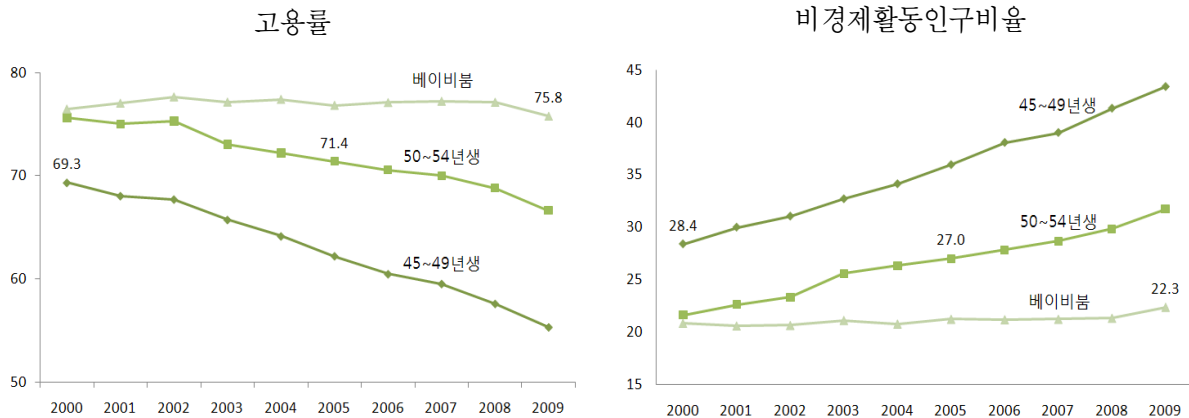
□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유지

- 이전 세대인 1945~1949년생, 1950~1954년생과 비교해 고용률은 약 4~7%p 높은 수준을 유지

- 1950년생이 55세였던 2005년의 1950~1954년생 고용률 71.4%를 4.4%p 상회
- 1945년생이 55세였던 2000년의 1945~1949년생 고용률 69.3%와 비교해도 6.5%p 높은 수준
-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의 경우도 이전 세대보다 약 4~6%p 낮아 비교적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게 나타남
- 1950~1954년생의 비경활률 27%와 비교하면 4.7%p 낮고, 1945~1949년생의 28.4%보다는 6.1%p 낮은 수준

고용률 및 비경제활동인구비율 세대 비교

(단위: %)



주: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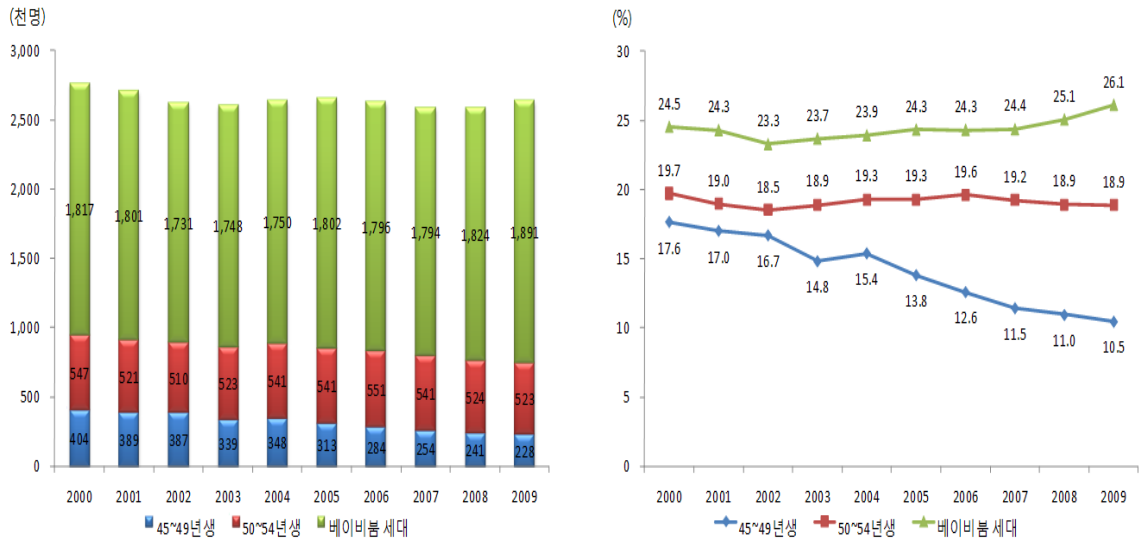
상용근로자 수는 이전 세대의 약 2배

□ 베이비붐 세대의 상용근로자 수는 2009년 약 189만 명이며 동 세대 전체 취업자 중 약 26.1%를 차지

- 이전 세대인 1945~1954년생의 2000년 기준 상용근로자 수 95만 명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준
- 취업 기회 및 정규직 취업 기회가 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
- 상용근로자 비율은 당분간 25%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2015년부터 동 비율의 하락 속도가 점차 빨라질 가능성

- 1950~1954년생 상용근로자 수가 지난 10년간 4.4% 감소에 그쳤고 비율도 0.8%p 하락에 그친 18~19%를 유지
- 반면, 1945~1949년생의 경우 60세가 되는 2005년부터 상용근로자 비율이 빠르게 감소

세대별 상용근로자 수 및 비율



주: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정년퇴직 대상인 근속 2~3년 이상 상용근로자는 약 150만 명

□ 정년퇴직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근속연수가 2~3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약 150만 명 정도로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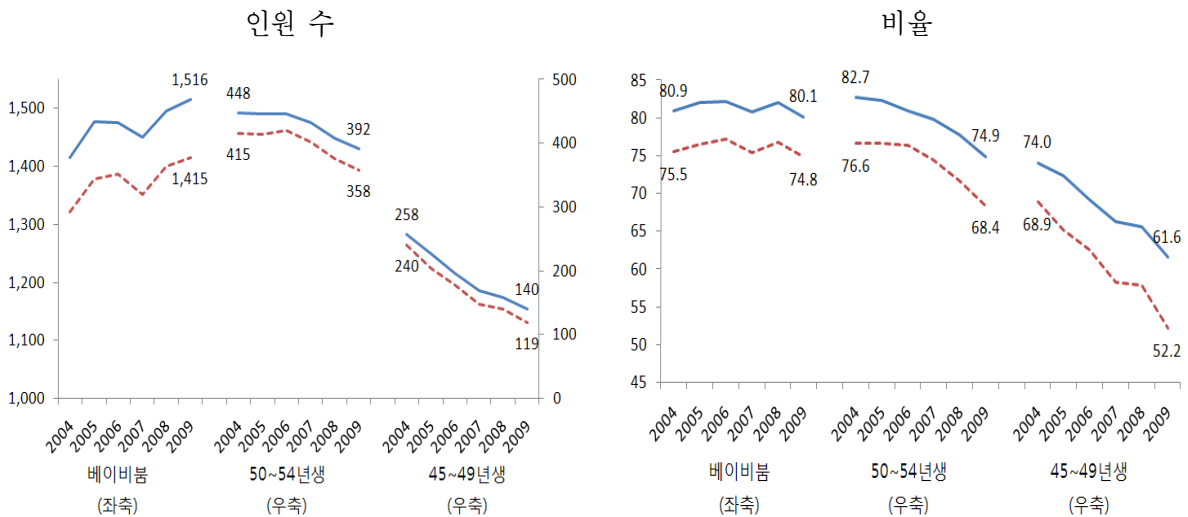
- 2009년 기준 141만 5,000명(3년 이상 근속)에서 151만 6,000명(2년 이상 근속)으로 추산
- 이전 세대(1945~1954년생)보다 81만 명가량 많음
 - 이전 세대의 2년 이상 근속한 상용근로자는 2004년 기준 70.5만 명이며, 3년 이상 근속한 상용근로자는 2004년 65.5만 명

□ 2004~2009년 기간 베이비붐 세대 상용근로자 중 80%는 근속연수가 2년 이상이었고, 75%는 근속연수가 3년 이상

- 1950~1954년생 중 근속연수가 2년 이상인 비율은 2004년 82.7%에서 2009년 74.9%로 5년 동안 7.8%p 하락
 -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비율이 2004년 76.6%에서 2009년 68.4%로 5년 동안 8.2%p 하락
- 1945~1949년생 가운데 근속연수가 2년 이상인 비율은 2004년 74.0%에서 2009년 61.6%로 12.4%p 하락
 -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비율은 2004년 68.9%에서 2009년 52.2%로 16.7%p 하락

근속기간에 따른 상용근로자

(단위: 천 명, %)



주: 실선은 근속기간 2년 이상, 점선은 근속기간 3년 이상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베이비붐 세대의 근속을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정년퇴직·연로’, ‘명예·조기퇴직·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2009년 3.2만 명으로 추산²⁹⁾

- 베이비붐 세대 중 1955년생이 50세가 되었던 2005년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2.2만 명으로 추정

29)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1년 사이에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한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음

- 1945~1949년생의 경우 1945년생이 59세가 되었던 2004년 퇴직자가 2.7만 명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2.5만~3만 명의 퇴직자가 발생
- 이러한 현상은 1950년생이 59세가 되었던 2009년에도 뚜렷하게 나타나 2008년 2.1만 명이었던 퇴직자는 2009년 2.8만 명으로 증가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정년퇴직·연로’ 및 ‘명예·조기퇴직·정리해고’가 일시적으로 증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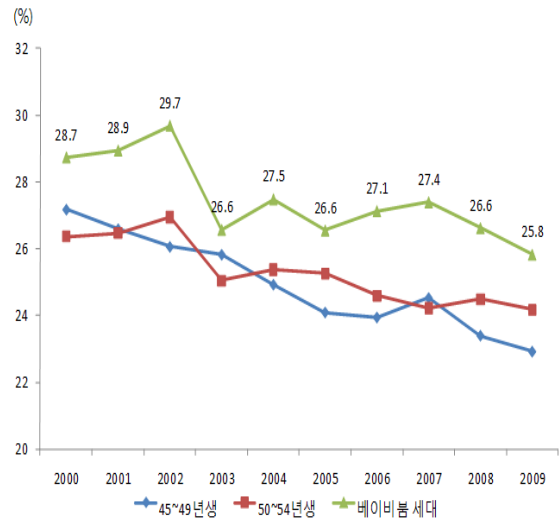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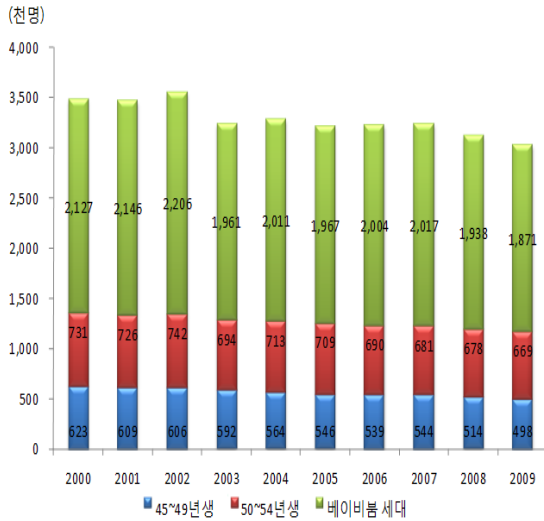
연도	'45~'49년생	'50~'54년생	'55~'59년생	'60~'64년생	베이비붐 세대	'65~'69년생
2000	11.0	11.0	16.3	10.3	25.1	11.7
2001	12.3	8.9	8.3	8.5	14.7	8.6
2002	11.5	5.2	4.1	7.2	9.2	3.9
2003	16.1	7.3	6.6	5.6	11.0	8.1
2004	27.1	8.1	10.0	7.5	15.4	8.5
2005	22.2	11.2	14.7	10.1	21.9	9.7
2006	28.3	17.8	9.6	9.2	17.6	8.8
2007	27.6	16.3	11.3	9.4	18.9	8.5
2008	26.3	21.1	11.7	9.5	19.0	7.4
2009	29.5	28.1	20.0	14.7	31.6	19.1

주: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도 이전 세대를 상회

-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는 2009년 기준 187만 명으로 동 세대 전체 취업자의 약 25.8%를 차지
- 10년 이전 세대인 1945~1954년생의 135만 명(2000년 기준)에 비해 52만 명 많은 수준
- 동 세대 상용직근로자 189만 명과도 비슷한 수준

세대별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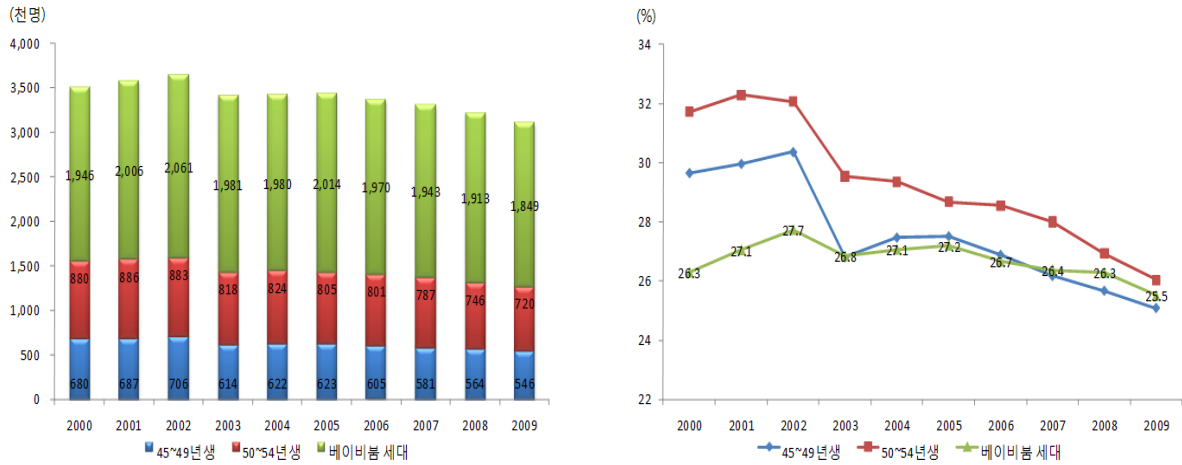
주: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주·자영자 수는 일정 수준이 유지될 전망

□ 2009년 기준 고용주와 자영자 수의 규모는 약 185만 명으로 동 세대 취업자 중 25.5%를 차지

- 외환위기 직후 기업의 인원정리 증가로 동 세대의 많은 수가 개인 사업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 수가 증가
-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주 및 자영자 수는 IT 붐과 기업 실적 증가 등으로 인한 고용자 수 증가로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점차 감소세에 돌입
 - 2005년 201만 명 → 2009년 185만 명
- 다만 동 세대의 고용주·자영자 비율의 감소는 이전 세대와 같이 급격히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
 - 1945~1954년생의 2000년 고용주·자영자 비율이 30~32%였음을 감안할 때 동 세대의 2009년 고용주·자영자 비율은 25.5%로 5~6%p 낮은 수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수의 현저한 감소 현상은 관찰되지 않음

세대별 고용주·자영자 수 및 비중



주: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베이비붐 세대 근로자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편중

□ 베이비붐 세대 전체 근로자 중 상당수가 제조업 등 소수 업종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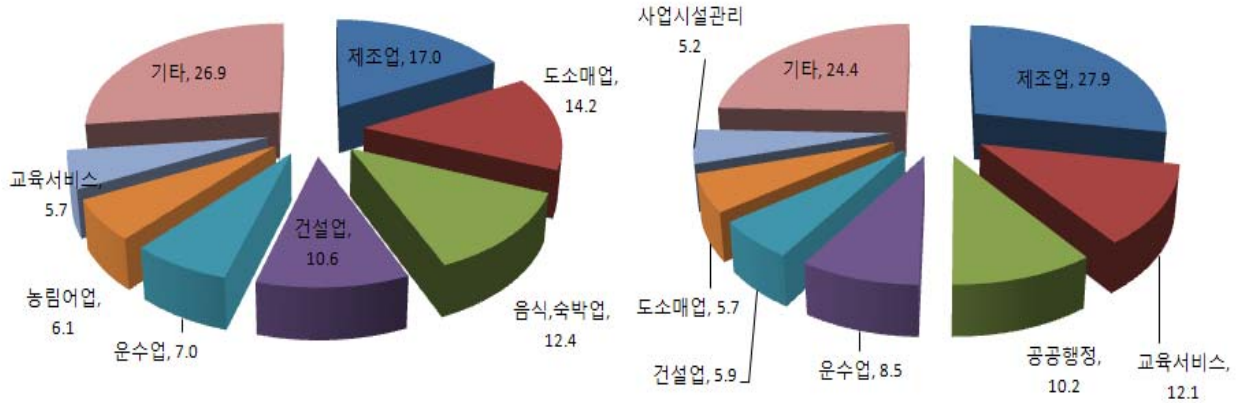
- 2009년 기준 동 세대의 54.3%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편중
 - 주요 업종으로는 제조업 17.0%, 도·소매업 14.2%, 음식·숙박업 12.4%, 건설업 10.6% 등
- 운수업, 농림어업 등 나머지 업종은 모두 7% 이하로 비중이 낮은 편

□ 상용근로자 수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집중도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

- 은퇴 충격이 큰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27.8%가 제조업에 집중
 - 기타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상용근로자가 각각 1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운수 및 건설업은 전체 근로자와 상용근로자 모두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별 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비중

(단위: %)



주: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운수업과 건설업에서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령계층별로 보면 운수업, 건설업 등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업종 내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운수업(31.1%), 건설업(30.5%), 숙박 및 음식업(30.1%) 순
- 업종 내 상용근로자 기준으로는 농림어업(41.3%), 운수업(30.5%), 공공 행정(26.9%) 순
- 업종 내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20%가 넘는 산업은 통계청 1차 분류 18개 산업 중 모두 9개³⁰⁾지만, 상용근로자 기준으로는 7개 산업으로 축소
- 음식·숙박업, 협회 및 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등은 산업의 특성상 자영업 비중이 높게 나타남³¹⁾
-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의 경우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고 상용근로자 비중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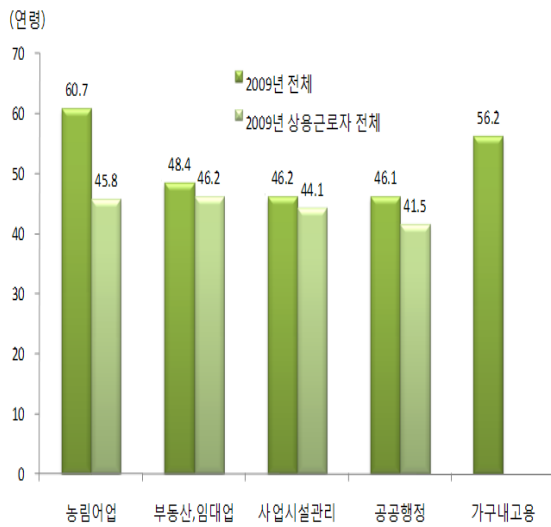
30) 가구 내 고용은 제외

31) 다만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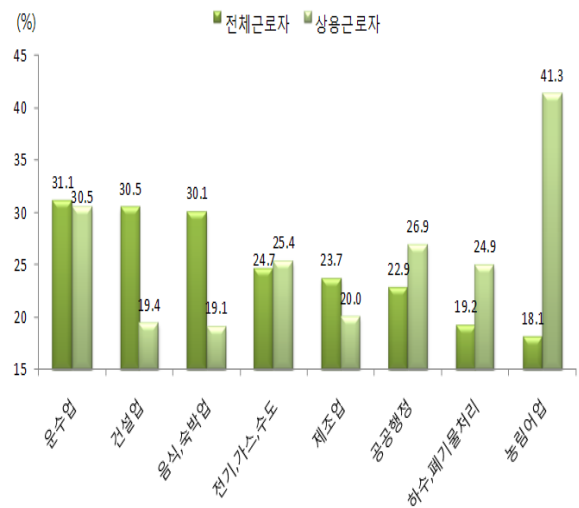
□ 평균 연령이 높은 산업으로는 부동산 임대업, 농림어업 등

-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60.7세), 가구 내 고용(56.2세), 부동산 임대업(48.4세) 순³²⁾
- 상용근로자로 한정할 경우 평균 연령은 부동산 임대업 46.2세, 농림어업 45.8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4.1세 순

산업별 평균연령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 내 비중



자료: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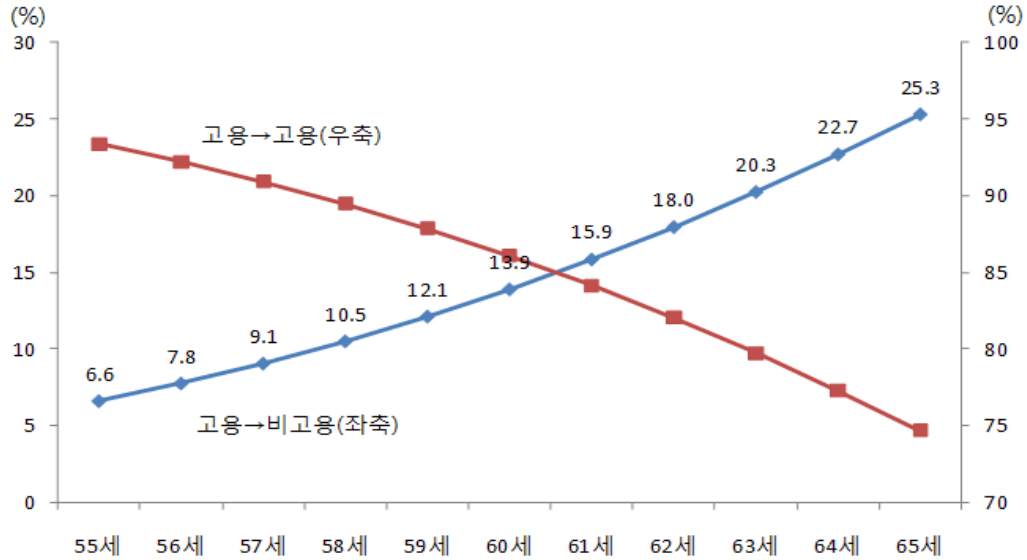
3. 파급효과 분석 및 전망

실직 또는 퇴직 확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승

-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가 은퇴 연령에 진입한 이후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55세, 60세, 65세의 경우 각각 6.6%, 13.9%, 25.3%로 예상

32) 기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46.2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6.1세) 순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예상 퇴직확률



주: 변수들은 표본의 평균값을 가정

- 2003~2007년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8,818개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841개의 표본에서 ‘고용→비고용’ 이동이 관찰
 - ‘고용→고용’과 ‘고용→비고용’의 두 가지 선택의 문제를 가정하여 프로빗(Probit) 모형을 추정³³⁾
- 매년 ‘고용→비고용’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비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는 연령, 결혼 여부, 상용직근로 여부, 연간소득(변화율), 부동산 자산(변화율), 부동산부채 변화율, 연간 가구소득(변화율) 등을 선정
-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퇴직확률이 낮음
 -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경우 퇴직확률은 5.6%p 하락하고 사별,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3.3%p 하락

33) 분석모형은 프로빗(Probit)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은 여성더미, 가구주더미, 연령, 연령의 제곱, 교육연수, 서울거주더미, 광역시거주더미, 결혼(배우자동거)더미, 결혼(배우자별거), 종사상지위(상용직)더미, 가구원 수, 취업가구원 수, 연간소득, 연간소득변화율, 부동산자산(변화율), 부동산부채(변화율), 금융자산(변화율), 금융부채(변화율), 가구총소득(변화율), 연도더미(2004~2006년)

퇴직확률의 결정 요인 분석

종속변수: 고용→비고용 확률	추정 계수	한계 효과
개인 변수		
연령	0.084**	0.010***
연령의 제곱	-0.001*	-0.000*
결혼더미(결혼, 유배우자)	-0.385**	-0.056*
결혼더미(결혼, 무배우자)	-0.334*	-0.033**
상용직더미	0.225***	0.028***
연간소득	-0.427***	-0.050***
연간소득 변화율	-0.422***	-0.050***
가구 변수		
부동산 자산	-0.035***	-0.004**
부동산 자산 변화율	-0.037***	-0.004***
부동산 부채 변화율	0.016*	0.002*
연간 가구총소득	0.235***	0.028***
연간 가구총소득 변화율	0.186***	0.022***

주: 1)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2) 한계효과는 각 변수의 한 단위 변화가 '고용→비고용' 이동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더미 변수의 경우 0에서 1로 변할 때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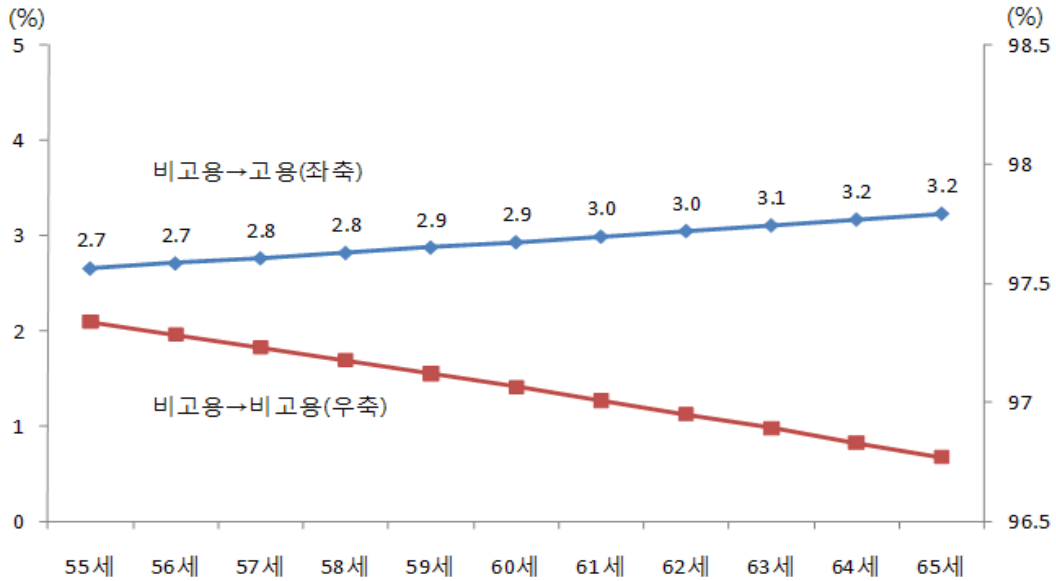
- 개인소득 및 소득증가율이 높을수록 퇴직확률이 하락하고 가구소득 및 가구소득 증가율이 높을수록 퇴직확률은 상승
 - 개인 취업자의 연간소득 및 소득증가율이 상승하면 퇴직확률은 5.0%p 하락
 - 연간 가구소득이 오르면 퇴직확률은 2.8%p 상승하고, 연간 가구소득 증가율이 상승하면 퇴직확률은 2.2%p 상승

-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퇴직확률은 0.4%p 하락
 -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실현된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부채를 통한 주택 구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구직확률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폭 상승

-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가 은퇴 연령 진입 이후에도 일자리를 얻을 확률은 55세 2.7%, 60세 2.9% 65세 3.2%로 연령에 따라 소폭 상승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예상 구직확률



주: 변수들은 표본의 평균값을 가정

- 2003~2007년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8,305개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609개의 표본에서 ‘비고용→고용’ 이동이 관찰
 - ‘비고용→고용’과 ‘비고용→비고용’의 두 가지 선택의 문제를 가정하여 프로빗(Probit) 모형을 추정³⁴⁾
- 매년 ‘비고용→고용’의 취업 확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들로 성별, 가구주 여부, 교육 수준, 부동산 자산가치 변화율, 부동산 부채(변화율), 금융자산·부채, 연간 가구소득(변화율) 등을 선정

34)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은 전과 동일하지만 종사상 지위와 연간 개인소득(변화율)은 제외됨

구직확률의 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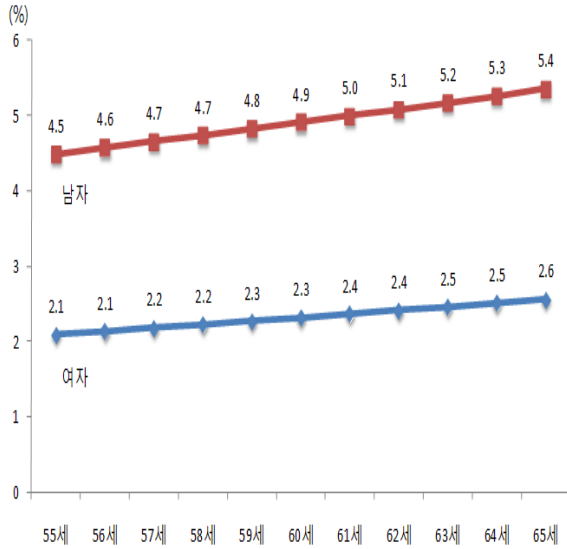
종속변수: 비고용→고용 확률	추정 계수	한계 효과
개인변수		
여성 더미	-0.338***	-0.028***
가구주 더미	0.436***	0.033***
연령	0.008	0.001
연령의 제곱	-0.001**	-0.000**
교육연수	-0.022***	-0.002***
가구변수		
부동산 부채	-0.042***	-0.003***
금융자산	-0.013*	-0.001*
금융부채	0.032***	0.002***
부동산 자산 변화율	0.018***	0.001***
부동산 부채 변화율	-0.027***	-0.002***
금융부채 변화율	0.034***	0.002***
연간 가구총소득	-0.056**	-0.004**
연간 가구총소득 변화율	-0.044***	-0.003**

주: 1)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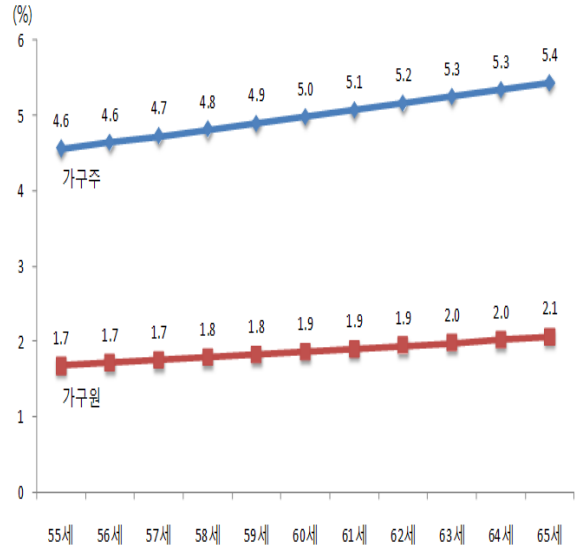
2) 한계효과는 각 변수의 한 단위 변화가 고용→비고용 이동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더미 변수의 경우 0에서 1로 변할 때의 효과

- 추정 결과 연령이 퇴직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직 가능성은 소폭 상승
- 개별특성으로 성별, 가구주, 교육연수가 구직확률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구직확률은 여성보다 2.8%p 높고 가구주는 가구원보다 3.3%p 높음
 - 55세와 60세 남성의 구직확률이 각각 4.5%, 4.9%인 반면, 같은 나이 여성의 구직확률은 각각 2.1%, 2.3%
 - 55세와 60세 가구주의 구직확률이 각각 4.6%, 5.0%인 반면, 같은 나이 가구원의 구직확률은 각각 1.7%, 1.9%

성별-연령별 구직확률



가구주-연령별 구직확률



- 부동산 관련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구직확률이 낮고 금융부채가 많은 사람은 구직확률이 높음
- 금융부채는 부동산 관련 부채와 달리 이자비용을 실제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필요
- 이는 다시 취업 의지를 강화하는 동기로 작용

동 세대 취업자 수는 2020년까지 300만 명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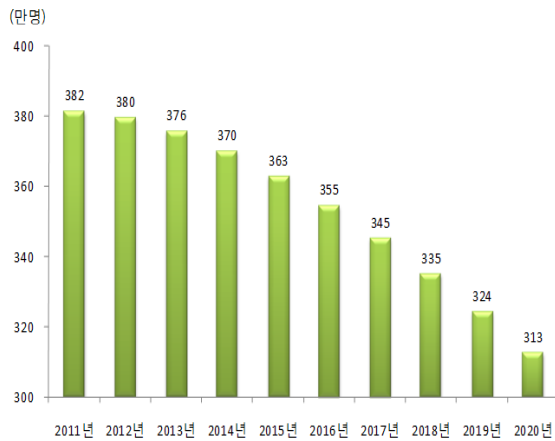
□ 동 세대 취업자 수는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나 2020년까지는 300만 명 이상을 유지할 전망

- 2009년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 가구주 여부, 결혼 여부의 8개 셀(cell)로 구분하여 연령별 예상 이직확률과 구직확률을 추정
-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연령별 교육연수의 차이를 고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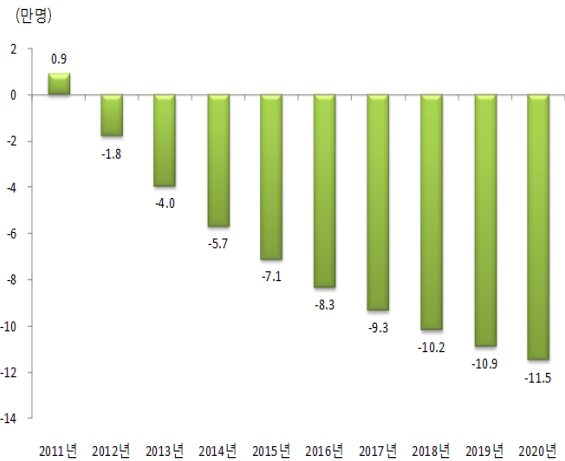
35) 추정된 이직·구직 확률을 바탕으로 연령별 2×2 마코프(Markov)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2009년 말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적용하여 연령별 취업자 수를 예측

- 동 세대의 취업자 수를 예측한 결과 2011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지만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으로 인해 감소 규모는 제한적
 - 빈번한 이직과 퇴직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꾸준
- 2009년 376.3만 명인 상용·임시·일용직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수는 2011년 382만 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 310만 명 수준에 도달할 전망
 - 2011~2020년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70만 명으로 추정

베이비붐 세대 예상 취업자 수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감소분



2020년까지 동 세대의 취업자 감소는 연평균 7만 명 수준

- 향후 10년간 상용·임시·일용직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 감소 규모는 매년 7만 명 수준으로 예상
 - 추정 결과 향후 10년간 전체 취업자 수 감소 규모는 69만 명으로 연평균 기준 7만 명 정도로 예상
 - 58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예상 취업자 수 감소 규모가 8.6만 명으로 가장 높고, 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6.5만 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예상 취업자 수

(단위: 만 명)

연도	63년생	62년생	61년생	60년생	59년생	58년생	57년생	56년생	55년생	전체
2011년	48.9	48.9	45.7	47.1	45.2	42.4	37.8	32.1	33.3	381.5
2012년	49.0	48.8	45.7	47.1	45.0	42.0	37.4	31.8	32.8	379.7
2013년	48.8	48.5	45.4	46.8	44.5	41.4	36.9	31.4	32.1	375.8
2014년	48.4	48.0	44.8	46.3	43.9	40.6	36.1	30.7	31.3	370.1
2015년	47.7	47.3	44.1	45.5	43.0	39.7	35.3	30.0	30.3	363.0
2016년	46.9	46.5	43.3	44.6	42.0	38.7	34.3	29.1	29.4	354.6
2017년	45.9	45.5	42.3	43.5	40.9	37.6	33.2	28.2	28.3	345.3
2018년	44.8	44.4	41.2	42.3	39.6	36.4	32.0	27.2	27.2	335.1
2019년	43.6	43.1	40.0	41.0	38.3	35.1	30.8	26.1	26.1	324.2
2020년	42.3	41.9	38.7	39.7	37.0	33.8	29.6	25.0	24.9	312.7
2011~ 2020년 감소분	6.5	7.0	7.1	7.5	8.3	8.6	8.3	7.1	8.4	68.8

4. 소결

정년대상자가 적어 은퇴 충격은 우려보다 작을 가능성

□ 향후 10년간 연평균 14만~15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아 퇴직할 것으로 보여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은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가능성

- 2009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549.1만 명 중 상용근로자만을 고려할 경우 189.1만 명 수준에 그침
- 특히 퇴직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근속기간 2~3년 이상인 근로자만을 고려할 경우 140만~150만 명 수준
 - 2009년을 기준으로 2~3년 이상 근속연수를 갖는 상용근로자는 각각 141.5만 명(3년 이상 근속), 151.6만 명(2년 이상 근속)으로 추산
 - 2004~2009년 기간 베이비붐 세대 상용근로자 가운데 80%는 근속연수가 2년 이상이고 75%는 근속연수가 3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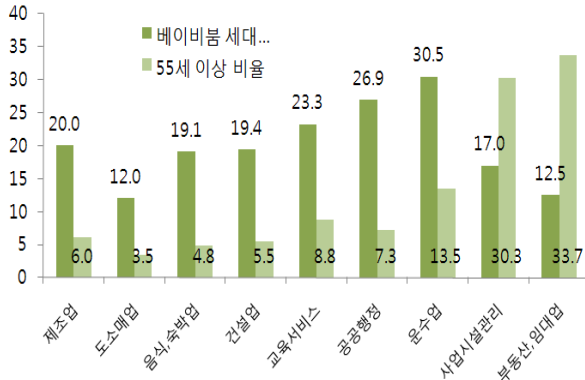
- 이전 세대에 비해 연평균 약 8만 명의 추가적인 은퇴가 진행되지만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것으로 보여 은퇴 충격이 완화될 전망
 - 근속 2~3년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상용근로자 수는 이전 세대(1945~1954년생)에 비해 약 80만 명 정도 많은 규모
 - 이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8만 명의 추가적인 정년퇴직이 진행됨을 의미
 - 하지만 정년퇴직자 중 상당수가 노동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다른 고용형태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것으로 보여 충격은 우려보다 작을 전망
 - 정년퇴직 후에도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를 지속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
 - 정년퇴직 후 완전히 노동시장을 떠나는 베이비붐 세대 수는 제한적

제조업이 정년퇴직 문제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

- 전체적인 파급효과와는 별개로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년퇴직 문제가 대두될 위험
 -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은 자영업 비중이 높고 건설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서 정년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 상용직 근로자의 28%가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정년퇴직에 따른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심각할 소지
 - 제조업 상용근로자 가운데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6%로 전체 업종의 상용근로자 평균 20%에 비해 14%p 낮아 55세 이후 잔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운수업 등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 및 55세 이상 비율이 동시에 높은 업종도 상대적으로 은퇴에 따른 영향이 빠르게 나타날 우려
 - 운수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업종은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20% 이상
 - 사업시설관리, 부동산 임대업은 55세 이상 상용근로자 비중이 30% 이상

베이비붐 세대 및 55세 이상 상용근로자 추이

베이비붐 세대 및 55세 이상 상용근로자 비율(%)



55세 이상 상용근로자 인원 수 (천 명)

산업	인원
제조업	153
건설업	30
도소매업	30
운수업	68
부동산업 및 임대업	5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6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0
교육 서비스업	84

자료: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대책 마련이 중요

□ 단기적 대응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기보다는 은퇴 이후 고령화 인구에 편입됨으로써 생기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

- 특정 세대를 겨냥한 단기 정책은 전체 노동시장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
 - 동 세대의 퇴직 문제가 단기(3~5년)에 나타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전제
- 다만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 인구에 편입되는 2020년 이후에는 노동의 양적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구축할 필요
 -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 노동자의 감소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
-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자의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확충
 - 임금피크제, 고령자 고용 유지 및 재고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확대

Ⅲ. 자산시장³⁶⁾ 파급효과

1. 연구배경

자산시장의 지각변동 가능성이 대두

- 연령대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이 향후 실물 및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
 - 동 세대의 은퇴로 부동산, 주가 등 자산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자산 가격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
 - 동 세대의 은퇴 이전에는 부동산 가격 및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은퇴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
 - 또한 향후 자산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
 -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 및 실물 등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동반될 가능성
-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 변화에 따라 가계의 자산보유구조도 변화
 - 자산규모는 총 자산과 순자산 모두 가구주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다가 각각 50대와 60대를 정점으로 감소
 - 특히, 금융자산은 40대(5,611만 원), 부동산은 50대(2억 2,597만 원) 가구주 가계가 가장 많이 보유
 - 금융 및 기타 자산은 가구주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동산은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중이 상승
 - 금융자산 비중은 가구주 나이가 29세 이하인 가계(53.6%)가, 부동산 비중은 가구주 나이가 60세 이상 가계(85.2%)가 가장 높았음

36) 통계청이 전국 약 9,300가구를 표본으로 하여 가구의 자산(금융,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실태 조사한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2007.3.)"를 기초자료로 분석

가구주 연령별 자산보유 현황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65세~	BB
구성비	100.0	5.9	20.7	30.1	20.4	22.9	15.4	26.6
총 자산	28,112.3	5,418.2	18,001.0	30,260.2	37,243.4	32,075.8	29,544.3	31,063.4
금융자산	5,744.8	2,903.8	5,611.3	6,744.3	6,548.4	4,557.4	4,034.9	6,539.4
	(20.4)	(53.6)	(31.2)	(22.3)	(17.6)	(14.2)	(13.7)	(21.1)
저축액	4,569.8	1,350.5	3,647.1	5,313.7	5,875.3	4,081.2	3,562.2	5,307.6
은행 예적금	2,641.3	915.4	1,944.5	2,662.5	3,514.4	2,905.1	2,724.2	2,721.8
저축성보험	1,028.4	313.9	995.0	1,498.9	1,309.4	370.3	235.3	1,470.6
주식	274.2	24.3	258.5	377.4	201.6	281.1	282.2	332.5
채권	16.3	1.8	13.5	25.2	5.9	20.2	5.1	23.5
기타	609.6	95.2	435.7	749.7	844.0	504.5	315.4	759.2
전월세 보증금	1,175.0	1,553.3	1,964.2	1,430.6	673.1	476.1	472.7	1,231.8
부동산	21,604.1	2,137.7	11,598.0	22,597.1	29,723.2	27,072.3	25,175.1	23,606.3
	(76.8)	(39.5)	(64.4)	(74.7)	(79.8)	(84.4)	(85.2)	(76.0)
주택	12,755.9	1,673.5	8,602.5	14,345.4	16,470.9	13,934.5	12,769.9	14,743.3
주택 이외	8,848.2	464.2	2,995.6	8,251.7	13,252.3	13,137.9	12,405.2	8,862.9
기타자산	763.5	376.8	791.6	918.9	971.8	446.1	334.3	917.7
	(2.7)	(7.0)	(4.4)	(3.0)	(2.6)	(1.4)	(1.1)	(3.0)
부채총액	3,947.9	986.5	3,722.7	4,943.4	4,620.0	2,997.2	2,488.5	4,682.8
순자산	24,164.4	4,431.7	14,278.3	25,316.9	32,623.4	29,078.6	27,055.9	26,380.6

주: 1) BB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서 2006년 당시 만 43~51세

2) () 안은 총 자산에 대한 비중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인구구조 변화가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가 양분

□ 금융시장의 경우 연령구조가 개인의 위험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견해가 상이

- 일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위험선호도 변화로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
- 개인의富有 연령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연령변화가 위험 회피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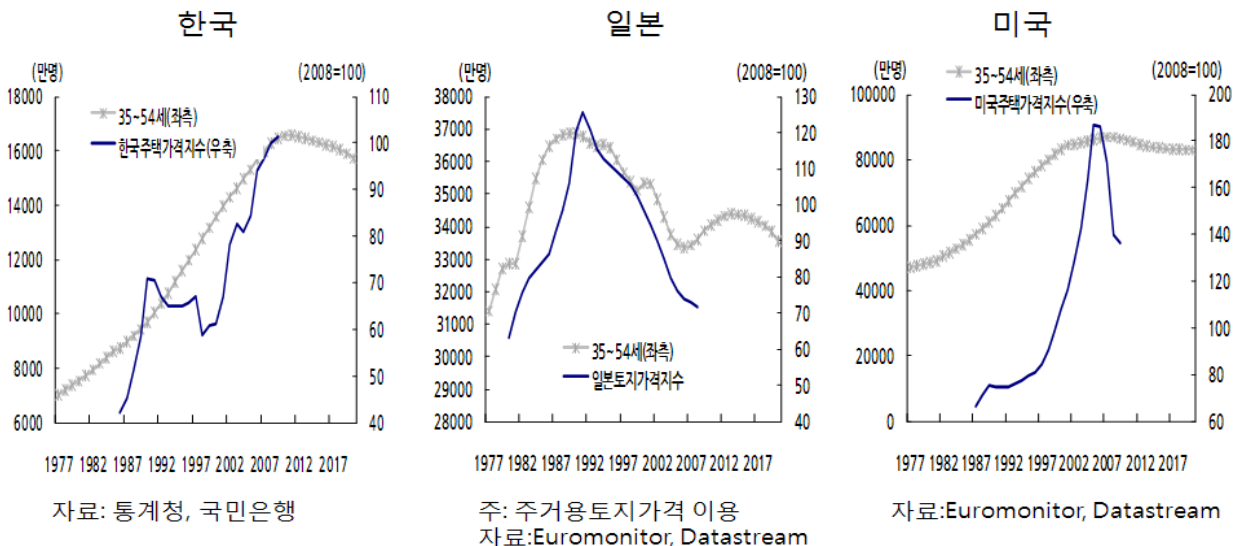
37) Samuelson(1969)은 개인의 고정된 상대적 위험회피도(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를 가정하여 일생 동안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Stiglitz(1969)는 개인의 상대적 위험회피도가富有 증대와 함께 작아진다고 주장하였고, Arrow(19971)는 반대로 개인의 상대적 위험회피도가 부의 증대와 함께 커진다고 주장. 상세한 출처는 참고문헌 참조

-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연령구조의 변화와 자산수익률, 가격 수준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³⁸⁾
- 연령구조가 자산수익률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작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도출
- 연령구조 변화가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자산수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고령화로 주식가격이 급락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

□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이 존재

- 일부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였던 주택 주 수요계층(35~54세)의 감소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³⁹⁾
- 주택가격이 35~54세 인구비중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 후 이들이 1980~1990년대의 주택가격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간주
- 일본과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토지가격이 하락⁴⁰⁾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

35~54세 인구와 주택가격 추이



38) Poterba, J. M. (2001). Demographic structure and asset retur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565-584.

39) 물론, 주택가격은 경기요인과 수요·공급 등 시장요인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도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는 게 타당

40) 다만 부동산과 주택 가격의 하락이 장기불황(일본) 및 글로벌 금융위기(미국)와 인접한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효과로 속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

- 하지만 가구 수 증가와 수도권에서의 주택공급 부족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
 - 주택수요의 기본단위인 가구 수의 증가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이후에도 주택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추정
 - 전체 가구 중 수도권 가구의 비중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이 당분간 계속된다는 주장

추계가구 전망 추이

(단위: 천 가구, %)

구분		2010년	2020년	2030년
전국추계가구		17,152	19,011	19,871
가구원수별	1인 가구(A)	3,473 (20.3)	4,109 (21.6)	4,713 (23.7)
	2인 가구(B)	3,957 (23.1)	4,844 (25.5)	5,582 (28.1)
	1인 및 2인 가구(A+B)	7,430 (43.3)	8,953 (47.1)	10,295 (51.8)
지역별	수도권	8,365 (48.8)	9,759 (51.3)	10,557 (53.1)
	비수도권	8,786 (51.2)	9,252 (48.7)	9,314 (46.9)

주: ()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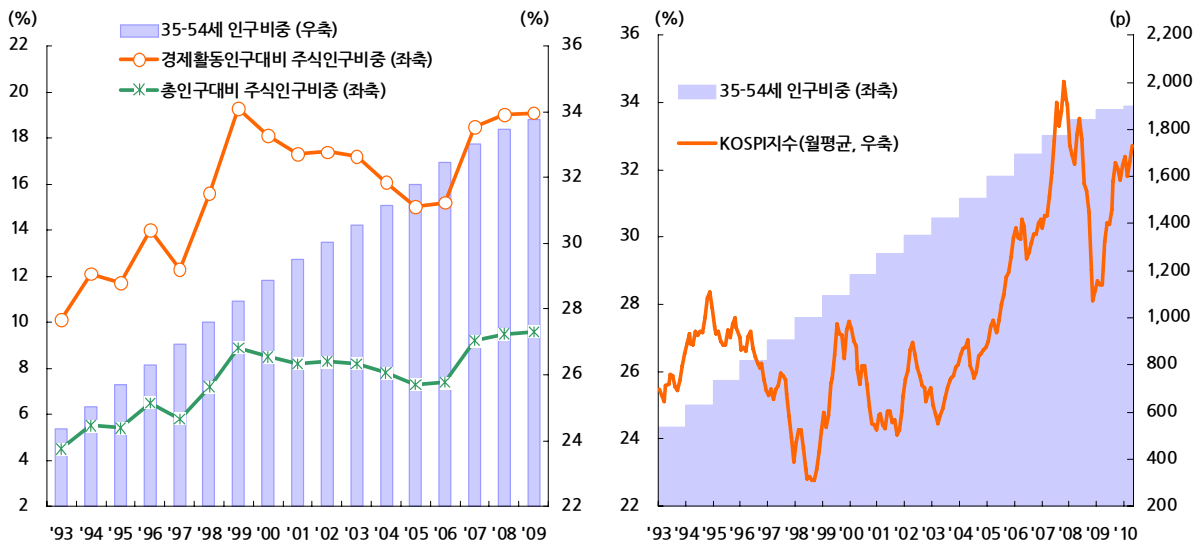
인구구조와 자산시장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

- 금융부문의 경우, 1990년대 초 美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대두되었던 자산붕괴 가설⁴¹⁾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
 -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전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에는 주가 하락압력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
 - 자산붕괴 가설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우려가 있다는 정도의 개략적 내용만 소개
 - 실제로 주식시장참여율은 35~54세 인구 비중 확대와 함께 꾸준히 상승
 - 35~54세 인구 비중은 1993년 23.2%에서 2009년 33.8%로 확대
 - 동 기간 중 총인구 대비 주식인구 비중 및 경제활동인구 대비 주식인구 비중은 각각 4.5%에서 9.6%로, 10.1%에서 19.1%로 증가

41) 1990년대 초 美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주장.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시점에 이르러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한꺼번에 처분함으로써 자산 가격이 일시에 폭락할 수 있다는 내용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주식인구 비중이 다시 감소하고, 이것이 다시 주가하락으로 연결될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식수요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주식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인가가 의문
- 그래프 분석 결과, 1993~2010년까지의 35~54세 인구비중 변화와 주가지수 추이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부재

인구구조와 주식인구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한국거래소, 주식투자인구 및 주식보유현황 통계.

□ 실물부문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택수요 및 주택가격에 줄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흡

- 현재까지 대부분의 주택수요에 관한 연구는 Mankiw and Weil (1989) (이하 M-W 모형)⁴²⁾의 연구에 기초⁴³⁾
- M-W 모형은 개별 가구의 주택수요를 연령별 가구원 수의 함수로 가정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 후, 이를 기초로 장기주택수요를 예측

42) M-W 모형에 의하면 미국의 주택수요는 베이비붐 세대가 성년이 되는 1970년대부터 높아져 1980년대 중반에 절정에 이른 후, 그 이후 증가세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기주택수요 추정 결과, 2007년까지 미국의 실질주택가격이 47% 하락(1990년 기준)할 것이라고 예측

43) 주택수요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는 부록 참조

-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음
 - 주택가격은 경기, 시장, 인구구조, 제도(정책)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 요인의 효과를 분해하기가 어려움
 - 이에 따라 인구구조와 가구 수만을 고려해서 주택 수요 및 가격을 예측할 경우, 분석상의 한계에 노출될 가능성

대량퇴직이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

-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수급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단을 시도
 - 우선,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자산처분 가능성 및 자산포트폴리오 구조변화 가능성을 점검⁴⁴⁾
 - 연도별, 연령별 가계의 주식보유구조 변화 추이를 파악해 향후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
 - 다음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을 진단
 - 연령대별 가계재무상태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주택처분 가능성을 검토
 - 주택수요식 추정을 병행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처분 가능성도 점검⁴⁵⁾
 -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결과’를 이용⁴⁶⁾
 - 2006년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 세대주 가구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파악

44) 채권 등 주식 이외의 금융상품의 경우 보유구조에 대한 가계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부족 등의 제약으로 실증분석이 곤란

45) Mankiw and Weil(1989)의 주택수요추정 모형을 세대주의 주택수요함수로 변형시켜 주택수요식을 추정하고 추가적으로 소득 및 주거비용을 변수로 포함하여 추정

46) 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자료’가 있으나, 동 데이터의 경우 금융자산 중 주식과 채권이 동일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 위험선호도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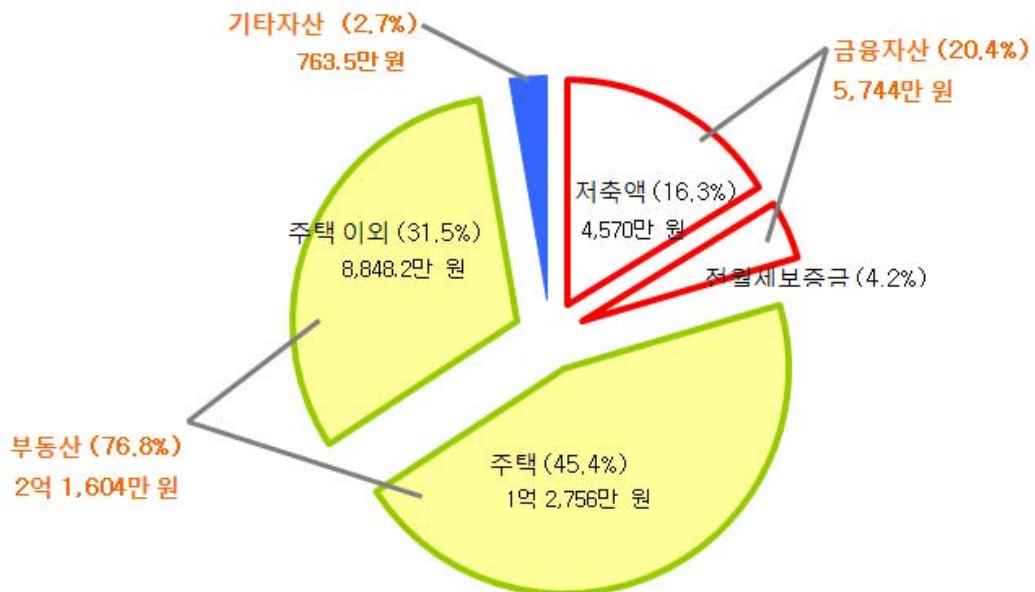
2. 보유현황 및 특징

베이비붐 세대주 가구의 자산은 총 자산의 약 3분의 1

□ 2006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 자산은 2억 8,112만 원

- 총 자산 중 금융자산(전월세 보증금 포함)은 5,744만 원, 부동산은 2억 1,604만 원, 기타 자산은 764만 원
 - 부동산 중 주택이 1억 2,756만 원, 그리고 토지/건물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이 8,848만 원을 차지
 - 금융자산 중 예금, 주식, 보험, 채권 등 저축액은 4,570만 원이며, 전월세 보증금은 1,175만 원을 기록
- 전체 가구의 총 자산 중 약 4분의 3이 실물자산으로 구성
 - 총 자산 중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비중은 각각 76.8%, 20.4%, 2.7%로 실물자산 비중이 금융자산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황
 -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액은 전체 자산의 16.3%에 불과

2006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 및 구성비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전체 가구 중 26.6%)의 평균 총 자산은 전체 가구의 평균 총 자산보다 10.5% 많은 3억 1,063억 원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평균 총 자산 중 금융자산은 6,539.4만 원, 부동산은 2억 3,606만 원, 기타 자산은 918만 원
 - 총 자산 구성항목 모든 부문이 전체 가구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총 자산 중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비중은 각각 76.0%, 21.1%, 3.0%
 -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21.1%)이 전체 가구 평균(20.4%)을 소폭 상회하나, 실물자산이 금융자산보다 3.6배나 많은 것으로 파악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총 자산은 전체 가구의 총 자산 중 29.4%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금융자산이 전체 가구의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3%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주택자산이 전체 가구의 주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7%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평균자산 및 구성비

(단위: 만 원, %)

구분	총 자산								부채총액	순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기타자산		
	저축액	전월세보증금	주택	주택이외						
전체	28,112.3	5,744.8	4,569.8	1,175.0	21,604.1	12,755.9	8,848.2	763.5	3,947.9	24,164.4
		(20.4)	(16.3)	(4.2)	(76.8)	(45.4)	(31.5)	(2.7)	-	-
BB	31,063.4	6,539.4	5,307.6	1,231.8	23,606.3	14,743.3	8,862.9	917.7	4,682.8	26,380.6
		(21.1)	(17.1)	(4.0)	(76.0)	(47.5)	(28.5)	(3.0)	-	-
	<29.4>	<30.3>	<30.4>	<27.9>	<29.0>	<30.7>	<26.6>	<32.0>	<31.5>	<29.0>

주: 1) BB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서 2006년 당시 만 43~5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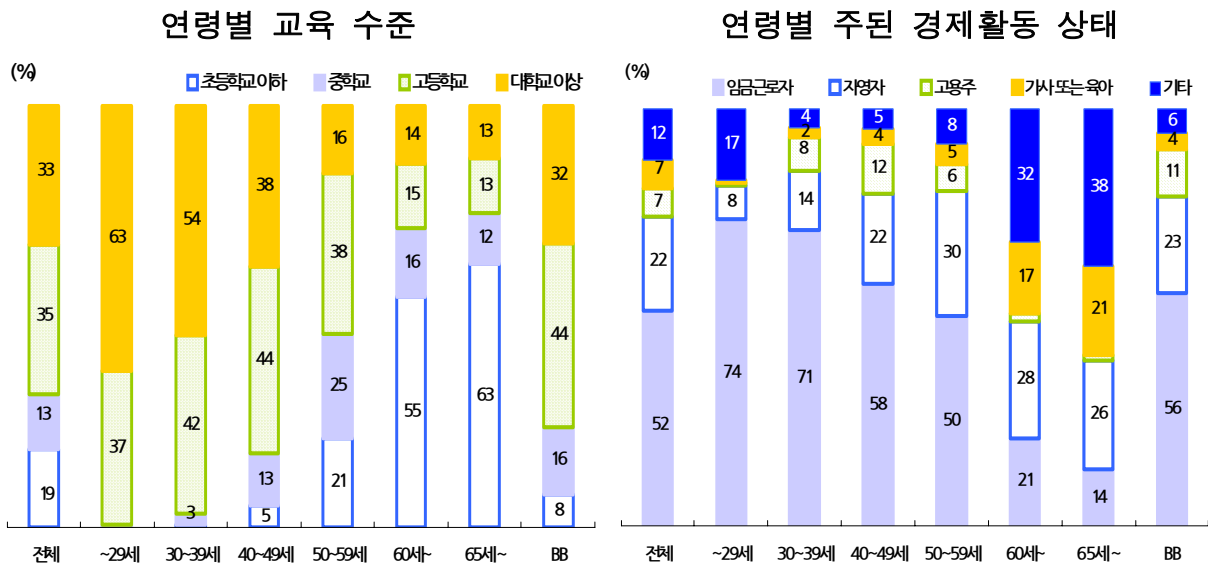
2) () 안은 총 자산에 대한 비중

3) < > 안은 베이비붐 세대 세대주 가구의 자산이 전체 가구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근로소득이 있지만 은퇴 이후 소득제약에 직면할 가능성

- 베이비붐 세대주의 경우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동 가구의 90.5%가 근로소득이 존재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비중은 76.3%로 전체 평균(68.3%)을 상회
 - 특히, 베이비붐 세대주 가구 중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중은 32.5%로, 50대 이상의 경우(13~16% 내외)를 크게 상회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90.5%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55.8%이며, 자영업자와 고용주 비중도 각각 23.4%와 11.3%를 차지
 -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임금소득자 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볼 때, 은퇴 이후 소득제약에 직면할 소지는 잔존
 - 임금근로자 비중은 은퇴가 시작되는 50대 이후 가파르게 축소(40대: 58.2%→ 50대: 50.3%→ 60세 이상: 21.0%)
 -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주 비중은 50대 이후 크게 하락한 반면, 자영업자 비중은 소폭 상승



주: BB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서 2006년 당시 만 43~5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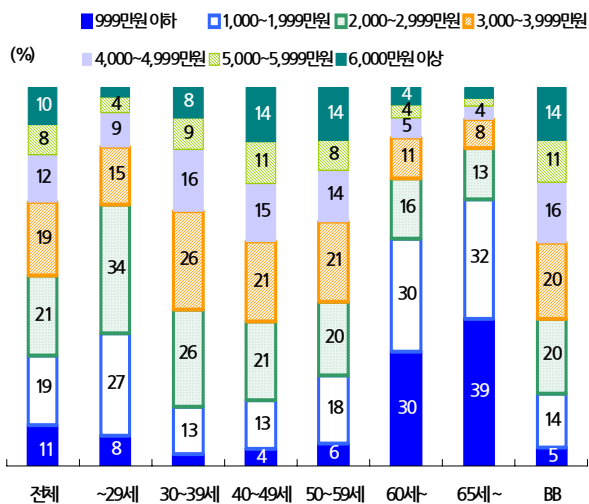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고소득층 비중이 높고 4분의 3 이상이 부동산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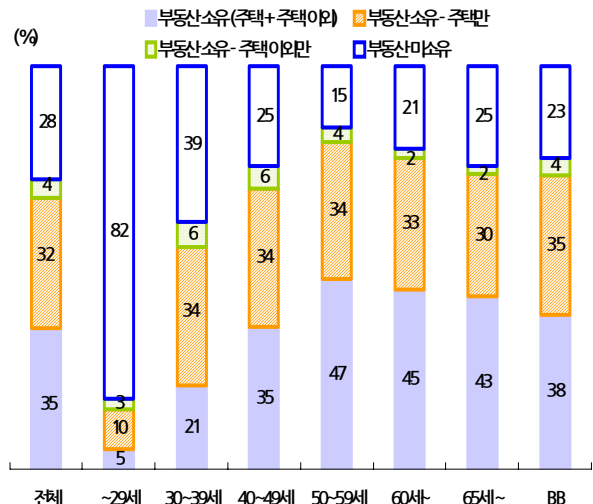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주 가구는 소득 수준이 높고, 77.4%가 부동산을 보유

- 소득계층별로 볼 때,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 중 연간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25%로 전체 가구 수준(17.7%)을 상회
 - 연간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인 모든 구간에서 베이비붐 세대주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 평균을 상회
 - 40대를 정점으로 고소득자 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고소득자 비중도 크게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
- 부동산 소유기준으로 볼 때,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 중 부동산을 소유한 비중이 77.4%를 차지
 - 주택뿐만 아니라, 건물·토지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모두 소유한 계층도 38.2%를 기록
 - 특히, 60세 이상에서도 79.4%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연령별 소득 수준



연령별 부동산 소유구조



주: BB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로서 2006년 당시 만 43~51세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3. 파급효과 분석 및 전망

1) 금융자산

금융자산 보유구조는 타 연령대와 유사

□ 금융자산 중 대부분을 은행 예적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⁴⁷⁾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는 은행 예적금(51.3%), 저축성보험(27.5) 등 보유금융자산의 약 80%가 안전자산
 - 주식보유액은 전체 금융자산(5,308만 원)의 6.3%에 불과한 333만 원
- 가계주 연령과 관계없이 전 연령대에서 은행 예적금, 저축성보험 등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남
 - 전 연령대에 걸쳐 은행 예적금, 저축성 보험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80% 내외로 높은 수준⁴⁸⁾

연령별 금융자산 보유금액 및 투자 비중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BB
구성비 (%)	100.0	5.9	20.7	30.1	20.4	22.9	15.4	26.6
금융자산: 항목별 잔액 (만 원)								
금융자산	4,569.8	1,350.5	3,647.1	5,313.7	5,875.3	4,081.2	3,562.2	5,307.6
은행 예적금	2,641.3	915.4	1,944.5	2,662.5	3,514.4	2,905.1	2,724.2	2,721.8
저축성보험	1,028.4	313.9	995.0	1,498.9	1,309.4	370.3	235.3	1,470.6
주식	274.2	24.3	258.5	377.4	201.6	281.1	282.2	332.5
채권	16.3	1.8	13.5	25.2	5.9	20.2	5.1	23.5
기타	609.6	95.2	435.7	749.7	844.0	504.5	315.4	759.2
금융자산: 항목별 투자 비중 (%)								
금융자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은행 예적금	57.8	67.8	53.3	50.1	59.8	71.2	76.5	51.3
저축성보험	22.5	23.2	27.3	28.2	22.3	9.1	6.6	27.7
주식	6.0	1.8	7.1	7.1	3.4	6.9	7.9	6.3
채권	0.4	0.1	0.4	0.5	0.1	0.5	0.1	0.4
기타	13.3	7.0	11.9	14.1	14.4	12.4	8.9	14.3

주: 1) 금융자산은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액을 기준으로 작성

2) BB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서 2006년 당시 만 43~51세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47)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액을 중심으로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구조의 특징을 파악

48)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도 30대에 크게 증가한 이후 7% 내외를 유지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식 비중 상승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금융자산 중 가구당 평균 주식투자 금액 및 투자 비중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상승
 - 가구주 교육 수준이 대졸(4년제 이상) 이상인 경우,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주식투자 비중이 9%를 상회
 - 반면, 가구주 교육 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 금융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를 하회
 -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가구주 교육 수준이 대졸(4년제 이상) 이상인 경우, 가구당 평균 727.2만 원의 주식을 보유
 -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가구의 평균 주식투자 금액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보다 3배 이상 많았음
 - 특히 대학원 이상인 경우 가구당 평균 주식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을 상회

베이비붐 세대주 가구의 교육 수준별 금융자산 보유구조

구분	안 받았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4년제 미만)	대학 (4년제 이상)	대학원(卒)
구성비 (%)	0.8	7.1	15.9	43.8	7.5	20.6	4.5
금융자산: 항목별 잔금액 (만 원)							
금융자산	1,132.5	3,089.2	2,944.5	4,336.2	8,043.1	8,032.9	10,360.0
은행 예적금	639.1	1,657.1	1,515.0	2,239.1	3,738.9	3,925.2	6,559.7
저축성보험	398.4	923.4	1,025.1	1,346.1	2,759.0	1,700.2	2,121.7
주식	0.0	13.8	59.5	211.5	467.5	727.2	1,009.5
채권	0.0	0.2	3.5	11.6	1.9	78.1	36.2
기타	94.9	494.7	341.3	527.9	1,075.8	1,602.1	632.9
금융자산: 항목별 투자 비중 (%)							
금융자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은행 예적금	56.4	53.6	51.5	51.6	46.5	48.9	63.3
저축성보험	35.2	29.9	34.8	31.0	34.3	21.2	20.5
주식	0.0	0.4	2.0	4.9	5.8	9.1	9.7
채권	0.0	0.0	0.1	0.3	0.0	1.0	0.3
기타	8.4	16.0	11.6	12.2	13.4	19.9	6.1

주: 금융자산은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액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금융자산 중 주식투자 금액 및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
 - 소득 수준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주식투자 비중이 9%를 상회
 - 반면, 소득 수준이 1,000만 원을 하회하는 경우, 금융자산 중 주식투자 비중은 2.2%에 불과
 - 투자금액 기준으로도 소득 수준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당 평균 1209.2만 원의 주식을 보유
 -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가구의 주식투자 금액보다 7배 정도 상회
 -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당 금융자산 투자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소득 수준이 6,0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베이비붐 세대주 가구의 교육 수준별 금융자산 보유구조

구분	999만 원 이하	1,000만~1,999만 원	2,000만~2,999만 원	3,000만~3,999만 원	4,000만~4,999만 원	5,000만~5,999만 원	6,000만 원 이상
구성비 (%)	4.92	14.18	19.86	19.98	16.08	11.08	13.90
금융자산: 항목별 잔액 (만 원)							
금융자산	2,467.5	2,023.3	2,841.3	3,843.8	5,467.3	7,821.2	13,104.8
은행 예적금	1,470.9	907.9	1,390.8	1,912.9	2,668.1	4,119.7	7,028.3
저축성보험	436.9	604.9	877.0	1,246.1	1,704.7	2,214.5	3,027.6
주 식	177.3	43.9	177.8	127.6	298.3	367.4	1,209.2
채 권	0.0	0.1	2.8	2.7	32.2	1.0	122.9
기 타	382.4	466.5	392.9	554.5	764.0	1,118.6	1,716.9
금융자산: 항목별 투자 비중 (%)							
금융자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은행 예적금	59.6	44.9	48.9	49.8	48.8	52.7	53.6
저축성보험	17.7	29.9	30.9	32.4	31.2	28.3	23.1
주 식	7.2	2.2	6.3	3.3	5.5	4.7	9.2
채 권	0.0	0.0	0.1	0.1	0.6	0.0	0.9
기 타	15.5	23.1	13.8	14.4	14.0	14.3	13.1

주: 금융자산은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액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12.9%만이 실제로 주식을 소유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 중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12.9%에 불과

- 이는 전체 가구 중 실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 비중(10.4%)에 비해서는 약간 높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
- 하지만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금융자산 항목별 투자구성에 있어 주식투자 금액 및 비중이 크게 높았음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 중 주식 보유 가구의 평균 주식투자 금액은 2,579만 원으로, 평균(333만 원)보다 7.8배 많은 수준
 - 금융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22.8%로,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 전체 평균(6.3%)을 크게 상회

주식 소유 여부에 따른 금융자산 보유구조

구분	전체 가구			BB 가구		
	주식 미소유	주식 소유		주식 미소유	주식 소유	
가구구성비 (%)	89.6	10.4		87.1	12.9	
금융자산: 항목별 잔액 (만 원)						
금융자산	4,569.8	3,916.5	10,207.2	5,307.6	4,418.0	11,317.6
은행 예적금	2,641.3	2,375.2	4,937.6	2,721.8	2,339.0	5,307.6
저축성보험	1,028.4	955.6	1,656.5	1,470.6	1,357.9	2,232.6
주식	274.2	0.0	2,640.2	332.5	0.0	2,578.8
채권	16.3	14.8	29.0	23.5	18.1	59.7
기타	609.6	570.9	943.9	759.2	703.0	1,138.9
금융자산: 항목별 투자 비중 (%)						
금융자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은행 예적금	57.8	60.6	48.4	51.3	52.9	46.9
저축성보험	22.5	24.4	16.2	27.7	30.7	19.7
주식	6.0	0.0	25.9	6.3	0.0	22.8
채권	0.4	0.4	0.3	0.4	0.4	0.5
기타	13.3	14.6	9.2	14.3	15.9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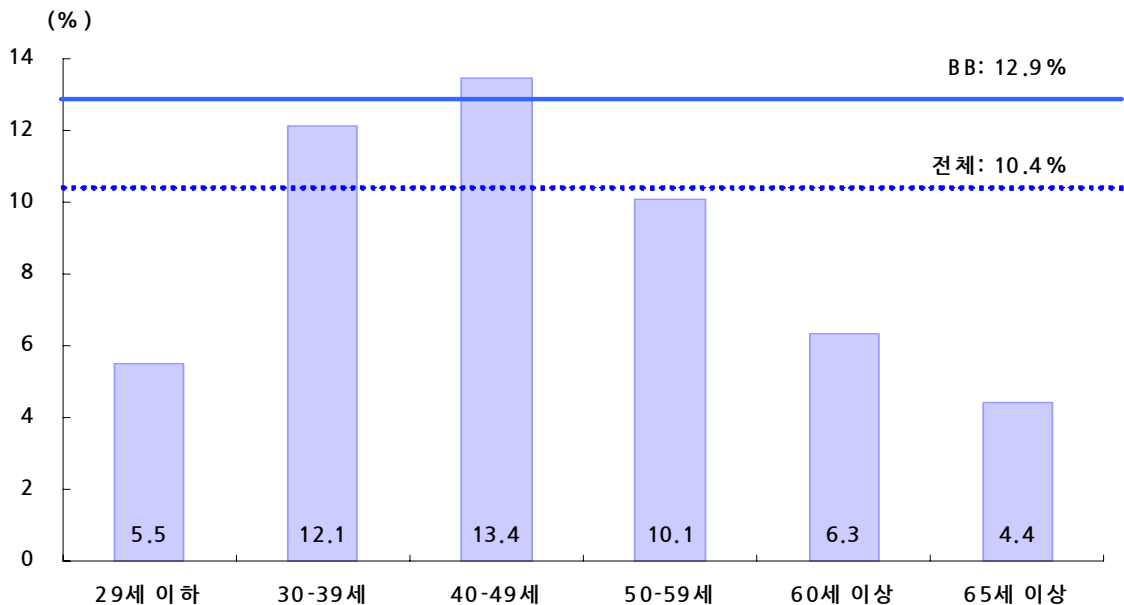
주: 금융자산은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액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연령별 주식 소유 가구 비중은 역U자형

- 연령대별 주식 소유 가구 비중은 40대까지 상승한 이후, 나이가 들수록 하락하는 역U자형을 시현
 - 연령대별 가구의 주식 소유 비중은 40대에서 13.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경제활동참여율 및 소득 수준 상승 등으로 20대 이후 40대까지 실제 주식시장 참여율이 상승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 50대까지의 주식 보유 가구 비중은 10.1%로 전체 가구 중 주식을 소유하는 비중(10.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하지만 60대 들어 주식 보유 가구 비중이 6.3%로 가파르게 하락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경우, 노후를 위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가구주 연령대별 주식 보유 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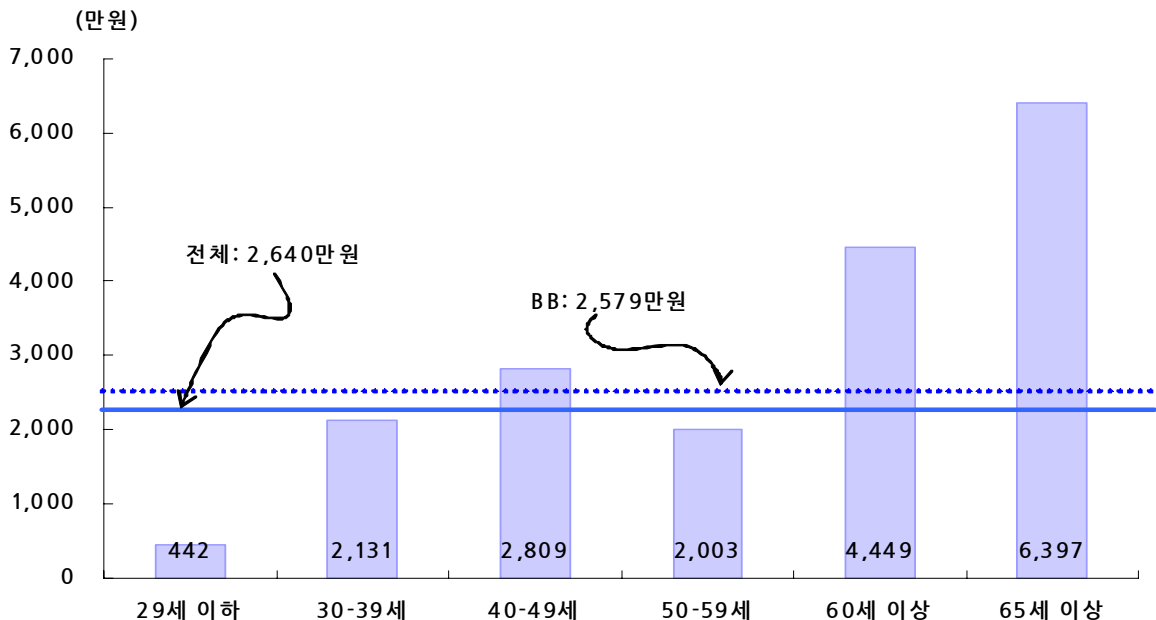
주: BB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서 2006년 당시 만 43~51세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주식 보유 가구의 주식보유액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

- 주식 보유 가구의 가구당 평균 주식보유금액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
 - 주식 보유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60세 및 65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 주식보유금액은 각각, 4,449만 원, 6,397만 원을 기록
 -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체 가구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평균 주식보유액보다 2~3배가량 많은 수준
 - 연령대별 주식 보유 가구 비중이 나이가 들면서 하락하는 현상과 대조적
 - 50~60대 들어 주식 보유 가구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주식 보유 가구의 평균 주식보유금액이 높아짐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소유주식을 처분해 자산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연령대별 주식 보유 가구의 평균 주식보유금액



주: BB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서 2006년 당시 만 43~51세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나이가 들수록 주식 보유 가구와 미보유 가구의 자산격차가 확대

- 연령대별 주식 보유 가구와 미보유 가구 간 자산 수준 등을 볼 때, 동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가 은퇴 이후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식 보유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총액이 주식 미보유 가구보다 크게 높아짐
 - 특히 가구주 나이가 60세 이상인 주식 보유 가구의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총액은 주식 미보유 가구보다 각각 3.7배, 2.6배나 많은 것으로 파악

연령대별 주식 보유 가구와 미보유 가구의 소득 및 자산 현황

(단위: 만 원, 배)

구분	주식보유여부	가구구성비	연간소득	총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순자산
전체	미보유	89.6	3,228.5	24,852.9	3,916.5	19,146.5	21,403.7
	보유	10.4	5,081.2 (1.6)	56,241.4 (2.3)	10,207.2 (2.6)	42,812.9 (2.2)	47,990.1 (2.2)
29세 이하	미보유	94.5	2,593.7	5,137.8	1,273.2	2,006.0	4,224.0
	보유	5.5	3,390.7 (1.3)	10,233.5 (2.0)	2,677.7 (2.1)	4,398.2 (2.2)	7,998.6 (1.9)
30-39세	미보유	87.9	3,554.8	16,011.5	3,181.3	10,166.7	12,744.8
	보유	12.1	4,551.7 (1.3)	32,412.5 (2.0)	7,021.5 (2.2)	21,966.4 (2.2)	25,386.7 (2.0)
40-49세	미보유	91.0	5,464.1	39,583.9	7,754.6	28,324.1	32,570.3
	보유	13.4	5,247.9 (1.0)	56,558.9 (1.4)	10,207.8 (1.3)	42,707.0 (1.5)	47,561.2 (1.5)
50-59세	미보유	89.9	3,588.9	32,888.7	5,039.4	26,315.4	28,656.8
	주식 보유	10.1	5,751.2 (1.6)	76,151.2 (2.3)	13,344.1 (2.6)	60,170.5 (2.3)	68,063.3 (2.4)
60세 이상	미보유	93.7	2,101.2	28,935.9	3,483.2	24,638.9	26,401.6
	보유	6.3	4,956.2 (2.4)	78,640.8 (2.7)	12,950.2 (3.7)	63,161.5 (2.6)	68,779.4 (2.6)
65세 이상	미보유	95.6	1,741.0	26,861.7	2,974.2	23,173.5	24,842.9
	보유	4.4	5,270.9 (3.0)	87,669.5 (3.3)	16,300.6 (5.5)	68,544.4 (3.0)	75,004.5 (3.0)
BB	미보유	87.1	3,741.4	26,268.2	4,418.0	19,859.0	22,220.8
	보유	12.9	5,390.5 (1.4)	63,458.3 (2.4)	11,317.6 (2.6)	48,922.0 (2.5)	54,483.5 (2.5)

주: 1) 금융자산은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액을 기준으로 작성

2) () 안은 주식 보유 가구 대비 주식 미보유 가구의 소득 및 항목별 자산총액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개인투자자의 연령별 주식시장참여율은 역U자형을 시현

-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참여율도 일정 연령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하는 역 U자 형태를 보임
 -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참여율은 주주 수 및 보유금액 기준으로 볼 때, 각각 40대와 50대를 정점으로 하락
 - 2009년 말 주주 수 기준 개인투자자의 연령별 분포는 40~49세가 30.7%로 가장 높은 수준
 - 2009년 말 보유금액 기준 개인투자자의 연령별 분포는 50~59세가 33.2%로 가장 높은 수준
 - 연령별 소득 수준의 변화가 위험 회피도에 영향을 주면서 주식시장참여율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임
 - 소득 수준이 상승하는 40~50대까지 주식시장참여율이 상승하다가 이후 은퇴 등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참여율이 하락

개인투자자의 연령별 주식보유구조 (2009년 말 기준)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주주 수 (천 명)	31	207	1043	1411	1302	606
(구성비, %)	(0.7)	(4.5)	(22.6)	(30.7)	(28.3)	(13.2)
보유금액 (시가총액, 십억 원)	750	5,936	32,211	78,470	91,948	68,412
(구성비, %)	(0.3)	(2.2)	(11.5)	(28.3)	(33.2)	(24.6)

자료: 한국거래소, 주식투자인구 및 주식보유현황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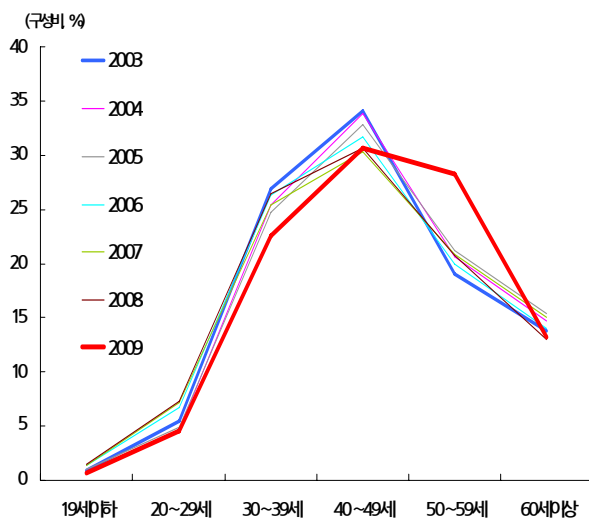
50대 이상 개인투자자의 주식보유 비중이 꾸준히 상승

- 개인투자자의 연령별/연도별 주식보유분포를 살펴본 결과, 은퇴 이전에 주식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은퇴 이후 주식투자 비중을 꾸준히 줄이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음
 - 주주 수 기준 개인투자자의 연령별 주식시장참여율의 경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전 기간에 걸쳐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적으로 40대 비중이 하락하고 50대 비중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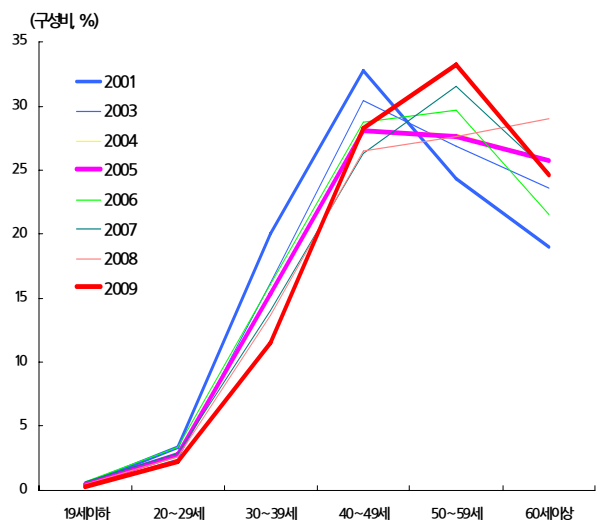
- 주주 수 기준 개인투자자의 40대 비중은 2003년 34.1%에서 2009년 30.7%로 3.4%p 하락
 - 반면, 개인투자자 중 50대의 주주 수 비중은 동 기간 중 19.0%에서 28.3%로 9.3%p 상승
- 특히, 보유금액기준으로 살펴본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참여율은 2001~2005년 중에는 40대가 가장 높았으나, 2006년 이후 50대가 가장 높아짐
- 보유금액 기준 40대의 주식시장 참여율은 2001년 32.8%에서 2009년 28.3%로 4.5%p 하락
 - 반면, 동 기간 중 보유금액 기준 50대와 60대의 주식시장참여율은 각각 24.3%에서 33.2%, 19.0%에서 24.6%로 크게 상승
- 즉,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기보다는 계속 보유하는 경향
- 자녀의 교육 및 결혼 관련 대규모 지출이 일단락되고,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마련, 노후대비 등의 요인에 기인

개인투자자의 연령별 주식분포

<주주 수 기준>



<보유금액 기준>



개인투자자의 연령별 주식분포 추이

(단위: 비중 %)

구분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주주 수 기준								
19세 이하	-	0.9	0.8	1.0	1.3	1.3	1.4	0.7
20~29세	-	5.4	4.6	4.9	6.7	7.1	7.4	4.5
30~39세	-	26.9	25.4	24.7	26.3	25.4	26.5	22.6
40~49세	-	34.1	33.9	32.8	31.7	30.3	30.8	30.7
50~59세	-	19.0	20.6	21.2	20.0	20.8	20.9	28.3
60세 이상	-	13.8	14.7	15.4	14.0	15.0	13.0	13.2
보유금액 기준								
19세 이하	0.5	0.3	0.4	0.5	0.6	0.6	0.5	0.3
20~29세	3.4	2.4	2.6	2.8	3.4	2.9	2.6	2.2
30~39세	20.0	16.2	15.2	15.3	16.1	14.0	13.7	11.5
40~49세	32.8	30.4	28.1	28.1	28.7	26.3	26.5	28.3
50~59세	24.3	26.9	27.8	27.6	29.7	31.5	27.6	33.2
60세 이상	19.0	23.6	25.8	25.7	21.5	24.8	29.0	24.6

자료: 한국거래소, 주식투자인구 및 주식보유현황 통계.

주식처분 가능성과 개인의 주식시장 참여율을 통해 유추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금융자산 특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도별/연령별 주식시장 참여율 변화를 통해 유추
 -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구구조 변화,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곤란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가계의 자산보유구조 변화 패널 데이터 확보는 가능하나, 연령구조가 위험기피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님
 - 한국노동연구원은 1998년 이후 매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실시하여 발표
 - 하지만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금융자산 중 주식, 채권, 보험을 하나의 항목으로 취급함으로써 위험-비위험 자산 간 포트폴리오 분석이 어려움
 - 반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의 경우 연령대별 위험-비위험 금융자산 보유구조 파악은 가능하나, 조사연도가 2006년 한 해에 국한되어 있어 패널 분석이 불가능

2) 부동산시장⁴⁹⁾

가계재무상태는 다른 연령대와 유사

□ 생애 주기상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가계소득은 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하는 시기에 위치

- 주택소유 가구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은 40대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자산은 50대까지 증가
 - 연평균 소득이 40대에 4,467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뒤 50대에는 4,075만 원, 60대 이상에서는 2,555만 원까지 감소
 - 50대의 평균 자산은 4억 3,761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나 평균 부채는 5,279만 원으로 40대에 비해 낮은 수준⁵⁰⁾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는 소득과 부채 면에서는 감소세, 자산 면에서는 증가세에 직면한 연령대인 것으로 해석
 - 연간소득 및 부채는 40대보다 다소 낮은 4,368만 원과 5,867만 원이지만 자산은 40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증가세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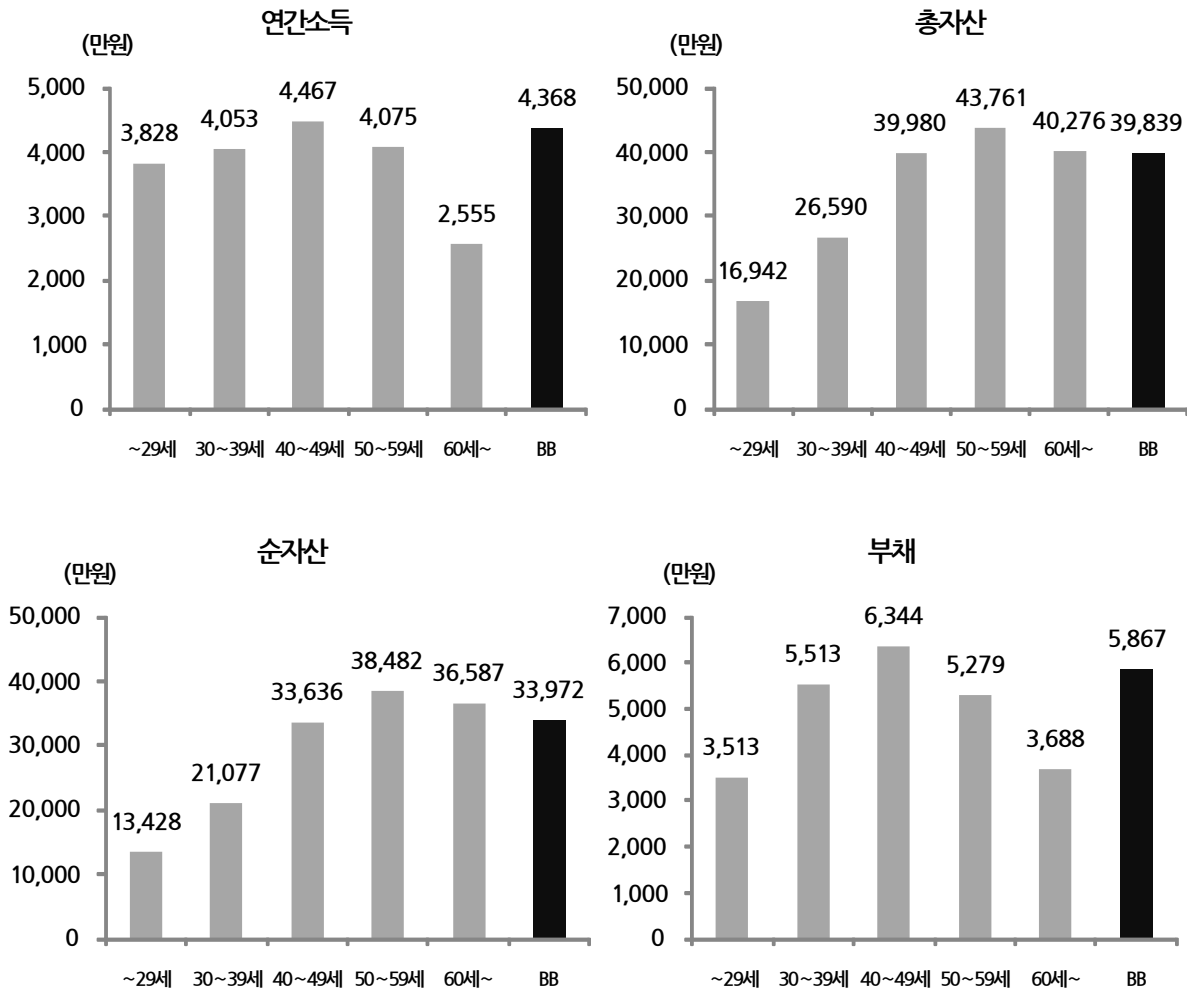
□ 부동산자산(주택+주택 이외)은 50대가 가장 높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는 50대에 비해 주택 이외의 자산을 적게 보유

- 50대까지 부동산 자산규모가 증가하다 60대부터는 주택자산 중심으로 부동산 자산규모가 감소
 - 50대 가구주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2억 9,723만 원으로, 그중 주택 자산이 55.4%를 차지
 - 60대 가구주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50대에 비해 주택자산이 감소하면서 2억 7,027만 원으로 축소

49)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사무실, 빌딩) 등 실물자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주택시장 이외의 부분은 인구요인보다 경기요인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주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분석

50) 한편, 부채가 40대의 4,676만 원에서 50대에 2,637만 원, 60대에 2,132만 원으로 하락한 점에 비춰볼 때, 50대부터 가계부채 상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주택 소유 가구의 연령대별 가계 재무 분포



주: BB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서 2006년 당시 만 43~51세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는 부동산 자산 중 약 63%를 주택자산으로 보유
 - 부동산 자산은 2억 3,606만 원으로, 주택자산과 주택 이외의 자산이 각각 1억 4,743만 원(63%), 8,863만 원(37%)을 차지
 - 특히, 주택 이외의 자산은 50대 연령층에 비해 약 5,000만 원 적게 보유⁵¹⁾⁵²⁾

51) 한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 이외의 자산운용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거나 노후를 준비하는 경향. 홍종문, 이주형 (2007)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 수요함수를 추정해, 60대 이후 노년층의 추정계수가 30~40대 젊은 층의 추정계수보다 크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이를 입증(홍종문·이주형 (2007). “주택가격 안정에 관한 연구-인구구조 및 경제변수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15(2), 133-148.)

52) 주택소유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유사한 흐름을 시현

가구주 연령대별 부동산자산 구성

(단위: 만 원, %)

구분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BB
전체 가구						
전체 부동산자산(a)	2,138	11,598	22,597	29,723	27,072	23,606
주택자산(b)	1,673	8,602	14,345	16,471	13,934	14,743
주택 이외의 자산(c)	2,138	11,598	22,597	29,723	27,072	23,606
주택자산 비중(b/a)	78.3	74.2	63.5	55.4	51.5	62.5
주택소유가구						
전체 부동산자산(a)	13,549	19,915	31,616	35,660	34,467	31,533
주택자산(b)	11,239	15,655	20,584	20,305	18,052	20,180
주택 이외의 자산(c)	2,310	4,260	11,032	15,355	16,416	11,353
주택자산 비중(b/a)	83.0	78.6	65.1	56.9	52.4	64.0

주: BB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서 2006년 당시 만 43~51세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은퇴 이후 주택처분 가능성을 점검

- 동 세대의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동 세대가 세대 주인 가구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통해 은퇴 이후 주택처분 가능성을 점검⁵³⁾
 - 가계부채 증가로 향후 채무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확산
 - 2009년 3/4분기 말 현재 가계금융부채(자금순환 기준)는 894조 원
 -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46.4%로, 유동성 제약 발생 시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
 -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도 부채를 활용하여 주택을 마련한 세대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 중 약 73%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 가구 중 96%가 부채를 보유⁵⁴⁾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는 30~40대에 비해 가계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나 은퇴 이후 점진적으로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해질 우려도 상존

53)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가계소득 감소는 소유부동산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시장 내 부동산물량 공급 과다로 가치하락을 초래하는 등 연쇄효과를 유발할 가능성

54) '가계자산조사'에서는 금융기관 대출을 용도별로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채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

- 전체적으로는 30~40대 가구의 가계 재무건전성이 가장 취약
 - 40대 가구주 가구의 가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Debt to Income, DTI)이 94%로 최고
 - 특히, 30~40대 가구주 가구 중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구는 DTI가 105% 내외 수준까지 상승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경우에도 부채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은퇴 이후 부채상환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수 있음을 시사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⁵⁵⁾의 평균 DTI는 약 88% 수준⁵⁶⁾
 - 특히, 주택을 소유하면서 부채가 있는 가구의 DTI는 100%를 상회

연령대별 DTI

(단위: 만 원, %)

구분	30-	30+	40+	50+	60+	BB	계
전체 가구							
금융부채(a)	901	3,000	3,763	3,257	1,781	3,477	2,881
연가계소득(b)	2,638	3,676	4,001	3,807	2,282	3,954	3,421
DTI(a/b)	34.2	81.6	94.1	85.6	78.0	87.9	84.2
주택소유가구							
금융부채(a)	2,940	4,236	4,676	3,602	2,132	4,221	3,650
연가계소득(b)	3,828	4,053	4,467	4,075	2,555	4,368	3,793
DTI(a/b)	76.8	104.5	104.7	88.4	83.4	96.6	96.2
주택소유 및 부채보유가구							
금융부채(a)	3,020	4,323	4,818	3,888	3,176	4,373	4,133
연가계소득(b)	3,878	4,054	4,514	4,203	3,165	4,420	4,071
DTI(a/b)	77.9	106.6	106.7	92.5	100.3	98.9	101.5

주: 1) 금융부채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채액을 의미

2) DTI는 편의상 %로 환산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 중 6.9%만이 주택처분압력에 직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 중 6.9%는 주택처

55) 가계자산조사 자료에 사용된 전체 베이비붐 세대 가구는 2,266가구이고, 그중 주택 소유 가구는 1,726가구, 주택소유 및 부채보유를 겸한 가구는 1,668가구

56) 소득 대비 금융부채뿐만 아니라 순금융부채(금융부채-금융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평균적으로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가구별 세부 분석에서만 활용

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⁵⁷⁾)

- DTI 기준으로 볼 때,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 중 6.9%⁵⁸⁾가 유동성 제약 발생 시 주택처분 가능성이 높은 위험가구
 - DTI가 3 이상인 가구는 통상적으로 위험대출군에 속해 외부차입이 쉽지 않은 가구로 해석⁵⁹⁾
- 소득 대비 순부채(Net Debt to Income, NDTI)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 조정압력이 높아질 경우 주택을 처분할 확률이 높은 가구는 약 1.2%
 - NDTI가 2 이상인 가구는 순부채가 2년 동안의 가구소득을 상회하기 때문에, 소득급감 시 주택처분 위험성이 높은 가구로 간주⁶⁰⁾
- 특히, 주택을 처분할 확률이 높은 가구(전체 가구 중 약 1.2%)가 주로 중소득층 이하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
 - NDTI가 2 이상인 가구 중 연평균 가구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거나 3,000만~6,000만 원인 가구가 전체 가구 대비 각각 0.4%, 0.1%를 차지

주택 및 부채 보유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DTI & NDTI 분포

(단위: %)

연간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비중 (전 가구 내 비중)	연간소득 대비 순부채 비율(NDTI)	비중 (전 가구 내 비중)
0~1	60.3 (11.3)	< 0	59.2 (10.4)
1~2	24.8 (4.6)	0-1	25.6 (5.0)
2~3	7.9 (1.4)	1-2	8.9 (1.9)
3+	6.9 (1.3)	2+	6.1 (1.2)
계	100 (18.7)	계	100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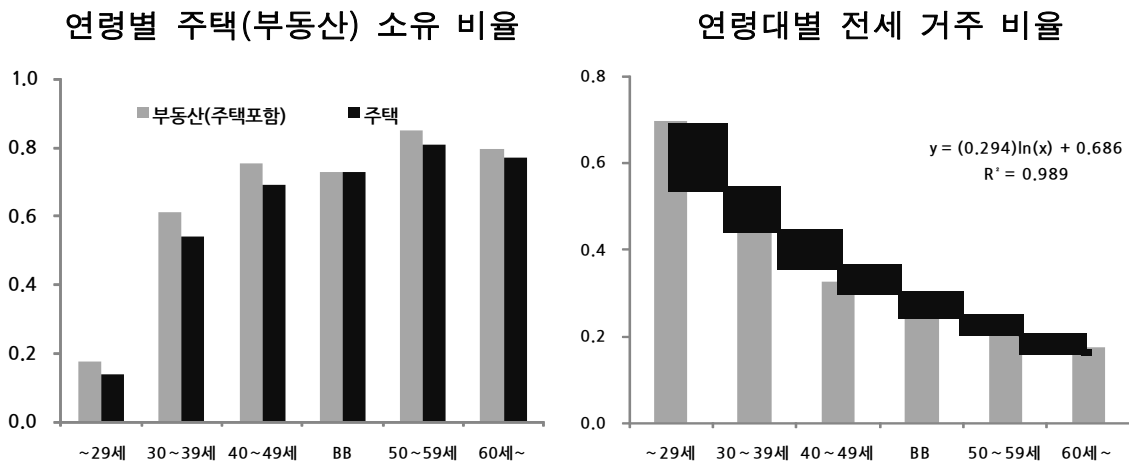
주: ()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57) 부채상환부담 가중에 따른 주택처분은 주택소유 및 부채보유를 겸한 가구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 가구를 중심으로 분석
 58)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이들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59) “은행 및 재무상담가들은 대출심사 시 ‘간편 기준’(Rule of thumb)으로 세전소득 대비 3배 이상을 대출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통상 4배에서 5배 이상은 위험대출로 간주하는 경향“ (유경원 (2010).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분석: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금융경제논총 2010-2). 한국은행.)
 60) 주택처분의 기준은 개별가구마다 상이하여 이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DTI 3 이상인 가구가 위험대출가구로 통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NDTI 2 이상을 주택처분의 분계점으로 잡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연간소득에 준하는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

고령층까지 주택보유 성향이 유지

- 연령이 높아져도 주택보유 경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때,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즉각적인 주택처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해석
 - 세대주 나이가 60대 초반에 들어서야 주택 및 부동산(주택+주택 이외) 보유 경향이 다소 완화
 - 50대 세대주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85%로 가장 높았음
 - 주택 소유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은 62세로, 약 90%의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
 - 이는 평균 퇴직 시점이 50대 중반임을 감안할 때, 퇴직 이후 곧바로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을 시사
 - 또한, 나이가 들수록 전세 거주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 이후 주택을 처분하고 전세로 전환하는 거주형태의 변화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
 - 전세거주율은 50대 20%, 60대에서 18%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하락⁶¹⁾
 - 2006년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전세 거주율은 약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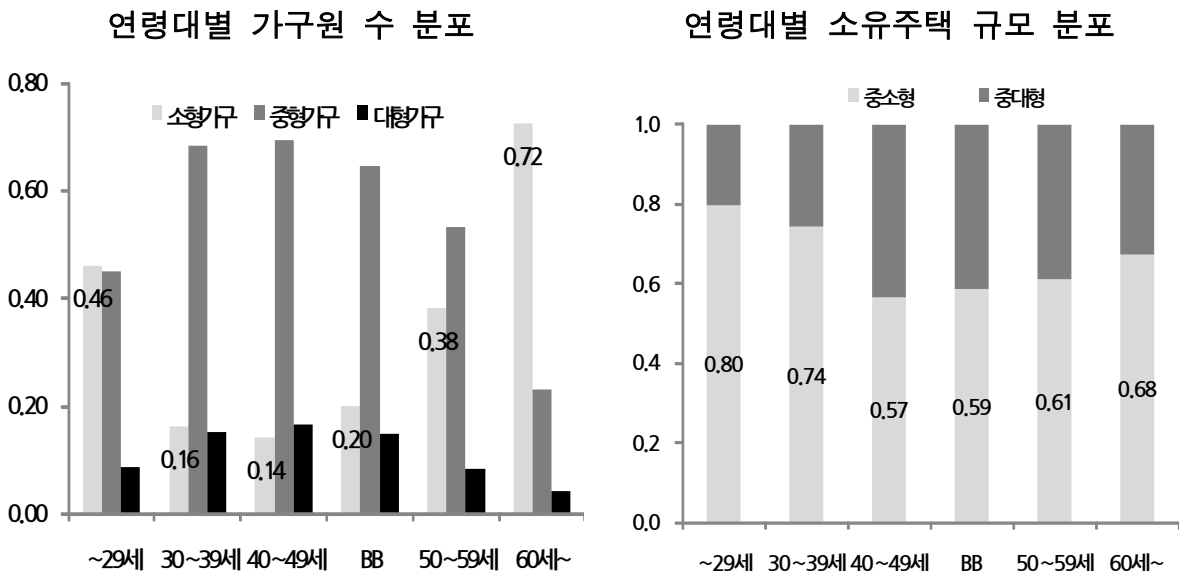


주: BB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서 2006년 당시 만 43~51세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61)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수요 전망을 통해 임차 가구의 경우 고령자 집단 연령으로 갈수록 주택수요가 하락한다는 조운성 외(2008)의 결과와 일치(조운성, 이주형 (2008).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수요 전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825-832), 10월 31일~11월 1일. 대구대학교.)

가구원 수 감소에 따른 거주규모 축소도 60대 이후 시작

-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거주규모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당분간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
 - 세대주 나이 기준으로 60대부터 가구원 수의 감소가 본격화되고, 이 시점부터 중소형 주택⁶²⁾의 선호도가 상승
 - 자녀의 교육과 혼인이 일단락되는 60대 세대주 가구에서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상승(0.61→0.68)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가 3~4인의 중형가구 중심인 점을 고려할 때, 은퇴 직후 주택규모의 변화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는 소형가구(1~2인)가 20%, 중형가구(3~4인)가 65%, 대형가구(5인 이상)가 15%
 - 베이비붐 세대의 소형주택 거주비율(0.59)이 50대의 동 비율(0.61)과 유사한 점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직후 거주이동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



주: 가구원 수 기준으로 소형가구는 1~2인, 중형가구는 3~4인, 대형가구는 5인 이상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62) 중소형아파트 세제 대책 시 기준(전용면적 25.7평형)을 참조하여 26평형 이상을 중대형주택으로 정의하고 그 이하는 중소형으로 정의

주택수요도 60대 이후까지 지속

- 주택처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로 M-W 모형을 3가지 형태로 변형하여 주택수요함수를 추정
 - M-W는 비교적 예측이 가능한 연령별 인구구조만을 사용하여 주택수요를 분석
 - 주택의 총량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수요 대신 특정 연령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추정하고 예측
 - 이하에서는 세대주의 연령, 가구의 인구, 경제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M-W 모형을 수정하여 추정
 - (연령특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세대주의 연령대(5세 단위)를 연령별 인구구조 대신 사용
 - (인구특성) 다만, M-W 모형처럼 가구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세대주의 성, 전체 가족 수, 배우자 유무를 고려
 - (경제특성) 주택수요의 핵심적 요인인 소득 및 주거비용을 고려
-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까지 주택수요가 지속⁶³⁾
 - 세대주의 연령만을 고려 시(모형1), 55~59세 연령대에서 주택수요가 정점에 도달⁶⁴⁾
 - 미국의 경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주택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 다소 낮은 연령까지 지속되는 경향
 - M-W 모형에서처럼 가구원의 연령구조를 고려한 결과(모형2), 60~64세 연령대에서 추정계수 값이 높게 나타남
 - 주택수요가 60대 초반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통해 세대주가 평균 은퇴 시점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

63) M-W 모형 및 수정 모형은 부록 참조

64) M-W 모형이 인구의 연령별 분포에 대한 정보만을 이용하여 총 주택수요함수를 파악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세대주의 연령별 분포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계수에 대한 원래의 값(true value)에 대한 관심보다 가장 좋은 예측치를 구하는 데 관심이 있어 상수항을 제외하고 추정

- 소득과 주거비용을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모형3)를 통해 노년층의 주택 수요가 60대 후반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⁶⁵⁾
 - 고령자 연령대인 65~69세까지도 주택수요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상승
 -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주택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과 상반되며, 주택수요가 그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주택수요 모형 추정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상수항	-	-	-	-	6.1	12.1
25-29세	15.4	29.9	8.9	17.1	2.4	3.7
30-34세	17.7	59.7	8.2	17.9	2.0	3.7
35-39세	19.7	63.1	9.4	19.9	3.1	5.6
40-44세	21.2	71.7	10.6	22.9	4.2	7.5
45-49세	21.4	61.4	11.9	26.9	5.3	9.5
50-54세	21.6	57.6	12.7	28.7	5.8	10.0
55-59세	22.3	51.6	13.9	27.2	7.1	11.3
60-64세	22.1	52.2	14.8	29.9	8.3	13.5
65-69세	21.4	37.8	14.6	25.4	8.7	12.8
70세 이상	19.5	38.7	14.2	28.5	8.4	13.1
가족 수	-	-	2.0	18.3	1.5	12.0
남자세대주	-	-	1.1	4.0	0.4	1.3
배우자유	-	-	2.5	7.3	2.3	6.7
가구소득	-	-	-	-	0.8	4.8
주거비용	-	-	-	-	-0.2	-2.2
R2	0.844	-	0.867	-	0.269	-
N	8275	-	8275	-	8275	-

주: 25세 미만은 기준 그룹으로 사용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주택가격 결정에는 소득, 주택공급 여건 등도 중요한 요소

장래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주택가격 결정방정식을 추정

65) 연령층에 따라 거주주택 종류(예를 들면 아파트 vs. 단독/연립주택)에 대한 선호가 변화하면 주택수요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주주택 종류에 따라 분리하여 주택수요를 추정한 결과,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연령층에 관계없이 계속되는 반면, 단독/연립 주택에 대한 수요는 60대 중반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은 인구나 가구 구조 변화 중 어떤 요인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 한편에서는 주택수요의 주 연령층인 35~54세 인구 비중의 감소가 주택가격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다른 한편에서는 1인 내지 2인의 단독가구 증가가 기존 주택수요를 보완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세를 유지시킬 것이라고 주장
- 1986~2009년까지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주택가격 결정방정식을 추정
 - 주택가격이 공급, 수요, 인구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
 - 일반적인 주택가격추정식에 주택수요 주 연령층의 비중 변화/소형가구의 비중 변화를 추가해 이 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⁶⁶⁾

□ 추정 결과 주택가격은 수요·공급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됨을 확인

- 주택의 수요·공급 요인인 실질소득 및 건물건설투자는 모든 추정식에서 주택가격의 실질적 결정요인으로 작용
- 반면, 주택수요 주 연령층의 비중 변화나 소형가구의 비중은 주택가격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단, 주택공급이 인구구조/가구 수의 변화를 감안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인구구조나 가구 수의 변화가 간접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상존

□ 따라서 주택수요의 주 연령층 비중 변화나 소형가구의 비중만을 가지고 주택가격의 변화를 예상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해석상 주의가 요망⁶⁷⁾

66)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구구조나 가구 비중의 변화가 주택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이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 그러나 모형 정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안으로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이들 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67) 미국에서도 인구 비중의 변화가 주택가격 변화의 주요인이라고 주장한 Mankiw and Weil(1989)의 연구결과(2007년까지 주택가격이 47% 하락)에 대한 반론이 다수 제기

주택가격 추정

- ▷ 주택공급요인으로는 건물건설투자액(한국은행, ECOS.), 주택수요요인으로는 근로자가구의 평균 임금(통계청, KOSIS.), 인구구조적 요인은 전체 인구 중 35~54세 연령층 비중(또는 전체 가구 중 1인 및 2인 가구의 비중)을 이용하여 시계열분석(1986~2009년)을 실시
- ▷ 시계열변수의 정상성(stationarity)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단위근(unit root test) 검정을 실시
- ▷ 수준변수(level variable)의 단위근 검정 결과 모든 변수가 단위근이 있는 비정상계열로 나타났으나, 2차 차분 변수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없는 정상 시계열로 나타남

주택가격방정식 추정 결과

(추정식1)

$$\text{주택가격} = 0.400 + 27.8\log(\text{실질소득}) + 29.5\log(\text{건물건설투자})$$

(0.422) (1.845) (3.393)

(추정식2)

$$\text{주택가격} = 0.394 + 26.8\log(\text{실질소득}) + 29.5\log(\text{건물건설투자}) - 4.1\text{인구 비중}$$

(0.406) (1.727) (3.333) (-0.463)

(추정식3)

$$\text{주택가격} = 0.346 + 27.3\log(\text{실질소득}) + 28.9\log(\text{건물건설투자}) - 3.4\text{가구 비중}$$

(0.366) (1.820) (3.358) (-1.129)

* ()는 t값을 나타냄

4. 소결

은퇴 직후 보유주식을 곧바로 처분할 가능성은 제한적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보유주식을 일시에 대량 처분해 주식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
-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가구주 연령과 주식 보유 여부 및 보유금액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
- 주식 보유 가구를 기준을 할 때, 가구주 연령대별 주식 보유 비중은 역 U자형인 반면, 평균 주식보유금액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증가

-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주식 보유 가구의 소득 및 자산총액이 주식 미보유 가구의 경우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 나이가 60세 이상인 주식 보유 가구의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총액은 주식 미보유 가구보다 각각 3.7배, 2.6배나 많은 것으로 파악
-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계층이 나이가 들어도 주식을 처분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⁶⁸⁾
 - 개인투자자의 연령대별 주식시장 참여율은 역U자형을 나타내고 있으나, 50대 이상의 주식시장 참여율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
 - 개인투자자의 주식보유 비중은 50대를 넘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40대 이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

주택의 대량 처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

-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 재무상황, 고령층의 주택보유성향 및 주택수요를 감안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
 -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 재무상황이 타 연령대에 비해 그리 취약하지 않고, 가계부채 조정 시에도 장기간에 걸쳐 주택처분이 진행될 가능성
 -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대비 (순)금융부채 비율이 타 연령대와 유사
 - 가계부채 조정 시, 베이비붐 세대 가구 중 약 6%(전체 가구의 1.2~1.3%)가 10년에 걸쳐 주택을 처분할 전망
 - 한국에서는 60대 초반까지 주택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여 주택처분의 진행도 매우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50대 세대주 중 8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60대 초반이 되어서야 주택 소유 경향이 완화
 - 이는 평균 퇴직 시점이 50대 중반인 점을 감안할 때, 퇴직 이후 곧바로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

68) 2000~2009년 중 한국거래소의 개인투자자의 연령별/연도별 주식보유분포 결과

- 주택가격 또한 인구구조보다는 소득 및 주택공급 여건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주택가격 결정방정식 추정 결과, 주택가격은 수요요인인 실질소득과 공급요인인 건물건설투자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
 - 결국, 35~54세 인구 비중의 감소 또는 1인 내지 2인의 단독가구 수의 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간접적일 것임을 시사

고령화 시대 진입 이후 자산시장 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유의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자산수요 변화가 예상
- 금융자산시장 측면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은퇴 이후 삶을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 등 기회 요인이 상존
 -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각종 펀드, 연금 등에 대한 선호 증가로 경제 전체의 주식시장 참여율 상승 및 주식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
 - 퇴직연금 증가 등으로 주식시장 참여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또한, 향후 가계 특성이 주식보유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전체 가계의 주식보유 비중은 당초 우려만큼 크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

향후 개인 금융자산 보유 전망

(단위: %)

구분	현금·예금	유가증권	보험·연금	기타 금융자산
2015년	33.5	34.5	27.5	4.5
2020년	25.5	41.5	30.0	3.0

자료: 산은경제연구소 (2006). “고령화가 사회·경제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일단락되는 2020년 이후에도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
- 인구 수 감소와 더불어 가구 수 감소가 동반되면서 주택의 투자매력이 감소하고, 결국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가 진행될 가능성
 - 인구 수는 2018년부터, 가구 수는 2030년 이후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추정

주택 가격의 중장기적인 변동성 확대에 유의

- 중장기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주택처분 압력이 제고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필요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직접적으로 주택 가격의 급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에 진입한 이후에는 점진적인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이 제고될 가능성
 - 신규 수요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고착될 소지⁶⁹⁾
- 주택 이외에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감소로 인해 도심의 오피스 수요가 줄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
 - 인구감소 및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오피스 시장의 축소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
 - 최근 공급과잉 및 수요부족으로 사무실 공실률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는 이를 가속화시킬 가능성
 - 일본의 경우에도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주택시장보다는 오피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도출⁷⁰⁾

69)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이고, 은퇴 연령층(55세 이상)의 규모가 주요 주택수요자계층(35~54세 이하)의 비중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전후로 주택수급의 변화가 예상

70) 日本國會圖書館 (2007). “2007年問題—団塊の世代の退職をめぐって” (ISSUE BRIEF No. 561).

사무실 공실률 추이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전국(7대 도시)	6.4	5.3	8.3	9.4
서울	4.2	3.1	6.6	7.6

주: 2010년은 1/4분기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오피스빌딩 공실률.

IV. 국가재정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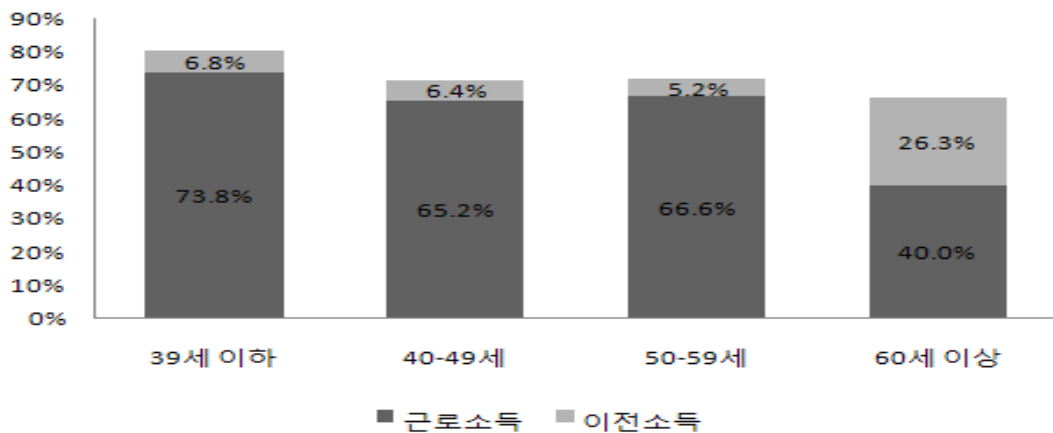
1. 연구배경

보건 및 복지 지출이 증대될 가능성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층에 근접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축소되면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전소득 의존이 심화

- 베이비붐 세대는 2010~2018년에 걸쳐서 은퇴 연령인 55세를 맞이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출되고 소득도 점차 하락
 - 50세 이후 고용률(2009년): 73.7%(50~54세) → 65.6%(55~59세) → 53.8%(60~64세) → 29.7%(65세 이상)
 - 40세 이후 근로자 월 소득(2009년): 224.7만 원(40~49세) → 213.8만 원(50~59세) → 155.1만 원(60~69세)
- 가계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65.2%에 달하는 상황에서 은퇴 연령을 지나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전소득 의존도가 증가
 -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는 소득의 26.3%를 이전소득에 의존

가구주 연령별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 비중 (2009년, 2인 이상)



주: 사업소득, 재산소득, 비경상소득은 제외

자료: 통계청 (2009). “가계동향조사.”

- 특히 고령자가 수혜를 많이 받는 연금, 보건 및 복지 관련 지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 수혜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은퇴 시 국민연금 지출 부담이 확대
 - 1988년 국민연금 설립 시기에 20~33세였던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을 2010년까지 22년 이상 적립하여 노령연금⁷¹⁾ 의무 적립기간인 20년을 넘김
 - 2015~2023년에 걸쳐서 완전노령연금 수혜 연령층인 60세 이상 연령대에 진입
 -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고령자의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의료보호 등 보건 지출도 확대될 우려
 - 2007년 건강보험지원 건강검진 결과 55세 이상 연령층은 고혈압(24.4%), 당뇨(11.5%), 신장질환(12.2%)이 의심되는 수검자 비중이 55세 이하보다 1.8~2.7배 높음⁷²⁾
 - 2009년 현재 55세 이상 연령층의 1인당 건강보험 지출은 150.3만 원으로 54세 이하 연령층의 4배에 달함⁷³⁾
 -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고용률 및 소득이 하락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복지 지출 부담도 증대
 - 2009년 현재 근로자 월 급여는 40~49세에는 224.7만 원인데 반해 50~59세는 213.8만 원, 60~69세는 155.1만 원으로 연령대에 따라 점차 하락
 - 2008년 현재 55세 이상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5.4%로 54세 이하(2.4%)에 비해 2.3배 높은 상황⁷⁴⁾

71) 적립기간 20년 이전에 수령 가능한 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고 55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한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한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신청 가능한 재직자 노령연금이 있으며 각각 완전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연금 급여를 감액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72)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2007년도 건강검진 결과분석.”

7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00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74) 보건복지가족부 (2009. 7.).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합리적인 재정 부담 예측을 통해 정책 방향 제시

- 고령자 비중 증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 9개 공공사업을 선별하여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르는 재정 부담을 예측
 - 고령자들이 수혜를 많이 받는 4개 공적연금, 3개 보건사업, 2개 복지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⁷⁵⁾
 - 분석 대상인 9개 공공사업의 사업비 지출은 2009년 현재 62.9조 원으로 GDP의 5.9%를 차지
 - 건강보험 지출 중에는 국고보조금만 재정 지출로 분류되므로 실제 8개 사업 관련 재정 지출은 GDP의 3.5%

고령자 관련 9개 사업

구분	사업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보건사업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생활안정

주: ‘노인생활안정’ 사업은 보건복지부 관할예산 중 ‘노인생활안정’으로 분류되는 사업(대한민국정부 (2009).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2010~2018년간 9개 사업의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추계할 필요
-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
 - 2018년 고령자 관련 지출을 최근 OECD 선진국의 고령자 관련 지출과 비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점검
 -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2~3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한 재정부담에 대응할 전략적인 재정운용 전략을 검토

75) 사업 선정은 박형수·류덕현 (2006.12)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한국조세연구원.; 문형표 外 (2004. 12).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인구고령화 협동연구과제 04-01). 한국개발연구원.; 박형수 外 (2008. 12).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20-01). 한국조세연구원을 참조

2. 파급효과 분석 및 전망

①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⁷⁶⁾

연금 지출⁷⁷⁾은 2009년 20.2조 원에서 2018년 50.4조 원으로 증가

□ 국민연금 지출은 2009년 8.1조 원에서 2018년 25.2조 원으로 급증하면서 연금 지출 증대를 주도⁷⁸⁾

- 4개 연금 지출 중 국민연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0.1%에서 2018년에는 50.5%로 대폭 증가
 -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수급인원이 2009년 256.6만 명에서 2020년에는 1.8배인 469.4만 명으로 급증
- 공무원 연금 지출은 2009년 8.0조 원에서 2018년 17.5조 원, 사학연금 지출은 2009년 1.6조 원에서 3.7조 원으로 증가⁷⁹⁾
 - 2010년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주로 신규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 분석에서 제외
-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저소득층 70%에게 지급될 경우 2009년 2.4조 원에서 2018년 5.3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
 - 연금액이 국민연금 수급 3년 전 평균소득의 5%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1인당 지출⁸⁰⁾이 국민연금 1인당 급여⁸¹⁾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

76) 군인연금은 체계적인 장기 분석이 아직 시도되지 않았고 향후 직업군인 종사인구 추정이 불투명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

77) 기초노령연금은 총지출이며,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은 총지출 중 경상지출, 용가지출, 자본지출을 제외한 지출. 기초노령연금에서 연금 지출을 제외한 지출은 2009년 현재 총지출 2.7조 원 중 3,449원(0.13%)에 불과 (국회예산정책처 (2009).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V [교육과학부 외].” 경상지출, 용가지출, 자본지출의 정의는 동 자료에 따름)

78)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79) 김재경·김정록·황정아 (2006).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09). “사학연금 재정분석연구.”

80) 2009년 1인당 지출은 2009년 예산 배정액 2.4조 원을 65세 이상 인구의 70%인 304.9만 명으로 나눈 값인 8만 1,000원을 사용 (국회예산정책처 (2009).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V [교육과학부 외].”; 통계청, KOSIS.)

81) 총 급여 지출을 총 수급인원으로 나눈 값(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9%에서 2018년 2.6%로 상승할 전망

- 국민연금 지출이 2009년 GDP의 0.8%에서 2018년 1.3%로 급증하여 GDP 대비 연금 비중 증가의 71.2%를 초래
- 2010~2013년간 경제성장률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장률 전망을, 2014년 이후에는 2008년 국민연금재정 계산의 성장률 전망을 수용
- 물가상승률은 2008년 국민연금재정 계산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수용하여 2010년 3.0%에서 2018년까지 2.4%로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가정

(단위: %)

구분	2010년	2011~2013년	2014~2015년	2016~2020년
실질성장률	4.0	5.0	4.1	4.1
물가상승률	3.0	2.7	2.7	2.4

자료: 기획재정부 (2009).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GDP 대비 공공연금 지출 추이 전망 (2009~2018년)

(단위: %)

연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계
2009	0.76	0.75	0.15	0.23	1.90
2010	0.91	0.75	0.12	0.24	2.02
2011	0.94	0.68	0.13	0.24	1.99
2012	0.98	0.72	0.13	0.25	2.07
2013	1.01	0.72	0.14	0.25	2.13
2014	1.06	0.75	0.15	0.26	2.21
2015	1.08	0.82	0.16	0.26	2.31
2016	1.14	0.82	0.17	0.26	2.39
2017	1.21	0.85	0.18	0.27	2.50
2018	1.27	0.89	0.19	0.27	2.62

자료: 2009년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지출은 국회예산정책처 (2009).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I [중점분석].” p. 229.; 2009년 기초연금 지출은 국회예산정책처 (2009).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V [교육과학부 외].”; 2010년 이후 국민연금 추정치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2010년 이후 공무원 연금 지출은 김재경·김정록·황정아 (2006).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p. 38.; 2010년 이후 사학연금 지출 추정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09). “사학연금 재정분석연구.” p. 68.

공공연금 지출 추이 전망 (2009~2018년, 경상가격)

(단위: 십억 원)

연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계
2009	8,108	8,013	1,613	2,470	20,203
2010	10,328	8,553	1,383	2,724	22,988
2011	11,557	8,292	1,561	2,984	24,394
2012	12,932	9,496	1,762	3,279	27,468
2013	14,470	10,345	1,989	3,592	30,396
2014	16,192	11,415	2,245	3,895	33,747
2015	17,623	13,357	2,534	4,207	37,721
2016	19,854	14,315	2,880	4,553	41,601
2017	22,367	15,705	3,273	4,930	46,275
2018	25,198	17,521	3,719	5,343	51,781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지출 추정 방법

* 국민연금 지출 (2010년 이후)

Step 1)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의 연금 급여 지출 추정치를 로그 선형 환 각 연도 연금 급여 지출 추정

Step 2) 2010~2015년, 2016~2020년간 총지출 중 연금 지출의 비중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총지출을 추산

* 기초노령연금 지출 (2010년 이후),

총지출 = 65세 이상 인구 × 0.7 × 수급자 1인당 지출

1) 65세 이상 인구는 통계청 KOSIS의 추정치를 이용

2) 2009년 수급자 1인당 지출은 2.4조 원/304.9만 명 (65세 이상 인구의 70%)=8.01만 원 적용

3) 2010년 이후 수급자 1인당 지출이 국민연금 1인당 급여 지출의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

② 보건사업: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장기요양보험

보건 지출⁸²⁾은 2009년 36.2조 원에서 2018년 76.7조 원으로 증가

□ 연금 지출 추정과 동일한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하고 수급자 1인당 급여가 1인당 경상 GDP 성장률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 건강보험은 2009년, 의료급여 및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수급자 연령별, 성별 1인당 급여 지급액으로부터 1인당 GDP의 성장률로 가정

82)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호 제도 지출은 기관운영비를 포괄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운영되는 의료보호제도는 운영비용이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급여 지급만을 포괄

- 운영비용을 포괄하기 위해서 추정된 급여 총액에 기준연도 총지출과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2018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총지출을 산출
- 건강보험은 2009년 총지출 31.2조 원⁸³⁾이 총 급여 지출 28.9조 원⁸⁴⁾의 1.08배이므로 급여 추정치에 1.08을 곱하여 총지출을 추산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총지출 5.5조 원이 총 급여 지출 4.3조 원⁸⁵⁾의 1.30배이므로 급여 추정치에 1.3을 곱하여 총지출을 추산

급여 지급액 추정 방식 86)

1. 건강보험/의료급여

$$G_t = \sum_a \sum_g b_{tag} P_{tag} N_{tag}$$

b_{tag} = 1인당 급여 지출

P_{tag} = 수급자/총인구 비중

N_{tag} = 총인구

a 는 연령, g 는 성별, t 는 연도를 나타냄

* 건강보험: $t = 2010 \sim 2018$, $a = 0, 1 \sim 4, 5 \sim 9, 10 \sim 14 \dots 80 \sim 84, 85+$, $g = m, f$ (남성, 여성)

** 의료급여: $t = 2009 \sim 2018$, $a = 0, 1 \sim 4, 5 \sim 9, 10 \sim 14 \dots 80 \sim 84, 85+$, $g = m, f$ (남성, 여성)

2. 의료급여

$$G_t = \sum_a \sum_g \sum_c b_{tagc} P_{tagc} N_{tagc}$$

b_{tagc} = 1인당 급여 지출

P_{tagc} = 수급자/총인구 비중

N_{tagc} = 총인구

a 는 연령, g 는 성별, c 는 장애등급, t 는 연도를 나타냄

***장기요양급여: $t = 2009 \sim 2018$, $a = 64$ 세 이하, 65세 이상, $g = m, f$ (남성, 여성), $c = 1 \sim 3$ (등급)

1) $b_{tag(c)}$ 는 기준연도(건강보험 2009년, 의료급여 및 장기요양보험 2008년) 이후 1인당 GDP 성장률로 증가

2) $P_{tag(c)}$ 는 건강보험은 2009년, 의료급여 및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수준으로 유지

3) $N_{tag(c)}$ 는 통계청 인구 전망 추계에 따라 변화

주: 사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기준연도 자료로 사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00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2008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08년 의료급여통계.”

8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009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

84) 지급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200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IV. 보험급여실적. “9. 연령별 진료 실적” 참조

85) 지급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2008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표 3-2. “요양급여비”를 참조

86) 추계 방식에 대해서는 문형표 외 (2004).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인구 고령화 협동연구과제 04-01). 한국개발연구원. 제7장을 참조

- 건강보험 지출은 2009년에서 2018년 기간 31.2조 원에서 2.2배인 67.3조 원으로 증가하여 보건 지출 증대를 주도하는 가운데 의료급여 및 장기요양보험 지출 비중이 상승
 - 5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출 증대가 건강보험 지출 증대를 주도
 - 동 기간 55세 이하 수급자 대상 급여 지출은 12.7조 원 증가하는 반면, 55세 이상 급여 지출은 31.9조 원 증가하여 지출 증가의 71.6%를 차지
 - 2009년 49.4%였던 55세 이상 수급자 대상 지출은 2018년에는 60.7%로 상승
 - 수급자 중 고령자 비중이 높은 보건 지출 중 의료급여 지출 비중은 12.6%에서 13.3%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1.6%에서 1.9%로 상승
 - 의료급여 지출은 4.6조 원에서 10.5조 원으로 2.3배, 장기요양보험제도 지출은 0.6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2.4배 증가
 - 의료급여 수급자의 26.4%,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94%를 차지해서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의 부담이 조기에 실현

보건 지출 수급자 연령별 분포

구분	건강보험 (2009년)	의료급여 (2008년)	장기요양보험 (2008년)
65세 미만	90.1%	73.6%	6.0%
65세 이상	9.9%	26.4%	94.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200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2008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08년 의료급여통계.”

- GDP 대비 보건 지출 규모는 2009년 3.4%에서 2018년 4.0%로 0.6%p 상승할 것으로 예상
 - 건강보험 지출이 2009년 GDP의 2.9%에서 3.4%로 0.5%p 증가하여 GDP 대비 보건 지출 상승분의 80.3%를 차지
 - GDP 대비 의료급여 지출은 2009년 0.43%에서 0.53%,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0.06%에서 0.07%로 상승

GDP 대비 보건 지출 전망 (2009~2018년)

(단위: %)

연도	건강보험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계
2009	2.93	0.43	0.06	3.42
2010	2.96	0.44	0.06	3.46
2011	3.01	0.45	0.06	3.52
2012	3.06	0.47	0.06	3.59
2013	3.12	0.48	0.06	3.66
2014	3.17	0.49	0.06	3.72
2015	3.23	0.50	0.07	3.79
2016	3.28	0.51	0.07	3.86
2017	3.34	0.52	0.07	3.93
2018	3.40	0.53	0.07	4.01

보건 지출 전망 (경상 가격, 2009~2018년)

(단위: 십억 원)

연도	건강보험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계
2009	31,185	4,598	592	36,374
2010	33,681	5,047	650	39,379
2011	36,951	5,577	721	43,248
2012	40,551	6,158	802	47,511
2013	44,507	6,796	893	52,197
2014	48,419	7,428	986	56,833
2015	52,668	8,113	1,084	61,865
2016	57,128	8,834	1,189	67,151
2017	61,986	9,623	1,308	72,917
2018	67,271	10,478	1,443	79,192

③ 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 제외), 노인생활안정

노인복지 지출은 2009년 6.3조 원에서 2018년 13.9조 원으로 증가

- 노인복지 지출은 의료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과 노인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로 구성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35.9%는 55세 이상이며, 노인생활안정 대책은 수혜층이 고령자에 국한되어 고령인구 증가에 민감
 - 의료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은 기초생활급여, 긴급복지, 자활지원으로 구성⁸⁷⁾
 - 노인생활안정대책은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지원, 노인관련기관지원, 노인복지지원 등을 포괄⁸⁸⁾
- 연금·보험 지출 추정과 동일한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수급자 1인당 지출이 1인당 경상 GDP 성장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
- 기초생활보장제도 1인당 지출은 2008년, 노인생활안정대책 1인당 지출은 2010년 이후 1인당 GDP 성장률 만큼 증가한다고 가정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인원의 성별, 연령별 구성 파악이 가능한 2008년 예산 지출 3.5조 원⁸⁹⁾을 2008년 수급인원 144만 명⁹⁰⁾으로 나눈 값을 2008년 1인당 지출로 사용
 - 노인생활안정대책 지출의 수급자는 파악이 어려워 2010년 예산 지출 3.0조 원⁹¹⁾을 2010년 65세 이상 인구 추정치 535.7만 명으로 나눈 값을 2010년 1인당 지출로 활용
-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은 0.59%에서 0.72%로 0.13%p 증가할 전망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은 GDP의 0.34%에서 0.37%로 완만히 증가하는 반면, 노인생활안정사업 지출은 0.25%에서 0.33%로 급격히 증가
 - 기초생활제도 수급자는 수급자 비중이 높은⁹²⁾ 20세 이하 연령층이 감소하므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7% 증가에 그침
 - 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36.2%나 증가

87) 기획재정부 (2009). “2009 나라살림 예산 개요.”

88) 김종두 (2009).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Ⅲ-Ⅱ. 사회복지분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89) 기획재정부 (2009). “2009 나라살림 예산 개요.”

90)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91) 김종두 (2009).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Ⅲ-Ⅱ. 사회복지분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92) 2008년 현재 20~54세 인구의 1.9%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반면 20세 이하의 3.5%, 55세 이상의 5.4%가 보호 대상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급여 지급액 추정 방식

1.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 (의료급여 제외)

$$G_t = b_t \sum_a \sum_g P_{tag} N_{tag}$$

b_t = 1인당 급여 지출

P_{tag} = 수급자/총인구 비중

N_{tag} = 총인구

a 는 연령, g 는 성별, t 는 연도를 나타냄

$t = 2009 \sim 2018, a = 0 \sim 4, 5 \sim 9, 10 \sim 14 \dots 75 \sim 79, 80+, g = m, f$ (남성, 여성)

2. 노인생활안정사업 지출

$$G_t = b_t N_t$$

b_t = 1인당 급여 지출

N_t = 65세 이상 인구

$t = 2011 \sim 2018$

가정

- 1) b_t 는 기준연도(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8년, 노인생활안정사업은 2010년) 이후 1인당 GDP 성장률로 증가
- 2) P_{tag} 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의 경우 2008년 수준으로 유지
- 3) $N_{t(ag)}$ 는 통계청 인구 전망 추계에 따라 변화

자료: 기획재정부 (2009). “2009 나라살림 예산 개요.”; 김종두 (2009).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Ⅲ-Ⅱ. 사회복지분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노인복지 지출 전망(2009~2018년)

연도	경상지출 (십억 원)			GDP 대비(%)		
	기초생활보장	노인생활안정	계	기초생활보장	노인생활안정	계
2009	3,642	2,668	6,310	0.34	0.25	0.6
2010	3,946	2,964	6,910	0.35	0.26	0.6
2011	4,300	3,164	7,465	0.35	0.26	0.6
2012	4,682	3,506	8,188	0.35	0.26	0.6
2013	5,093	3,916	9,010	0.36	0.27	0.6
2014	5,490	4,368	9,858	0.36	0.29	0.6
2015	5,914	4,857	10,771	0.36	0.30	0.7
2016	6,353	5,352	11,704	0.37	0.31	0.7
2017	6,827	5,918	12,745	0.37	0.32	0.7
2018	7,340	6,541	13,881	0.37	0.33	0.7

④ 재정 지출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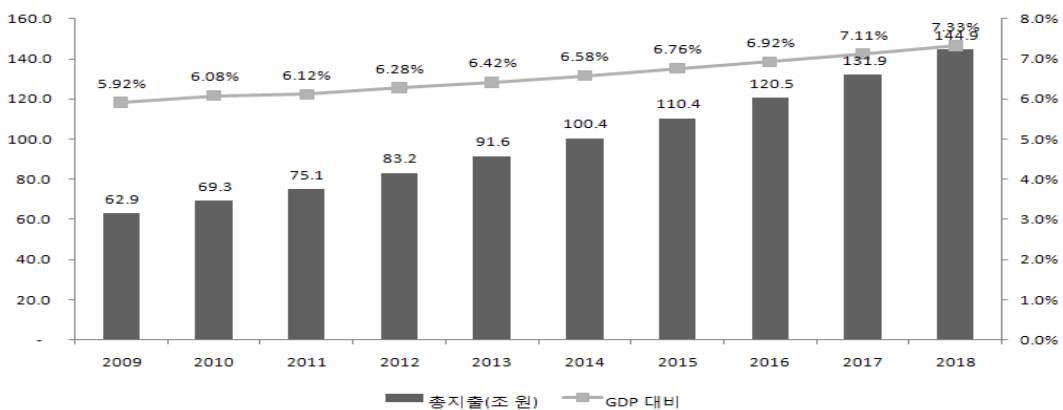
고령자 관련 공공 지출⁹³⁾ 증가: 5.9% (2009년) → 7.3% (2018년)

□ 경상지출은 2009년 62.9조 원에서 2018년 144.9조 원으로 연 9.7% 증가

- 보건지출 증대가 총지출 증대의 54.7%, 연금 지출 증대가 35.7%를 차지하여 전체 고령자 관련 지출 확대를 주도
- 연금 지출이 연 10.9%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그 결과 고령자 관련 재정 지출 중 연금 지출 비중이 2009년 32.1%에서 35.7%로 확대
 - 베이비붐 세대가 25~33세부터 국민연금을 장기간 적립해온 이후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서 높은 소득대체율의 수혜자가 되는 과정을 반영
 - 반면, 보건 부문 지출 비중은 57.8%에서 54.7%로, 노인복지 지출 비중은 10.0%에서 9.6%로 소폭 감소할 전망

□ GDP 대비 고령자 관련 공공 지출은 2009년 5.9%에서 2018년 7.3%로 1.4%p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⁹⁴⁾

고령자 관련 공공 지출 전망(2009~2018년, 경상기준 10억 원)



93) 현재 건강보험 지출은 통합 재정 지출에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 국고보조만이 포함되므로 건강보험 지출을 포괄하는 ‘공공 지출’ 을 분석 대상으로 함

94) 조세연구원은 2010~2020년의 10년간 1.5%p, 한국개발연구원은 2010~2020년간 연 0.2%p 이하로 전망 (문형표 외 (2004).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인구고령화 협동연구과제 04-01). 한국개발연구원.; 박형수 외 (2008).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20-01). 한국조세연구원

경상가격 고령자 관련 공공 지출

(단위: 십억 원)

연도	보건	노인복지	연금	계
2009	36,374	6,310	20,203	62,887
2010	39,379	6,910	22,988	69,277
2011	43,248	7,465	24,394	75,107
2012	47,511	8,188	27,468	83,167
2013	52,197	9,010	30,396	91,603
2014	56,833	9,858	33,747	100,437
2015	61,865	10,771	37,721	110,356
2016	67,151	11,704	41,601	120,457
2017	72,917	12,745	46,275	131,938
2018	79,192	13,881	51,781	144,854

GDP 대비 고령자 관련 공공 지출

(단위: %)

연도	보건	복지	연금	계
2009	3.4	0.6	1.9	5.9
2010	3.5	0.6	2.0	6.1
2011	3.5	0.6	2.0	6.1
2012	3.6	0.6	2.1	6.3
2013	3.7	0.6	2.1	6.4
2014	3.7	0.6	2.2	6.6
2015	3.8	0.7	2.3	6.8
2016	3.9	0.7	2.4	6.9
2017	3.9	0.7	2.5	7.1
2018	4.0	0.7	2.6	7.3

GDP 대비 고령자 관련 공공 지출 구성 변화

(단위: %)

연도	보건	복지	연금
2009	57.8	10.0	32.1
2010	56.8	10.0	33.2
2011	57.6	9.9	32.5
2012	57.1	9.8	33.0
2013	57.0	9.8	33.2
2014	56.6	9.8	33.6
2015	56.1	9.8	34.2
2016	55.7	9.7	34.5
2017	55.3	9.7	35.1
2018	54.7	9.6	35.7

- 건강보험 지출 중 국고지원만을 포괄하는 재정 지출은 GDP의 3.5%에서 4.7%로 1.2%p 확대될 전망
 - 현재 건강보험 지출 중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정부지원 14%, 담배부담금 6%)인 국고지원금만이 재정 지출로 포함되고 있는 상황
 -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인 국고지원이 유지되고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이 보험급여보다 적으면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경우를 상정
 - 보험료 예상수입은 2009년을 기준으로 1인당 보험료 수입(51만 9,000원⁹⁵)이 1인당 GDP와 같은 성장률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산
 - 보험료 수입은 2009년 26.2조 원에서 2018년 54.4조 원으로 증가하나 2014년부터는 국고지원금과 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감소할 전망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및 수지 전망 (경상가격)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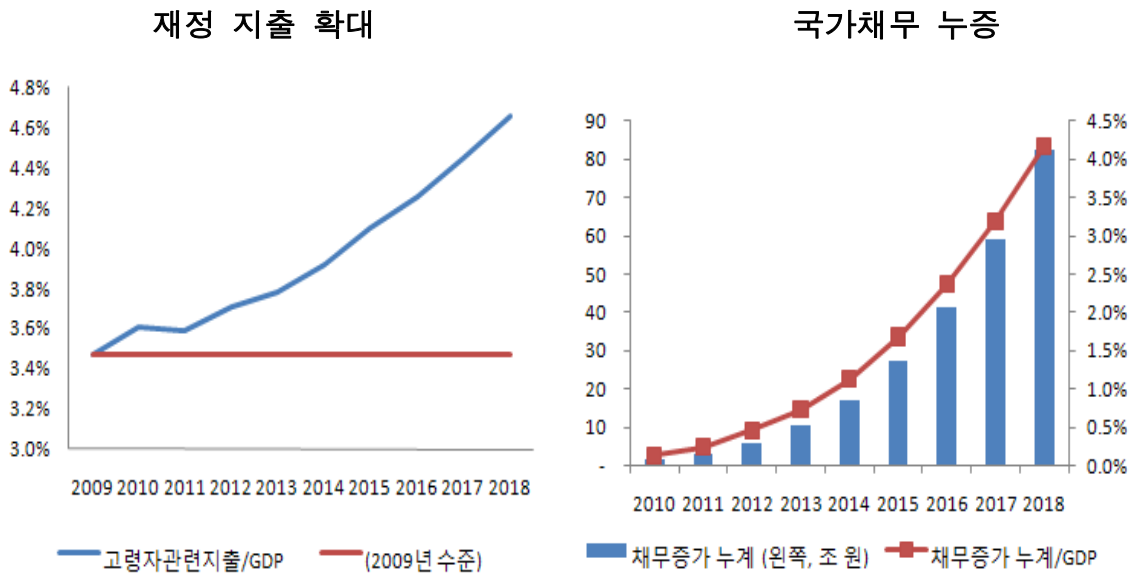
연도	보험료수입	국고보조	건강보험 수지 (보험료수입 +국고보조 -급여 지출)	국고보조+ 적자 보존
2009	24,973	5,233	2,483	5,233
2010	26,166	5,537	1,992	5,537
2011	27,686	5,969	1,552	5,969
2012	29,846	6,435	1,009	6,435
2013	32,175	6,937	352	6,937
2014	34,685	7,414	-411	7,826
2015	37,071	7,924	-1,292	9,216
2016	39,621	8,444	-2,307	10,751
2017	42,221	8,998	-3,489	12,487
2018	44,990	9,588	-4,849	14,437
2019	47,940	10,217	-6,401	16,619

-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채무가 2018년까지 82.5조 원 (2018년 GDP의 4.2%) 증가할 전망
 - GDP 대비 고령자 관련 지출이 2010~2018년간 연평균 9.1조 원의 추가 지출(GDP의 0.5%)이 발생할 가능성

95) 2009년 보험료 수입을 가입 인원으로 나눈 값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00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 추가 지출 규모는 연 1.6조(2010년)~23.3조 원(2018년), GDP 대비 0.1%~1.2%에 달할 전망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재정 지출 부담이 확대
-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없을 경우 고령자 관련 지출은 2009년 수준인 3.5%를 유지할 경우에 비해 국가채무가 2018년에는 82.5조 원 증대
- 초과 지출로 인한 국가채무의 누적적인 증가가 2018년에는 GDP의 4.2%에 이를 전망

재정 지출의 확대와 국가채무의 누증 (2010~2018년)



- 2009년 GDP 대비 통합 재정 지출 24%에 2%만 추가 투입하면 재정 지출 확대에 의한 국가채무의 증가 억제가 가능
- GDP 대비 국민부담률이 연 0.5%p만 증가하면 재정 지출 확대를 조달할 재원이 마련되므로 재정 부담은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 0.5%p 규모는 2009년 GDP 대비 통합재정 총수입 24.0%(255.3조 원)의 2% 정도에 해당

3. 소결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재정부담은 완만히 증가

- 기존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완료되는 2018년까지는 재정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전망
 - 2020년까지는 고령자 관련 재정 지출 증가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
 - 한국개발연구원은 2010~2020년 GDP 대비 고령자 관련 재정 지출 증가 폭이 연간 0.2%p 이하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⁹⁶⁾
 - 한국조세연구원은 보건 및 복지 지출이 2010년 GDP의 7.21%에서 2020년 8.9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⁹⁷⁾
 - 2~3차 베이비붐 세대⁹⁸⁾가 취업인구로 남아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이 가시화되지 않으므로 세원이 확대되어 재정 부담을 해소
 -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는 2018년부터 시작되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8년까지 72.9%로 2010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
 - 2011~2020년 경제성장률은 연 4%대로 예상되어 2010년 이전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10년	2010~2020년	2020~2030년	2030~2040년	2040~2050년
한국개발연구원 (2006)	4.6	4.2	2.9	1.6	0.7
국민연금 (2008)	4.8	4.1	2.8	1.7	1.2

자료: 문형표 외 (2004).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인구고령화 협동연구과제 04-01). 한국개발연구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96) 문형표 외 (2004).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인구고령화 협동연구과제 04-01). 한국개발연구원.

97) 박형수 외 (2008).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20-01). 한국조세연구원.

98) 2차 베이비붐은 1968~1974년, 3차는 1979~1982년 (최숙희, 藤井英彦 외 (2007). “한일고령화 현황과 파급효과”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JRI 공동연구.)

- 위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기보다는 부담이 적은 시기에 재정을 활용하여 추후의 재정 팽창에 대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 재정 지출 부담을 과대평가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취약계층 보호가 약화되어 후생 감소를 초래
 - 연구개발투자 등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되면 성장이 위축되어 세수기반이 축소
 -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면서 후생 수준이 하락
 - 단기적인 부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재정 활용 여력을 이용하여 2030년 이후 심화될 재정 지출 부담 증대에 대응할 필요
 - 2차 베이비붐 세대가 60대에 진입하는 2030년대 이후부터는 성장률이 2% 이하로 하락하면서 재정 부담이 본격화될 전망
 - GDP 대비 보건 및 복지 지출 전망: 8.9%(2020년) → 10.9%(2030년) → 13.4%(2040년) → 15.4%(2050년)⁹⁹⁾

성장률 저하 및 재정부담 확대 효과는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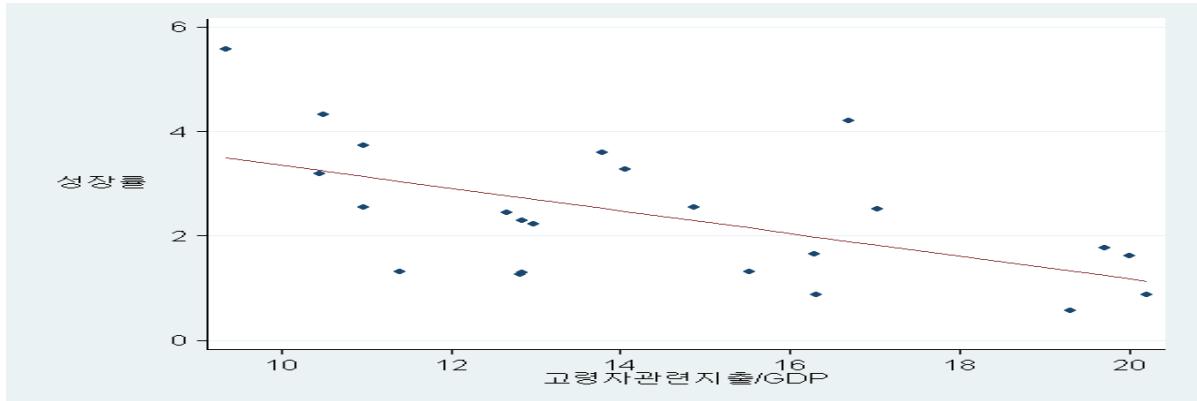
- OECD 선진국¹⁰⁰⁾들의 고령자 관련 지출과 성장률 간의 관계가 적용될 경우 2010~2018년 성장률은 0.04~0.31%로 연평균 0.15%p 하락
 - 2001~2005년 OECD 선진국 간에는 고령자 관련 공공 지출이 1%p 증가하면 성장률이 0.22%p 하락하는 관계가 존재
 - 동 기간 각국의 평균성장률을 2001~2005년 GDP 대비 고령자 관련 지출¹⁰¹⁾에 회귀하여 관계를 도출
 - 선진국들은 의료보험 지출이 재정에 포함되므로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지출을 포괄하는 공공 지출을 사용

99) 박형수 외 (2008).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20-01). 한국조세연구원.

100) 한국, 멕시코, 터키, 동부 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23개국이며 한국을 포함해도 분석결과는 유사

101) OECD, Social Expenditure DB에서 'OLD AGE', 'SURVIVORS', 'HEALTH' 항목의 총 공공 지출 합계

OECD 국가 간 성장률과 고령자 지출의 관계 (2001~2005년 평균)



회귀 분석 결과

$$\text{성장률} = 5.53 [5.33] - 0.22 [-3.10] \times \text{고령자관련지출/GDP}$$

$$N = 23, R^2 = 0.388, F = 13.39$$

[]안은 t-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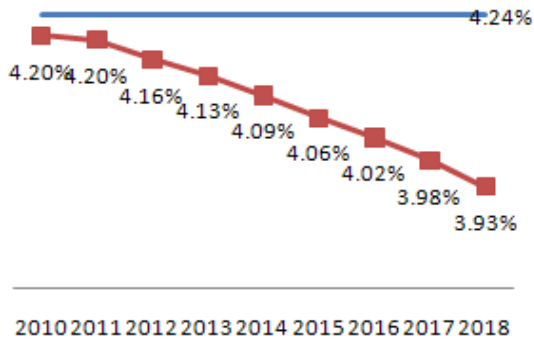
자료: OECD, OECD Stat; OECD, Social Expenditure DB.

- OECD 선진국 간의 관계를 적용하면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고령화 관련 지출 증대로 2010~2018년 성장률이 0.04~0.31%p 하락
 - 2010~2018년 성장률은 4.2~3.93%로 추정되어 고령화 관련 지출이 2009년 수준인 GDP의 5.92%인 경우보다 0.04~0.31%p 낮음
- 고령화 관련 지출 증대로 인한 성장률 하락에 따른 GDP 손실은 연평균 7.3조 원(2009년 가격)으로 2009년 GDP의 0.7%에 그칠 전망
 - 2010~2018년 고령화 관련 지출 증대로 인한 GDP 손실은 고령화 관련 지출이 2009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GDP의 0.04~1.32%에 불과
-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은퇴해도 성장률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고령자 관련 지출은 OECD 선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칠 전망
 - 은퇴에 따른 고령자 관련 지출 증대가 가장 심각한 2018년에도 성장률은 3.9%로 2001~2005년 OECD 선진국 평균 2.4%의 1.6배일 것으로 예상
 - 버블이 진행 중이던 아일랜드(5.6%), 아이슬란드(4.3%), 그리스(4.2%)를 제외한 여타 OECD 선진국의 성장률보다 높음

- 2018년 고령자 관련 지출은 GDP의 7.3%로 2001~2005년 OECD 국가 평균인 14.4%의 51.8%에 불과
- 2001~2005년 OECD 선진국 중 고령자 관련 지출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의 9.4%보다도 2.1%p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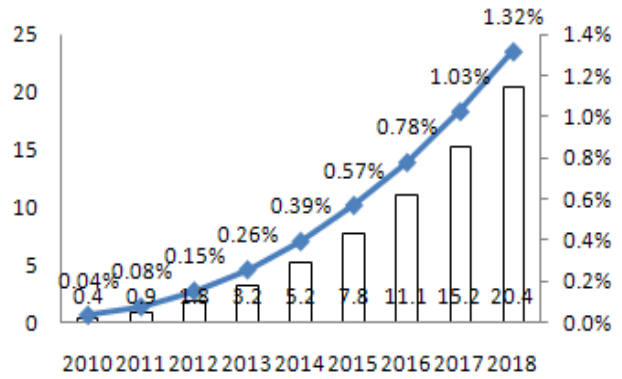
고령자 관련 지출 증대로 인한 성장 저하 효과

성장을 저하



— (2009년 수준 유지)
 ■ (베이비 부머 은퇴)

GDP 손실



□ (2009년 가격, 조원)
 ◆ (손실이 없을 경우의 GDP 대비)

V-1. 해외 사례 (일본)

1.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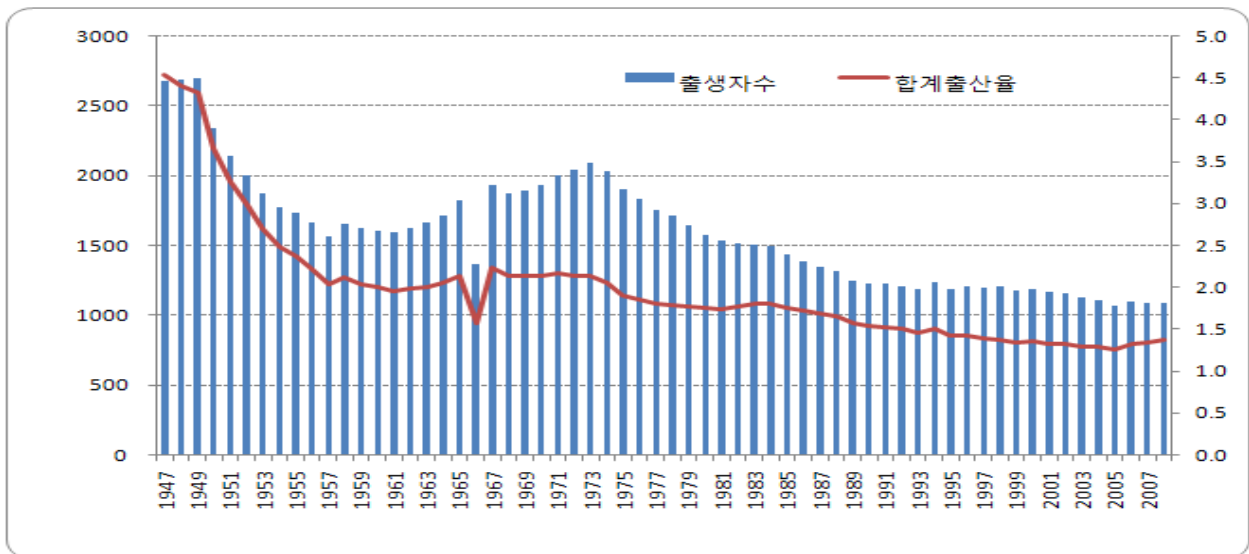
단카이 세대가 거대한 인구집단을 형성

□ 단카이 세대는 높은 출생자 수 및 출생률로 타 세대와 확연히 구분

- 단카이 세대는 1947~1949년 1차 베이비붐 기간 태어난 약 664만 명을 지칭하며 2009년 기준 총인구(1억 2,751만 명)의 약 5.21%
- 높은 출생률로 인해 동 세대의 前後 3년간 세대에 비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¹⁰²⁾
- 출산율도 전후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타 세대와 대비
 - 일본의 합계출산율¹⁰³⁾은 1947년에 4.54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08년 1.37명까지 하락

출생자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천 명, %)



자료: 厚生労働省 (2010. 1.) “人口動態統計.”

102) 총인구 대비 비중은 이전 3년간(1944~46년생)이 4.55%, 이후 3년간(1950~1952년생) 세대가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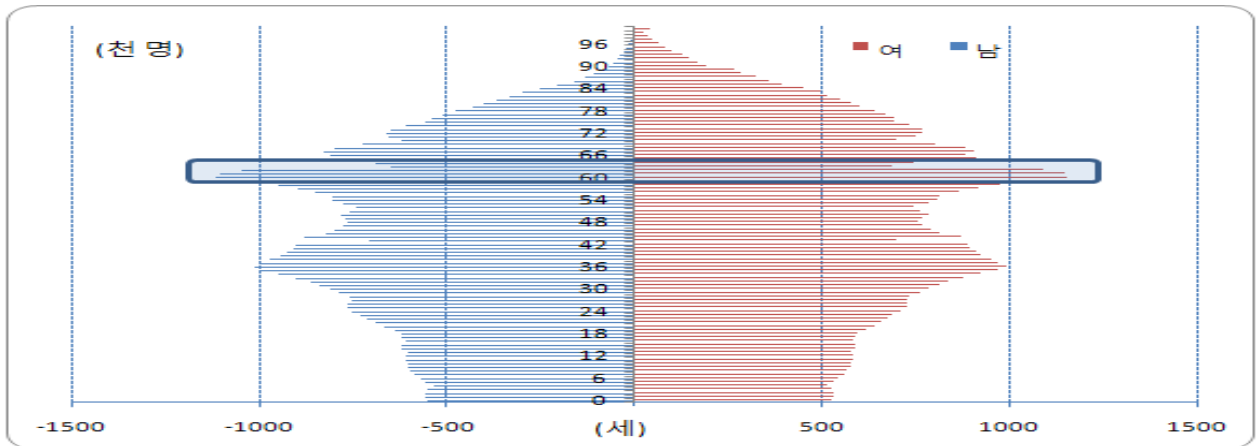
103) 합계출산율은 가임기간(15~49세) 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 수를 지칭(2005년 1.26명으로 최저치)

2012년부터 정년을 맞아 퇴직이 본격화

□ 단카이 세대는 2012년부터 65세 정년에 달해 퇴직을 시작

- 단카이 세대 약 664만 명은 2009년을 기준으로 226.6만 명이 60세에, 224.7만 명이 61세에, 213.1만 명이 62세에 도달
- 단카이 세대의 만형 격인 1947년생(62세) 근로자가 2012년에 일반적 기업 정년 연령인 65세에 달하면서 은퇴를 시작
- 2012~2014년 기간에 대부분의 단카이 세대가 정년을 맞아 기존의 직장을 이탈할 전망

일본의 인구 분포(2009년 기준)



자료: 總務省 統計局 (2009. 10.). "人口推計."

현재 대부분이 현역에서 근무 중

□ 동 세대의 대부분이 2010년 현재까지도 기업에 남아서 지속 근로

- 2007년부터 고령자 경제활동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단카이 세대가 근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¹⁰⁴⁾
- 60~64세의 경제활동참여율¹⁰⁵⁾: 2006년(55.1%)→2009년(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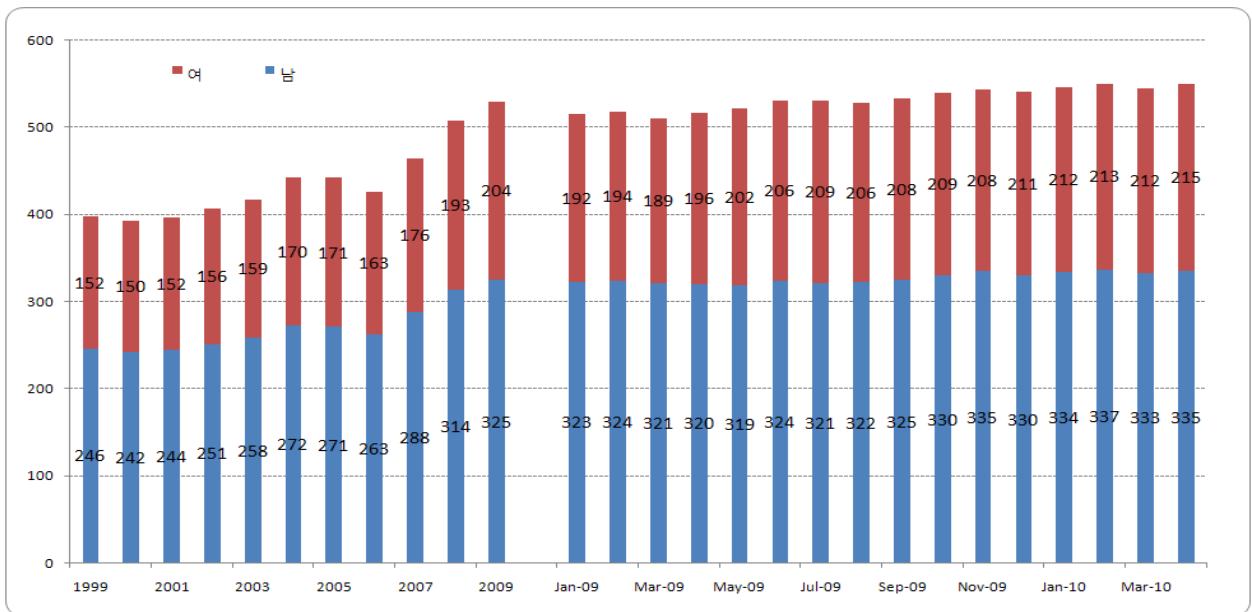
104) 2006년 4월 「고령자고용안정법(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약 90%의 기업이 계속 고용제도 및 재고용 제도의 도입을 추진

105) 해당 연령의 경제활동 인구를 해당 연령 인구로 나눈 수

- 단카이 세대가 속한 60~64세의 취업자 수도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특히 2007년에는 전년 대비 8.9%, 2008년 9.3%씩 각각 증가하면서 「고령자고용안정법」 이후의 노년층 취업자 수의 증가세를 반영

60~64세 취업자 수 추이

(만 명)



자료: 總務省 統計局 (2010. 4.). "勞動力調査."

□ 산업별로는 제조업 근무자가 가장 많으며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순으로 분포

- 2005년 국세조사¹⁰⁶⁾에 따르면 단카이 세대가 속한 55~59세의 총 취업자 수는 약 739만 명
- 이 중 제조업이 140.4만 명(19.0%), 도소매업이 129.5만 명(17.5%), 기타 서비스업이 103.5만 명(14.0%)로 상위를 차지
- 5년이 지난 2010년 현재의 전 세대 업종별 이동 행태를 볼 때,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의 이동이 소폭 이루어짐

106) 일본의 국세조사는 2010년에 실시되며 집계 결과는 2011년 말에 공표될 예정

노후 준비에 충분한 금융 및 실물 자산을 보유

- 단카이 세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에 퇴직금과 연금이 더해져 은퇴 이후에도 풍부한 금융자산을 보유
 - 단카이 세대의 총 개인 금융자산은 약 130조 엔으로 전체 개인 금융자산 1,409조 엔의 약 12.7%를 보유
 - 5년 연령별 개인 금융자산 195.6조 엔 중 단카이 세대의 인구 비중 66.1%를 곱해 추정¹⁰⁷⁾
 - 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소폭 조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2010년에 들어서 경기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이전 수준을 회복
 - 2012년부터 동 세대가 수령하는 약 50조 엔의 퇴직금도 개인 금융자산 확대에 일조할 전망
 - 2007~2009년 3년간 수령하는 퇴직금 예상 총액은 약 50조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¹⁰⁸⁾
- 연령계층별로 볼 때 단카이 세대의 평균 개인자산 총액은 약 5,000만 엔 이상
 - 세대주의 연령별 1세대당 자산총액을 살펴본 결과, 단카이 세대가 속한 60대의 개인자산은 약 5,556만 엔
 - 주택 보유율도 단카이 세대가 속한 60대의 경우 90% 이상¹⁰⁹⁾
 -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산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단카이 세대의 자산 총액도 조사 당시에 비해 증가했을 가능성
 - 2004년 조사 당시¹¹⁰⁾ 단카이 세대는 55~58세였으나 2010년 기준 61~63세로 당시 60대와 유사한 수준까지 늘어났을 가능성¹¹¹⁾

107) 2004년도 일본은행 資金循環, 總務省 家計調査 등에 근거해 제일생명연구소 추정

108) 熊野英生 (2005. 7. 5). “團塊マネー追跡, 高齢者貯蓄の向方”. 第一生命研究所.

109) 60대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의 보유율도 약 15%로 40대의 7.4%를 2배 이상 상회

110) 최근의 전국소비실태조사는 2009년 9~11월에 실시되었으며 가계자산에 관한 새로운 결과는 2011년 3월 공표 예정

111) 단카이 세대는 자녀교육비 부담이 크지 않고 주택 구입을 위한 부채 상황도 거의 마무리

연령계층별 가구당 자산액

(단위: 만 엔)

세대주 연령	자산합계	금융자산	부동산	내구재 등	연간수입
30대	1,459	-212	679	158	597
40대	2,712	148	1,514	171	777
50대	4,160	1,020	2,393	186	878
60대	5,556	1,884	2,955	173	624
70세 이상	5,961	2,026	3,499	117	542
평균	3,900	950	2,786	164	696

주: 내구재 등은 자동차 등 소비재 및 골프회원권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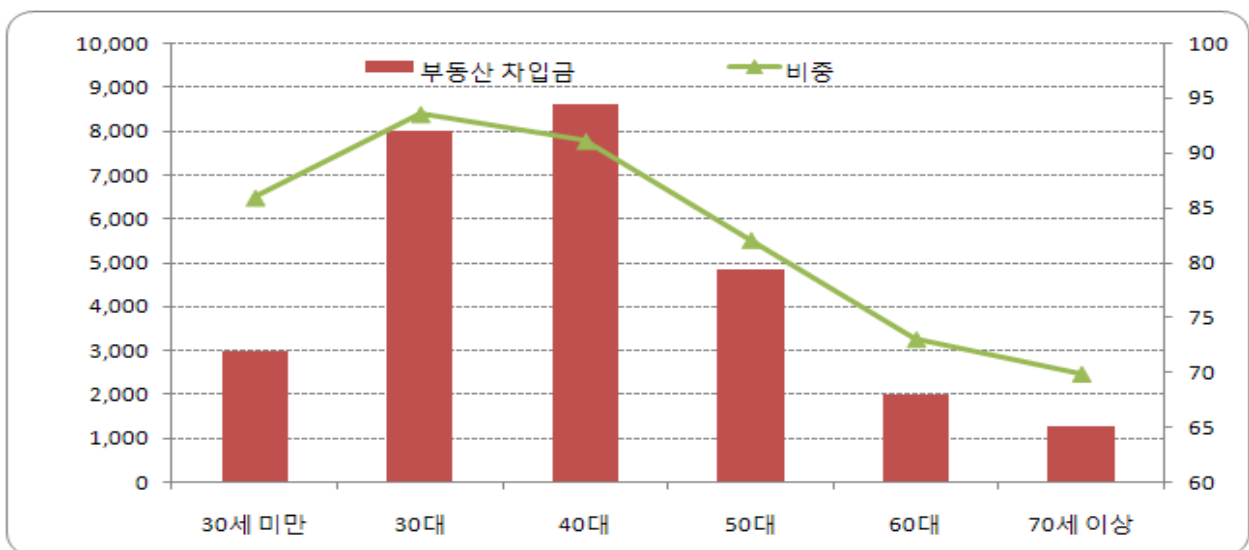
자료: 總務省 統計局 (2005). “2004年全國消費實態調査.”

□ 단카이 세대는 주택 및 토지 차입금 상환 부담이 적고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전 세대에 비해 적은 편

- 일본 가계부채 총액은 40대 세대주에서 최고를 기록하다가 점차 감소
· 단카이 세대가 속한 60대에 약 200만 엔 수준까지 감소
-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 또는 택지 구입에 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비용이며 60대의 경우 약 73%까지 비중이 축소

세대별 부동산 관련 부채 총액 및 비중

(천 엔, %)



주: 비중은 전체 부채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부채 규모

자료: 總務省 統計局 (2005). “2004年全國消費實態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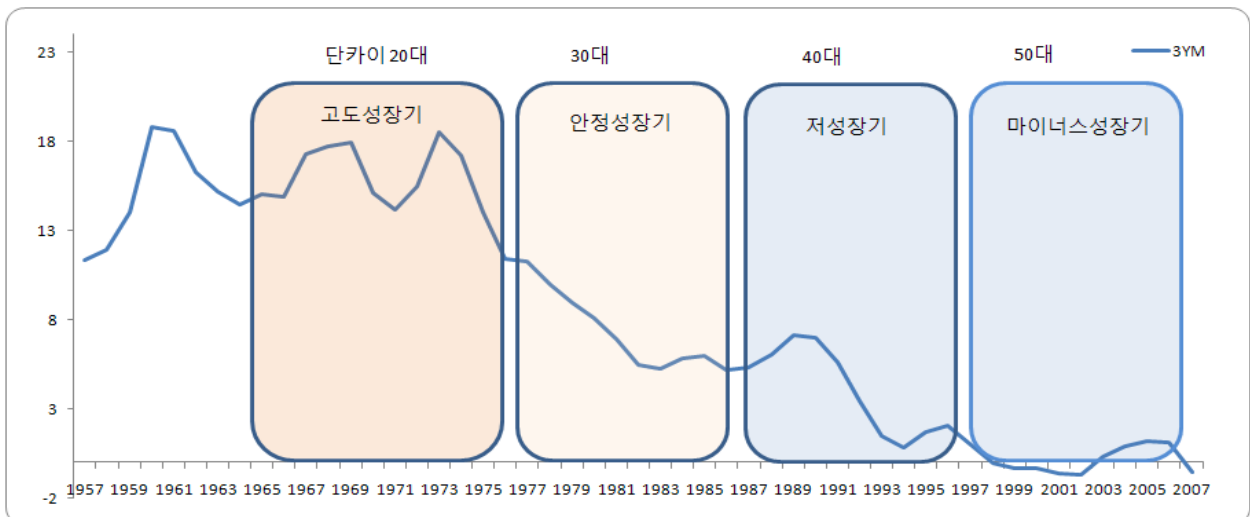
2. 단카이 세대의 특징

일본 경제 및 기업 발전과 궤적을 같이하며 성장

- 단카이 세대는 고도성장기 후기에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이후 일본 경제 및 기업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성장
 - 1965~1976년 고도성장기에 20대를 보내면서 취업과 결혼생활을 영위
 - 상당수의 단카이 세대가 이 시기에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주했으며, 이로 인해 도시에 주택난이 가중되면서 맨션 붐이 조성¹¹²⁾
 - 1965~1970년 약 57개월간 지속된 이자나기 호황기에는 3C(Car, Cooler, Color TV)를 구입하고 레저생활을 만끽
 - 1976~1987년은 일본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이행하는 시기였으며, 동 세대는 30대로서 자녀 양육으로 바쁜 시기를 보냄
 -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지방의 생활을 꿈꾸는 자연지향 의식이 성장

단카이 세대와 경제 성장

(전년 대비 %)



주: 경제성장률은 명목GDP 기준 (3YM은 3년)

자료: 內閣府 (2000). “國民經濟計算: 2000年度連鎖價格GDP需要項目別.”

112) 도시과밀화와 지방과소화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열도 개조론이 등장

- 1985~1996년은 경제가 서서히 低성장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단카이 세대는 30~40대로 자녀교육기에 해당
 - 버블 후유증과 내수 부족, 재고 및 설비 조정 등의 복합적인 불황이 일본경제를 강타
 - 당시 초등학교 5학년생을 전후로 많은 수의 단카이 주니어(2세)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들의 교육과 장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 1997~2007년은 기간 일본경제는 평성 대불황(1997~2001년)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정리해고로 실업자 360만 시대를 개막¹¹³⁾
 - 단카이 세대는 1990년대 이후의 장기 불황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2007년에는 60세 정년을 맞아 정년퇴직의 대상이 되는 등 격동의 시기를 보냄

과반수에 가까운 수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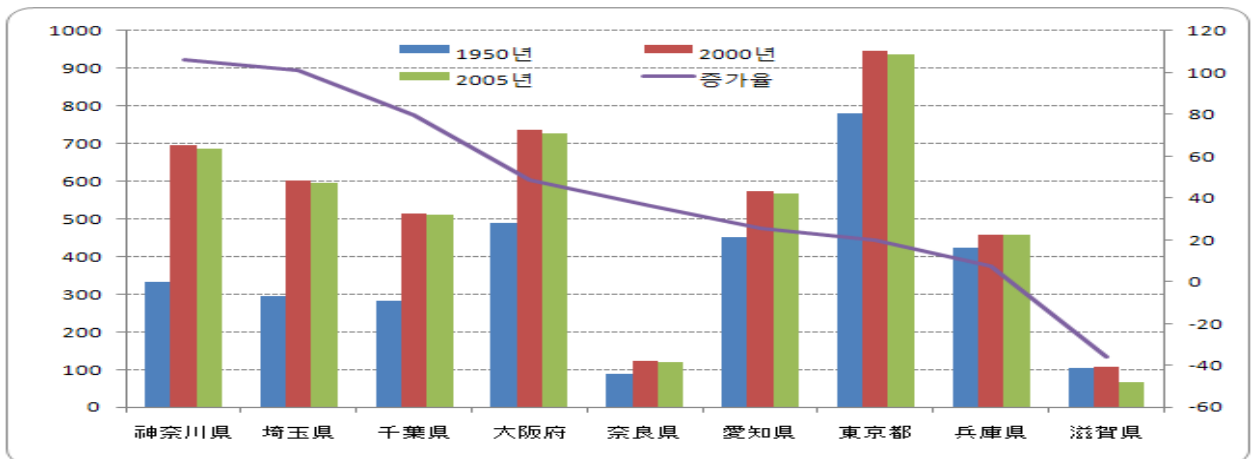
- 단카이 세대의 과반수가 일본의 고도 성장기인 1960년대 후반에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주한 후 정착
 - 단카이 세대가 출생한 시기인 1950년대 초에는 약 70%에 가까운 수가 지방권에 거주
 - 1950년도 국세조사에 따르면 동 세대가 속한 0~4세 거주 구성비는 지방권과 대도시권이 각각 68.2%, 31.8%로 2배 이상이 지방에 거주
 - 이후 50년간 이들 세대의 약 20%가 지방에서 대도시권으로 이주해 정착함으로써 단카이 세대는 곧 대도시권 생활자라는 인식이 정착
 - 2000년도 국세조사에서는 단카이 세대가 속한 50~54세의 거주지역 분포가 지방권과 대도시권이 각각 52.4%, 47.6%로 변화
 - 이후의 거주 이동을 고려하면 2010년 현재 과반수가 도시에 정착하고 있음을 시사

113) 2002~2007년 기간에는 고이즈미 정권하에서 전후 최장호황기를 경험

- 고도성장기를 맞이해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에서의 취업을 목적으로 많은 수의 단카이 세대가 상경
 - 동 세대가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1955~1975년은 일본의 고도성장기로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시기
 - 산업구조가 1차 산업 중심에서 2, 3차 산업으로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수요가 크게 확대
 - 청년기를 맞이한 지방 단카이 세대가 대도시로 이동
 - 특히 도쿄와 주변 3현(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동 세대의 비중이 집중적으로 확대¹¹⁴⁾
 - 현재에도 단카이 세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80만 명이 도쿄와 주변 3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¹¹⁵⁾
 - 다만 1980년 이후에는 새로운 주택지를 찾아서 도쿄 주변의 신흥주택지로 대거 이동하는 등 도쿄에서 근접 3현으로 분산

지역별 단카이 세대 증가 추이

(천 명, %)



주: 1) 단카이 세대는 1950년에 0~4세, 2000년에 50~54세, 2005년에 55~59세였음

2) 증가율은 1950년도 대비 2005년 기준 거주인구 수

자료: 總務省 (각 연도). “勢調査”.

114) 1965년 수도권의 단카이 세대 인구증가율은 5년 전 세대(10~14세) 대비 약 33.3% 증가했으며, 도쿄 (47.3%), 가나가와(37.6%) 순. 1970년에는 단카이 세대의 29%가 수도권에 집중

115) 2005년 기준 거주 인구 수에 해당 5세 계급의 단카이 세대 인구 비중 66.1%를 곱해 추정

- 단카이 세대는 은퇴 이후 귀농하기보다는 현재 거주지인 도심 또는 도심 근교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선호
 - 규모의 경제, 베이비붐 세대의 라이프 스타이지 등을 생각할 때 지방 이주보다는 도심 거주를 선호¹¹⁶⁾
 - 도시로 이주해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도심 생활에 익숙해진 세대
 - 편리한 상업시설과 풍부한 문화시설,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제가 정비된 도심과 수도권 거주를 선호
 - 퇴직 이후의 구직 활동을 고려할 때도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부를 선호
 - 자신의 간병을 위해 자녀의 거주지 근처에 거주하기를 희망

높은 사회 지향성으로 문화 변화를 주도

- 단카이 세대는 오랜 도시 생활과 축적된 자산을 통해 이전 시니어층 및 이후 장년층과는 다른 소비성향으로 소비문화를 주도
 - 단카이 세대는 고도성장기에 일본경제의 성장 주역을 담당하면서 축적된 자산으로 높은 소비성향을 보유
 - 1980년대 말 버블기에는 맨션, 자동차 등 고액 대형소비를 만끽
 -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적극적이고 높은 사회 지향성으로 소비문화에 끊임 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
 - 단카이 세대의 성장과 케를 같이해 유행 상품과 문화 등이 변천
- 결혼, 육아, 자녀교육, 부부 단위 독립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이지에 걸쳐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
 - 남성이 직장에서 수입을 얻고 여성이 가사 일을 맡는 분업형 근대가족의 형성을 주도

116) 가루이자와 등의 휴양지에서 단카이 세대의 2주택 구입에 따른 수요가 증대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부부 간 연령차가 적어 ‘친구부부’로 불리며, ‘뉴 패밀리’ 문화를 정착시킨 세대
- 회사의 ‘일’을 중심으로 생활함으로써 고도성장과 안정성장의 주역이 되기도 했으나 ‘회사인간117’, ‘일벌레’ 등으로 불리면서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함

단카이 세대의 성장과 新소비문화

연대	나이	성장	유행 상품
1950~1960년대	10대	청소년기	주간만화장간(1959년), TV만화 유행(1963년)
1970년대	20대	청년기(결혼)	구미패션(진, 미니스커트), 3C(TV, 차 등)
1980년대	30대	장년(육아)	여가, 레저 활동 유행, 인스턴트식품, 외식
1990년대	40대	장년(자녀교육)	맨션, 편의점, 대형할인점, 통신판매
2000년대	50대	노년(부부독립)	휴대전화, 컴퓨터 등 IT 기기

주: 2000년대의 소비는 젊은 층의 소비문화에 단카이 세대가 부응하는 형태

자료: 언론보도 종합

자아실현과 취업에 대한 욕구가 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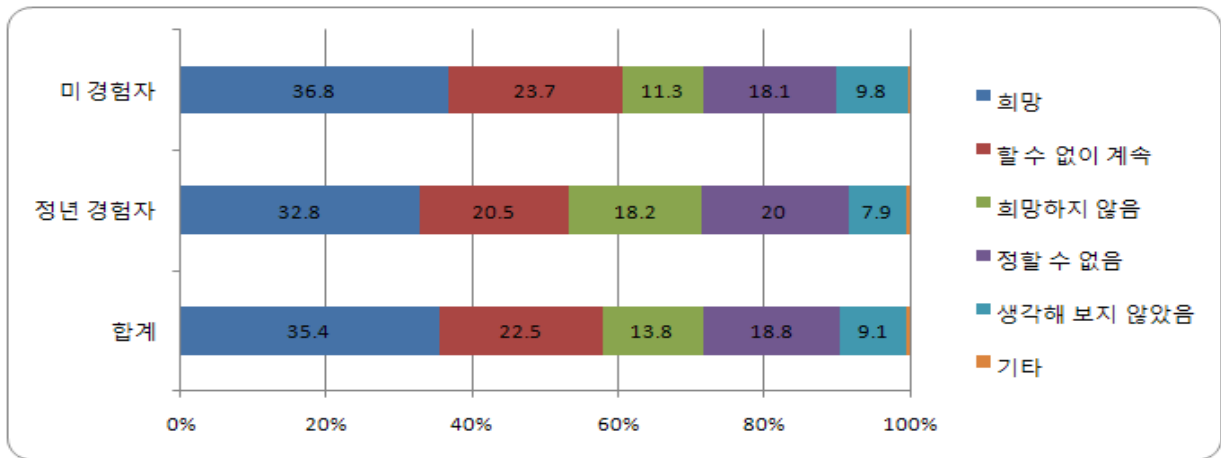
- 자신의 능력과 건강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은 세대
 - 단카이 세대 근로자의 상당수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근로를 지속하는 것으로 조사118)
 - 근로 이유로 약 70%가 ‘현재 및 장래의 생활을 위해’를 선택했지만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라는 답도 32.3%나 차지
 - 특히 정년 미경험자들은 정년 경험자에 비해 ‘일’ 자체보다는 건강과 인간관계, 자아실현 등을 중시
- 단카이 세대는 정년퇴직 이후 65세를 지나서도 취업을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등 일에 대한 욕구가 왕성

117) 단카이 세대 셀러리맨은 생활 기반을 특정 기업에 의존하고 있음을 꼬집는 말로 ‘사축(社畜)’, ‘회사의 개’ 등으로 비유되기도 함

118)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7). “団塊世代の就業生活ビジョン調査結果.”

- 기업 근로자의 향후 취업 희망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정년 후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응답자의 약 57.9%가 취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일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
- 취업희망 연령 조사에서도 ‘일할 수 있을 때까지’, ‘70세까지’ 등이 우세

기업 근로자의 향후 취업 희망



자료: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7). “団塊世代の就業生活ビジョン調査結果.”

왕성한 소비 의욕으로 마케팅의 주 타깃

- 단카이 세대가 퇴직금 수급 등으로 구매력이 커짐에 따라 이들을 겨냥한 기업들의 고객확보 경쟁이 치열
 - 풍부한 금융자산에 퇴직금이 더해져 단카이 세대의 구매력이 급상승
 - 은퇴 이전에는 ‘돈은 많지만 시간이 부족’해 소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은퇴 이후에는 여유로운 시간까지 확보
 - 일본기업들 사이에 단카이 마케팅이 성행할 정도로 단카이 세대가 일본 소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의 하나로 부상
 - 지방자체단체에서도 동 세대의 귀향을 겨냥한 유치 경쟁이 활발

3. 은퇴 파급효과

대량퇴직을 우려하는 ‘2012년 문제’가 다시 부각

□ 대량퇴직의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소위 ‘2012년 문제’가 재차 표면화

-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단카이 세대의 대량퇴직에 따른 노동력 부족, 기능전수 등의 문제가 소위 ‘2007년 문제’라 불리며 사회 이슈화¹¹⁹⁾
- 최근 들어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2007년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2012년 문제’가 재차 이슈화
 - ‘2007년 문제’는 정부의 고용대책¹²⁰⁾ 및 기업의 노력으로 65세 정년이 일 반화되면서 ‘2012년 문제’로 전환된 셈

□ 파급 효과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혼재되어 있으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

- 주요 부정적 요인으로는 노동력 부족 가속화, 부동산 침체 장기화, 사회보장비 지출 증대 등
 - 기타 기업의 퇴직금 부담, 기능 및 노하우 전수 미비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저하도 마이너스 요인
- 기업의 인건비 경감, 소비지출 확대, 신산업 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의 긍정적 측면도 존재
- 경제, 산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달라 종합적인 판단이 곤란하지만, 동 세대가 퇴직과 더불어 곧바로 초기 고령화 인구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2007년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

119) 日本國會圖書館 (2007). “2007年問題—団塊の世代の退職をめぐって” (ISSUE BRIEF No. 561).

120) 일본은 2004년 6월 「고용안정법(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정년 폐지 중 각 기업이 경영·노사 관행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도록 개정

1) 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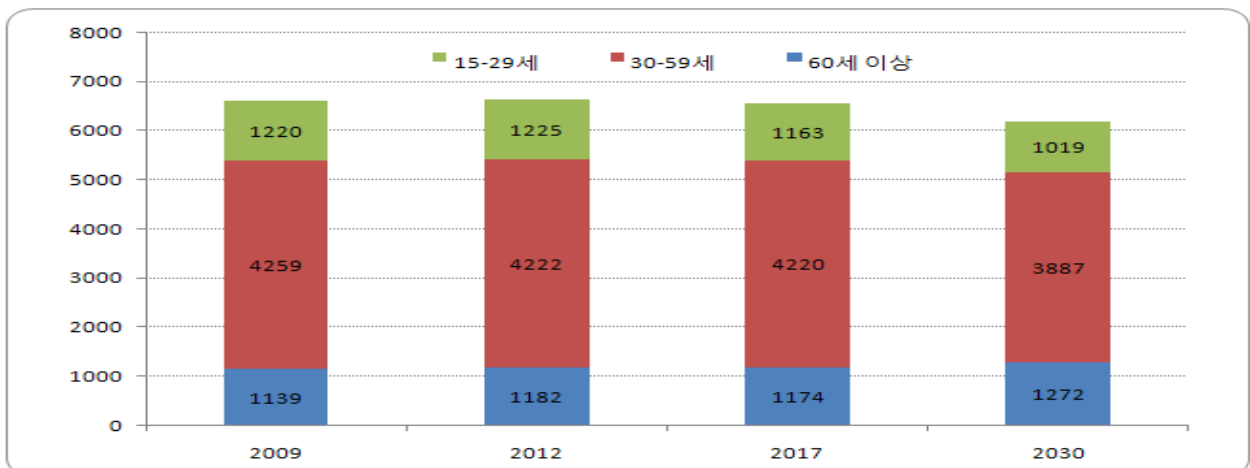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경제활력이 저하

□ 단카이 세대가 퇴직과 더불어 고령화 인구에 편입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우려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7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소지¹²¹⁾
 - 약 200만 명 이상의 동 세대 취업자가 2012년 이후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일터를 떠나며 2017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급격히 축소¹²²⁾
-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약 440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등 지속 성장에 부정적 영향¹²³⁾
 - 이는 적극적인 고용활성화 정책에 의해 노동시장 참여율이 제고된다는 것을 전제로 추정¹²⁴⁾

경제활동인구 추이 전망

(단위: 천 명)



자료: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8). “日本將來人口推計2010.”

121) 厚生勞動省 職業安定局 (2007). “雇傭政策研究會報告書.”

122) 總務省 統計局 (2008). “就業構造基本調査 2007年.”에서 60~64세 중 고용자 수가 약 376만 명(이 중 약 234만 명이 일반 상용 근로자(정규직: 117만 명)에 해당), 이후 동 연령계급 고용자가 증가한 점을 고려

123) 단카이 세대의 퇴직과 더불어 총인구 감소 및 비정규직 증가도 경제활동 인구 감소를 촉진

124)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2030년까지 최대 1,070만 명이 감소할 가능성

- 동 세대는 퇴직과 더불어 곧바로 피부양인구에 편입될 확률이 커 이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가 우려
 - 단카이 세대가 65세를 모두 넘어서는 2015년부터 65세 이상의 피부양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
 - 65세 이상 피부양인구 비중: 2005년 20.2% → 2015년 25.2%
 - 급격한 노동인력의 감소와 피부양인구비율의 상승이 경제활력을 저하
 - 2000년대 초반부터의 저성장은 고령화에 의한 피부양인구비율의 상승으로 인한 영향도 일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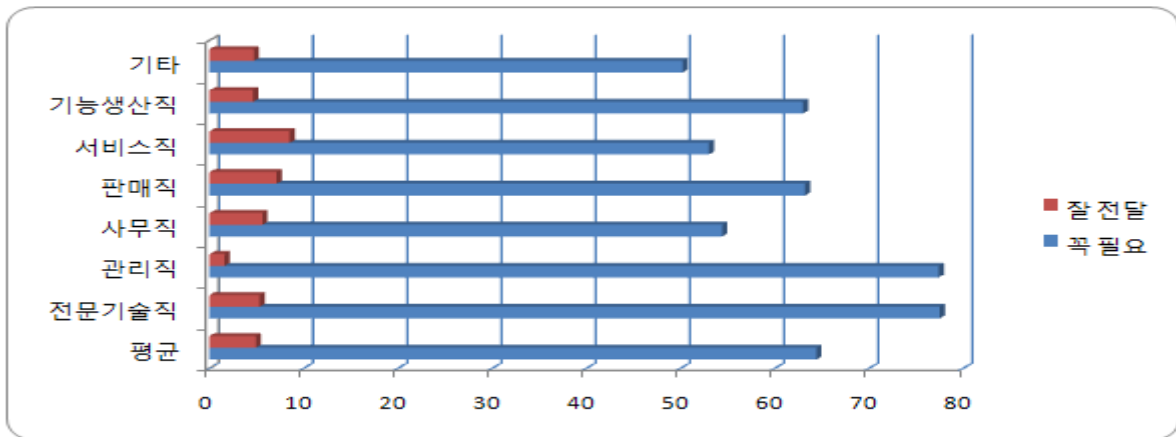
기능 및 노하우 소실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

- 단카이 세대가 지니고 있는 숙련 기능, 노하우 등 암묵지(暗默知)가 차세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유발
 - 단카이 세대는 경제 성장의 주역이자 제품의 고품질과 고생산성을 지탱해온 숙련 기술자가 다수 포함
 - 취업자가 많은 업종은 건설업, 제조업(중후장대 및 소재산업), 운송, 통신, 도소매업 등
 - 이들의 대량퇴직은 차세대로의 기능 전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기업의 제품 경쟁력 약화를 유발할 위험
 - 특히 제철, 제지, 자동차, 산업기계 등과 같이 노하우, 기술력, 경험 등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업종일수록 퇴직에 따른 문제가 심각
- 단카이 세대의 고용 연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의 기능 전수에는 한계
 - 정년 연장 및 재고용 등으로 단카이 세대의 기능을 차세대로 전수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구조적인 문제로 성과는 미미
 - 장기간의 종신고용제도하에서 지식과 기능 및 노하우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분산되어 축적

- 기능 및 노하우가 문서화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체계적인 기능 전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기능 전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제 대응 간에는 괴리감이 존재
- 지식, 노하우 전수가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60%를 상회하지만, 실제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5% 미만으로 격차가 큼

기능 전수에 관한 인식 조사

(단위: %)



주: 응답자 중 기능 전수가 꼭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과 잘 전달되었다고 답한 사람 비중
 자료: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7). “団塊世代の就業生活ビジョン調査結果.”

2) 자산시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일본 가계 금융자산의 특성상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은 포트폴리오가 현금 및 예금 중심으로 구성
 - 2009년 3월 말 기준 전체 개인 금융자산은 1,409조 엔에 달하며, 이 중 현금 및 예금이 786조 엔으로 55.8%를 차지
- 주식, 채권, 외화예금 등 리스크 자산은 약 186조 엔으로 13.2%에 불과

일본 개인 금융자산의 구성

항목	자산 (조 엔, %)		부채(조 엔, %)	
	자산 (조 엔)	(%)	부채(조 엔)	(%)
현금·예금	786.4	55.8	-	-
대출	-	-	315.0	83.0
주식 외 증권	90.2	6.4	-	-
주식·출자	84.5	6.0	-	-
파생상품	0.2	-	-	-
보험·연금	393.3	27.9	-	-
기타 자산(부채)	54.5	-	64.4	16.9
합계	1,409.3	100	379.5	100

자료: 日本銀行, 資金循環 (2009年 3月末).

- 연령계층별 보유에서도 개인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자에 편중
 - 2004년도 말 시점에서 개인 금융자산의 54.4%를 60세 이상이 보유하고 있으며, 50세까지 확장하면 약 78.1%를 보유하는 셈¹²⁵⁾
 - 고령자에 편중된 개인 금융자산은 고령자 세대의 증가와 더불어 더욱더 편중되는 경향¹²⁶⁾

□ 은퇴와 더불어 자산 구성이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 가치 변동도 제한적

- 투자를 꺼리고 예금 보유를 선호하는 고령자의 특성상 단카이 세대가 은퇴 이후에 자산 구성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은 편
 - 세대별 금융자산의 선택 행동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리스크가 높은 금융 자산에 대해 선호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음¹²⁷⁾
- 리스크 자산의 보유액 변동은 주로 주식시장 등의 가격변동에 의존

125) 생애주기상 50대에 자산형성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자녀의 자립, 주택론 변제, 퇴직금, 유산 상속 등의 효과도 자산 증식에 일조

126) 제일생명연구소는 세대수의 변화만으로 미래의 고령자 보유 개인금융자산을 추정할 경우 60세 이상 보유 비중이 2004년 36.5%에서 2010년 62.0%, 2020년 44.7%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 熊野英生(2005. 7. 5.). “團塊マネー追跡, 高齢者貯蓄の向方”. 第一生命研究所.

127) 南武志 外 (2009). “家計金融資産の動向と前望”. 農林金融.

오피스 시장의 수요 감소를 유발

- 단카이 세대의 은퇴는 주택시장보다는 오피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물건의 등급차 및 지역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 임대 오피스 시장은 2010년부터 단카이 세대의 퇴직으로 수요가 하락할 소지
 - 오피스 근로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카이 세대의 퇴직은 더욱 수급 불균형을 야기
 - 인구감소 및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상 장기적으로도 임대 오피스 시장의 축소 국면은 지속될 전망
- 완충재 및 순차 퇴직의 영향으로 급격한 가격 폭락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수요 감소는 불가피
 - 단카이 세대의 정년과 관계없이 1995~2000년 기간 도쿄 23구의 사무직 근로자는 14만 7,000명 이상 감소
 - 이는 1995년 당시 전체 사무직 근로자의 약 4%에 해당
 - 수도권을 중심으로 1인당 바닥 면적의 확대, 사무소 이용 이외의 빌딩 수요 증가가 일정의 완충재 역할을 수행¹²⁸⁾
 - 오피스 수요는 근로자 수에 대한 1인당 바닥 면적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1995~2000년 기간 1인당 바닥 면적이 7% 확대
 - 전문학교, 식음료 판매 시설, 정보시스템 설비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경향
 - 하지만 지방 소도시에서 시작한 가격하락 기조가 점차 주요 도시와 수도권으로 파급되는 등 수요 감소의 흐름이 지속

128) 도심의 일부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에 대해서는 해외로부터의 부동산 투자자금의 유입으로 일정 정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도 부정적

- 거주지의 급격한 이동 등 단기적으로 주택의 수급불균형을 야기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 단카이 세대가 귀농보다는 현재 거주지인 도심 또는 도심 근교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선호
 - 편리한 상업시설 및 충실한 문화시설,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도심 및 수도권에 계속 거주를 희망
 - 대다수의 단카이 세대가 65세 이후에도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구직활동을 위해서도 도심거주를 지속할 가능성
- 노후생활 자금을 위해 주택을 매도할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
 - 풍부한 금융 및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위한 주택의 매도도 당분간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
 - 단카이 주니어 세대의 주택 구입이 서서히 마무리 되어가면서 신규 주택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등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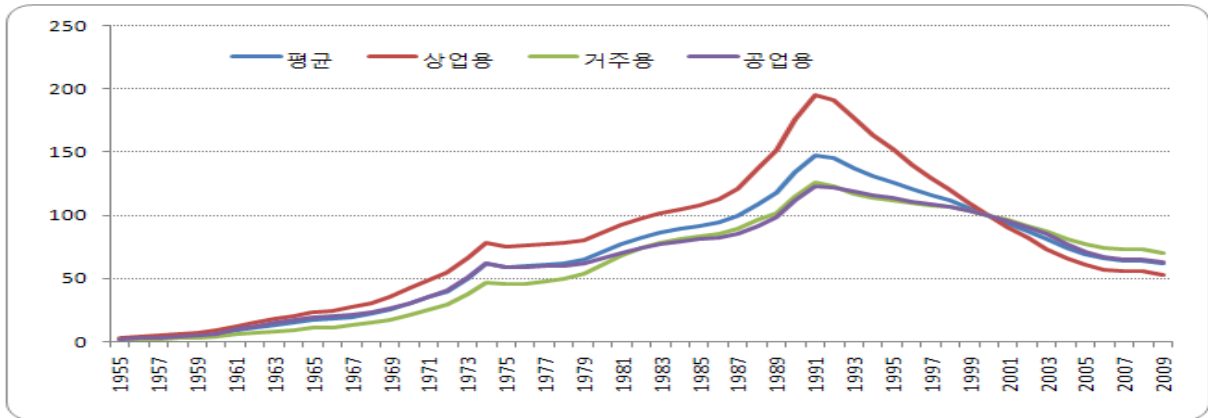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기조를 고착시킬 위험

-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
 - 시가지가격지수¹²⁹⁾의 전국 평균지수는 2005년 100을 기준으로 1991년 147.8을 기록한 이후 2009년 현재 61.4까지 하락

129) 일본부동산연구소가 개발한 전국 대도시의 토지가격 지수로서 시가지의 택지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부동산 지표

일본 시가지가격지수

(2000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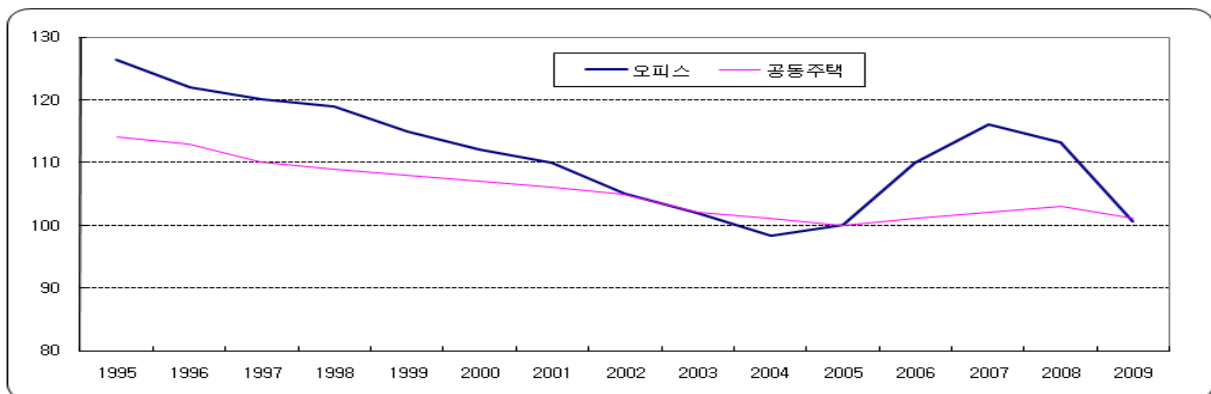
자료: 日本不動産研究所

□ 단카이 세대의 대량퇴직이 부동산 시장 침체를 장기화시킬 위험

- 2007년 말까지의 미니 버블로 상승했던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침체되는 모습
- 2009년 전국 임대료 통계지수는¹³⁰⁾ 2005년 수준에 근접
-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은 오피스 수요 감소 및 신규 주택 수요 감소를 견인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

오피스 및 공동주택 임대료 지수 동향

(2005년=100)



자료: 日本不動産研究所

130) 일본부동산연구소가 1996년 9월 말 조사를 시작해 2009년 현재 14회 조사 완료

3) 재정

단카이 세대의 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

□ 단카이 세대의 퇴직과 더불어 고령자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보장비 지출¹³¹⁾이 급격히 확대될 소지

- 단카이 세대가 65세에 달하는 2012년에는 일본 고령자 인구가 3,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
- 단카이 세대는 지금까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던 세대였지만 이들이 무직의 고령부부 세대가 되면서 사회복지비의 수혜자로 전환
 - 55~59세 샐러리맨의 세금(직접세+사회보험료)은 월 약 10.3만 엔인데 반해 무직 고령부부 세대의 부담은 월 3만 엔, 수급은 약 21만 엔

□ 사회보장비 지출은 2007년 처음으로 90조 엔을 넘어 91.4조 엔에 달했고 2011년 105조 엔, 2015년 116조 엔까지 확대될 전망¹³²⁾

- 단카이 세대는 65세 은퇴와 동시에 연금 수령 세대로 전환
 - 연금 급부비용은 2007년 약 48.3조 엔에서 2011년 약 54조 엔, 2015년에는 약 59조 엔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타 고령화로 인한 의료 및 노인복지 서비스 지출도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에 일조
 - 의료: 2007년(28.9조 엔) → 2011년(32조 엔) → 2015년(37조 엔)
 - 복지비 등: 2007(14.2조 엔) → 2011년(18조 엔) → 2015년(21조 엔)
- 특히 전체 사회보장비 중 고령자 관련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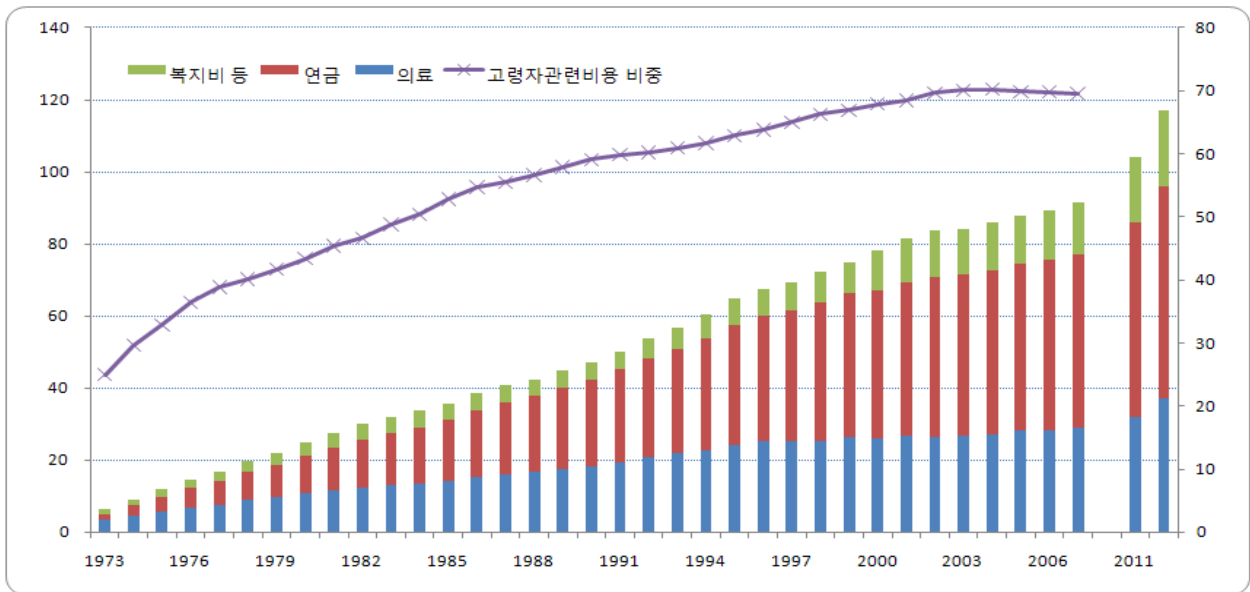
131) 사회보장비는 크게 의료(의료보험, 노인보험, 의료부조, 보건소 등), 연금(후생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비 등(사회복지서비스, 아동수당, 실업보험, 개호대책비 등)으로 구분

132) 2004년 연금제도 개혁과 2005년 개호보험제도 개혁의 효과를 반영한 전망치이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011년에 5조 엔, 2015년에 10조 엔의 추가 부담이 예상

- 연금보험, 개호보험, 노인복지서비스, 고용유지비 등 고령자와 관련된 비용은 2000년 약 53조 엔에서 2007년 63.5조 엔까지 확대
- 반면, 지금까지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오던 단카이 세대가 수혜자로 바뀌면서 세입은 더욱 축소될 전망

사회보장비 지출 추이 및 전망

(조 엔, %)



주: 2007년까지는 실적치 2011년, 2015년은 예상치

자료: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9). “2007年 社會保障給付費.”

사회보장비용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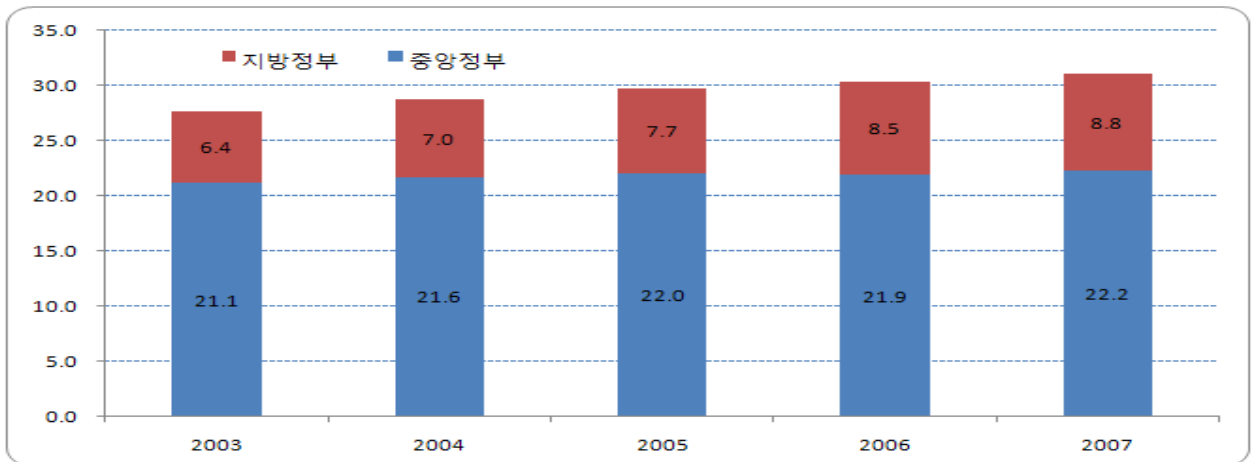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부양 등 정부 지출이 확대되면서 일본의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
-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국가채무가 급등하여 2009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17.6%까지 증가¹³³⁾
- 국가채무의 총 규모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우려할 만한 수준
 - 2009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7년에 비해 약 30.1%p나 증가

133) IMF (2010. 4.). World Economic Outlook.

- 단카이 세대의 퇴직으로 세입세출 구조가 변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
 - 단카이 세대의 고령인구 편입으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늘어나는 등 정부가 세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
 - 정부 일반회계 세출에서 사회보장 관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6.5%에서 2007년 25.5%로 확대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사회보장비에 대한 공적 부담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재정을 압박할 소지
 - 특히 2000년부터 실시된 개호보험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이 고령화 관련 공적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

최근 5년간 공적부담 추이

(조 엔)



자료: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9). “2007年 社會保障給付費.”

4) 정책 대응 평가

고용법 개정을 통해 파급효과를 최소화

- 대량퇴직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을 상대로 고령자 재고용을 유도

- 2004년 12월 「고용안정법(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¹³⁴⁾의 일부를 개정하고 2006년 4월부터 이를 시행¹³⁵⁾
 - 연령에 따른 채용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고령자고용확보조치’로서 사업주는 정년을 65세로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제도 폐지 중 각 기업의 경영 및 노사 관행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선택해야 함
- 2006년에 정년에 달한 종업원은 62세까지, 2007~2009년은 63세까지, 2010~2012년은 64세까지, 2013년 이후는 65세까지 각각 정년 연장을 유도
 - 다만 대기업은 3년, 중소기업은 5년간 ‘취업규칙’ 등을 통해 고용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¹³⁶⁾

□ 사업주에 의한 고령 고용자의 재고용 지원 조치를 마련

-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근로연장제도’와 일단 퇴직시킨 후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제도’ 중 하나를 노사합의를 통해 채택하도록 함
 - 다만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조직한 노조와의 서면 협정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
- ‘다수이직 신고’ 조항을 마련해 사업주가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수 이상을 해고시킬 경우, 사전에 ‘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해고 등의 이유로 이직할 경우 사업주가 이직자의 직무 능력, 자격 등 재취업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구직활동지원서’를 작성·교부

□ 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는 사업주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

134) 고령자들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로서 1971년에 제정

135) 歐美의 경우 영국(고용평등연력유칙, 2006), 독일(연금수급 67세 상향 조정, 조기연금 제한, 실업급여 기간 축소, 최저생계비만 지원), 프랑스(연령 기준 인원감축 폐지), 네덜란드(조기퇴직 폐지, 변형 주5일근무제) 등 유사한 움직임

136) 고령자가 종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

-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재취업 지원 등의 조치를 행하는 사업주 및 단체에 대해 교부금을 지급
 -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승인을 얻어 구직활동 지원금, 재취업 지원금, 강습 지원 금 등을 지원¹³⁷⁾
-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재취업 희망자에 대한 조언 및 지도 등의 방법으로 직업 설계를 지원

정년 연장 및 재고용이 확대

- 「고령자 고용안정법」 시행 이후, 고령자 고용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업체 및 60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이 증가¹³⁸⁾
 -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업체 비중은 2004년 30.1%에서 2008년 46.1%로 크게 증가
 -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비중은 동 기간 50.5%에서 59.4%로 확대
 - 전체 상용근로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7.6%에서 10.0%로 증가
- 정년제가 있는 사업체 수가 감소하였으며, 일률적으로 정년제를 정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계속고용제도를 택하고 있는 사업체가 대부분
 - 정년제가 있는 사업체 비중은 2004년 74.4%에서 2008년 73.5%로 감소
 - 일률적 정년제가 있는 사업체 비중은 동 기간 72.6%에서 67.1%로 축소
 - 이 중 정년 연령 60세의 사업체 비중은 각각 88.3%에서 82.0%로 축소된 반면, 65세 이상을 택한 사업체 비중은 8.3%에서 14.8%로 확대
 - 일률적 정년제가 있는 사업체 중 정년연령이 60~64세인 경우 89.1%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137) 구직활동 휴가 시 휴가비용은 1인당 1일 4,000엔(30일 이내), 재취업 지원금은 1인당 4만 엔, 교육훈련비는 1인당 10만 엔까지 각각 지원

138) 厚生労働省 (2008). “高年齢者雇用実態調査.” (조사기간: 2008년 9월 1일~20일. 조사대상: 전국 9,704개 사업소. 유효 회답률 66.6%)

- 이 중 근무연장제도가 있는 사업체는 27.3%, 재고용제도가 있는 사업체는 83.5%를 차지

업종별 정년제 도입 비중 및 정년 연령

업종	정년제	일률정년	정년 연령			
			60세	61~62	63~64	65세 이상
광업	82.7	80.5	72.7	2.3	2.4	22.5
건설업	65.2	61.6	69.7	1.6	0.0	28.6
제조업	75.3	71.2	83.4	2.1	1.3	13.2
전기·가스	98.9	93.2	93.5	3.9	2.0	0.6
정보통신	86.0	80.1	86.3	3.1	-	10.5
운송	89.6	82.2	77.5	2.3	5.2	15.1
도소매	75.7	70.6	87.7	0.5	1.4	10.4
금융·보험	97.1	90.3	96.5	-	-	3.5
부동산	76.9	70.3	84.7	2.4	1.6	11.3
음식·숙박	55.8	50.4	63.1	2.7	2.6	31.6
의료·복지	64.4	52.7	83.5	2.0	1.1	13.5
교육·학습	82.7	63.8	77.0	3.4	4.1	15.4
복합서비스	98.6	87.2	99.3	0.2	-	0.5
기타서비스	75.5	68.1	81.1	1.8	3.0	14.2
전체	73.5	67.1	82.0	1.5	1.7	14.8

자료: 厚生労働省 (2008). “高年齢者雇用實態調査.”

□ 정년제가 있는 사업체 비중은 전기·가스·수도가 98.9%가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이 65.2%로 최하위

- 사업체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의 대기기업이 98.9%로 가장 높았으며 5~29명의 소규모 사업체가 69.6%로 가장 낮았음

기업규모별 정년제 도입 비중 및 정년 연령

종업원 수	정년제	일률정년	정년 연령			
			60세	61~62	63~64	65세 이상
1000명 이상	99.8	80.9	96.4	0.5	0.1	2.9
300~999	98.5	82.7	91.3	1.4	1.0	6.2
100~299	97.9	87.6	89.8	2.3	1.6	6.3
30~99	93.5	85.1	86.4	1.7	1.8	10.1
5~29	69.6	63.7	80.7	1.5	1.7	16.2

자료: 厚生労働省 (2008). “高年齢者雇用實態調査.”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수정

-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기존의 연금 운영방식의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
 -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¹³⁹⁾는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비용을 현역세대가 부담하는 부과방식(賦課方式)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의 적립금을 운용함으로써 일정 수준 연금액을 확보한다는 재정방식(財政方式)으로 운영
 -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자가 대폭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연금 지출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
 - 연금은 일반적으로 고령자가 된 경우, 장애자가 된 경우, 연금 수급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 특히 단카이 세대의 은퇴로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 제도를 재구축할 필요
 - 단카이 세대의 은퇴로 인한 고령화 인구가 급증으로 연금 재정의 수급 불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비해 2004년 연금제도를 대폭 수정¹⁴⁰⁾
 -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한편, 전체 연금 지급 수준을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하는 ‘매크로경제 슬라이드’ 제를 도입
 - 향후 100년을 목표로 재정균형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적립금 활용, 기초연금 국고 부담액의 50% 인상 등이 포함
 - 매크로 슬라이드 조정으로 당초 예상대로 재정이 균형을 이룰 것인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재정검증¹⁴¹⁾ 실시¹⁴²⁾

139) 일본의 공적 연금 제도는 전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기초연금), 민간 직장인 대상의 후생연금, 공무원 및 교직원 대상의 공제연금으로 구분

140) 2004년 개정의 주요 골자는 1) 보험료 수준 고정방식, 2) 기초연금 국고부담 비중 인상, 3) 사회 및 경제변동에 강한 연금제도 구축, 4) 급부 수준의 하한 설정 5) 적립금 활용 등

141) 장기적인 재정수지 전망, 매크로 슬라이드 개시 및 종료 연도 전망 등을 작성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검증 (厚生労働省 年金局数理課(2009). “2009年財政檢證結果.”)

142) 2004년 개정 이후 2009년 처음으로 재정검증을 실시

연금 지급 연령과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

- 노령후생연금의 지급 연령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 1994년 법률개정에 의해 ‘특별지급의 노령후생연금¹⁴³⁾’ 중 정액부분의 지급개시 연령이 2001년부터 2013년에 걸쳐 65세까지 상향 조정¹⁴⁴⁾
 - 2010년 현재는 보수비례분과 정액부분으로 구성되는 ‘특별지급의 노령후생연금’이 60세부터 지급되며, 보수비례분은 65세부터 지급

-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되 미래의 보험료 수준을 법률로 고정
 -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부담액의 상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역 세대의 장래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보험료 수준을 법률로 고정
 - 2017년 기준 후생연금은 연봉의 18.3%, 기초연금은 1만 6,900엔으로 고정
 -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2004년 13.6%에서 매년 0.354%씩 인상
 - 기초연금의 경우 2004년 1만 3,300엔에서 매년 280엔을 인상

143) 1986년 연금제도 개정에 따라 노령후생연금이 65세부터 지급되었으나, 후생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 이고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을 충족하면 당분간 60세에서 64세에게도 노령후생연금 특별 지급

144) 정액부분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3년마다 1세씩, 보수비례분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3년마다 1세씩 지급시기를 각각 60세에서 65세로 연장

V-2. 해외 사례(미국)

1.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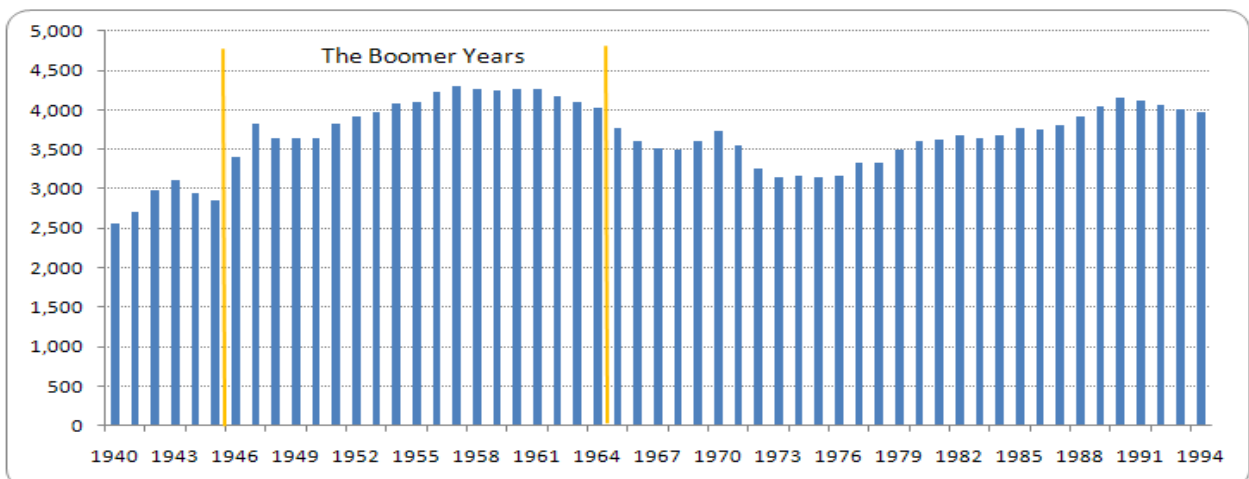
장기간에 걸쳐 많은 수의 베이비붐 세대가 출생

□ 미국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약 19년간에 걸쳐 출생

- 일반적으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6~1964년 기간에 태어난 약 7,585만 명을 지칭¹⁴⁵⁾
- 동 기간 출생률은 1,000명당 22~27명으로 2차 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한 해당 340만~409만 명까지 출생
-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6월 기준으로 약 7,82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생존해 있다고 추정
- 동 세대는 2008년에 44~62세에 달했으며, 이 연령계층은 총 7,730만 명으로 총인구의 25.4%를 차지¹⁴⁶⁾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출생 추이

(천 명)



자료: Bureau of the Census of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145) The United States Census Bureau의 기준을 따름(U.S. Census Bureau (2006). Oldest Boomers Turn 60.)

146) 이민 등 기타 인구 유입으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 인구 수는 출생연도 기준보다 소폭 증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

□ 2008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달하면서 퇴직이 시작

- 만형 격인 1946년생이 2008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 연령인 62세에 도달
- 미국은 법적으로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급 연령인 62세를 은퇴 연령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1967년 「연령차별금지법」¹⁴⁷⁾으로 정년연령을 65세로 규정¹⁴⁸⁾했으나 이후 1986년 「고령자보호법」¹⁴⁹⁾을 통해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
 - 이후 채용, 승진, 급여 등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 대우가 금지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장기간에 걸쳐 느린 속도로 진행되며 은퇴 이후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

- 베이비붐 세대는 약 19년간에 걸쳐 분산되어 출생했기 때문에 은퇴 시기도 넓게 분포
- ‘부분적’ 또는 ‘점진적 은퇴’ 방식¹⁵⁰⁾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경향이 현저
 - 대다수의 베이비붐 세대가 62세를 지나서도 일을 할 의향이 있으며, 65세까지 풀타임 근무를 희망¹⁵¹⁾
 - 약 32%의 베이비붐 세대가 급여소득을 위해 근무를 지속할 의향을 보임
- 미국은 60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서 은퇴 연령도 65세 이상으로 한국에 비해 8세가량 늦춰짐

147)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148) 1978년 개정을 통해 강제정년연령을 70세로 연장

149) The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 (Pub. L. 101-433)

150) ‘partial or phased retirement’로서 일을 지속하면서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급하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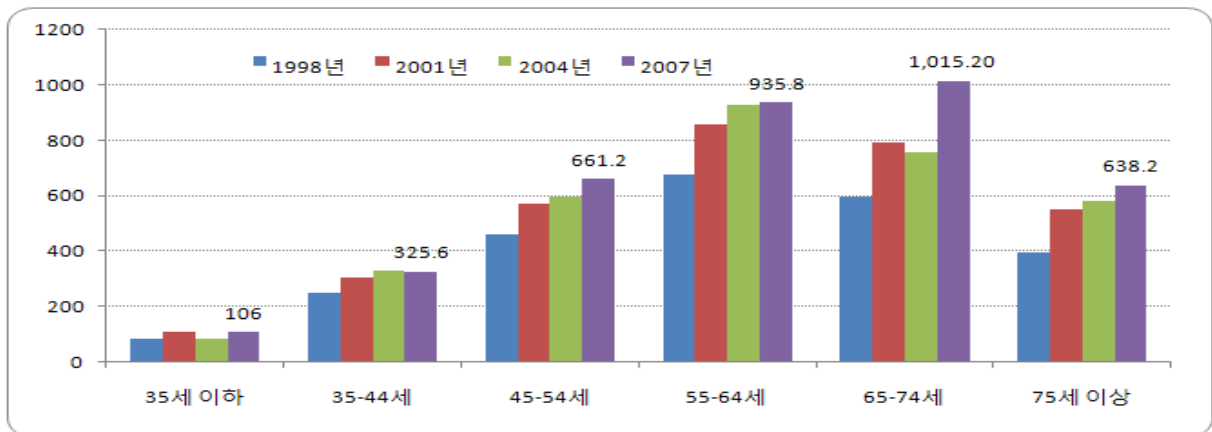
151) AARP (2004). Baby Boomers Envision Retirement II: Survey of Baby Boomers’ Expectations for Retirement. AARP Environmental Analysis by Roper ASW Survey.

풍부한 금융 및 실물 자산을 보유

- 미국 베이비붐 세대는 연령계층 중 평균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룹에 속해 있어, 일반적으로 보유자산이 풍부
 - 가계 소득의 대부분은 급여 소득이지만 사업 또는 금융 소득의 증가가 전체 소득 증가에 일조하면서 2004~2007년 기간 가계자산이 증가
 - 급여소득 비중은 69.7%에서 64.5%로 하락한 반면, 금융소득은 3.2%에서 6.7%로, 사업(자영업) 소득은 10.9%에서 13.6%로 각각 증가
 - 베이비붐 세대는 금융위기 이후의 자산가치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80만 달러 이상의 풍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2008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는 가구주 연령이 45~64세인 그룹¹⁵²⁾에 속해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가구주인 약 4,690만 세대는 전체 가구 수의 약 38%에 해당¹⁵³⁾
 - 45~64세 그룹의 2007년 가계 평균 자산액은 66.1만~93.6만 달러¹⁵⁴⁾

연령별 평균 가계자산 추이

(단위: 천 달러, 2007년 기준)



자료: FRB (2009. 2.). Changes in U.S. Family Finances from 2004 to 2007: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52) 미국의 가구주 통계는 10년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베이비붐 세대(44~62세)는 45~54세, 55~64세 그룹으로 대체 (상단 1년이 부족하고 하단 2년이 남는 상황)

153) U.S. Census Bureau, The 2010 Statistical Abstract.

154) 미국의 평균 가계자산은 가계 수입(Income) 및 GDP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늘었으나 2007년 말부터 미국의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2010년 현재는 약 22.7% 정도로 자산가치가 하락

리스크 자산 보유 비중도 60% 이상

- 베이비붐 세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약 60%가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50% 이상
 - 2007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가 속한 45~64세 세대주 그룹에서 주식 및 채권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각각 18.6~21.3%, 1.1~2.1%
 - 2004년 조사에서 주식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23.2~29.1%로 2007년에는 약 5~7% 감소한 셈
 - 펀드 등 간접투자까지 감안할 경우 베이비붐 세대 가구 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약 60% 이상
 - 2007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 가구당 주식 보유액은 중위수로 4만 5,000~7만 8,000달러로 2010년 현재가치로는 약 3만 5,000~6만 달러로 추정¹⁵⁵⁾

세대주 연령별 주식 보유 추이

(단위: %, 천 달러)

구분	주식 보유가구 비중		금융자산 중 주식		주식액 (중위수)	
	2004년	2007년	2004년	2007년	2004년	2007년
35세 이하	40.8	38.6	40.3	44.3	8.8	7.0
35~44	54.5	53.5	53.5	53.7	22.0	26.0
45~54	56.5	60.4	53.8	53.0	54.9	45.0
55~64	62.8	58.9	55.0	55.0	78.0	78.0
65~74	46.9	52.1	51.5	55.3	76.9	57.0
75세 이상	34.8	40.1	39.3	48.1	94.3	41.0
전체	50.2	51.1	51.3	53.3	35.7	35.0

주: 주식액은 2007년 달러 기준이며 나머지는 비중

자료: FRB (2009. 2.). Changes in U.S. Family Finances from 2004 to 2007: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주택 보유자가 많고 기타 부동산 자산도 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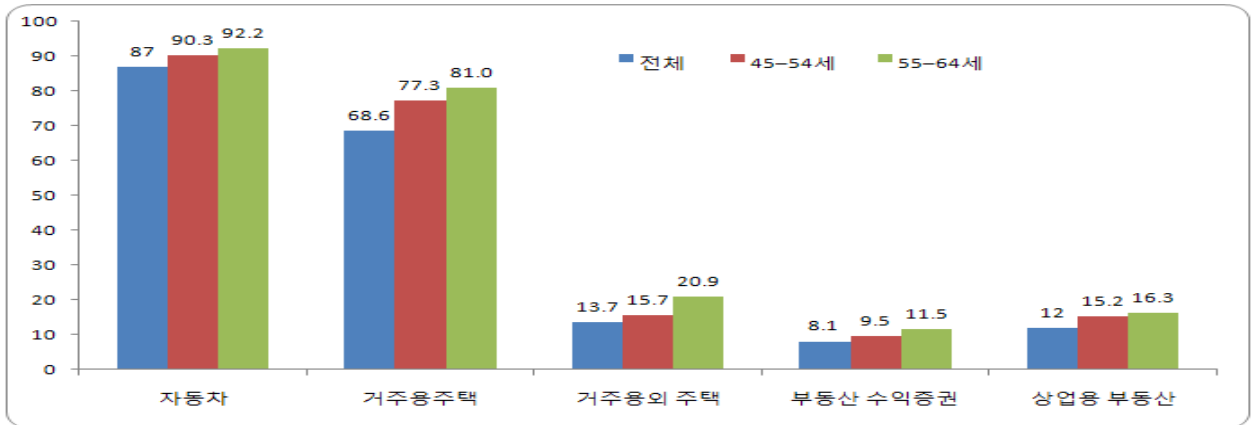
- 주택 보유율이 높고 기타 부동산도 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
 - 미국 전체의 주택보유 비율은 약 68.6%이며,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을 소폭 상회

15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 금융자산 가치의 하락폭을 22.7%로 가정할 경우

- 베이비붐 세대의 77.3~81.0%가 주택 소유자이며, 이외에도 15.7~20.9%가 거주용 외에 주택을 소유
- 베이비붐 세대가 소유한 주택용 부동산의 가치는 2007년을 기준으로 약 22만 달러 수준 (중위수 기준)
-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약 20%의 가치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약 20만 달러 수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

비금융자산별 보유 가구 비중 (연령별)

(%)



자료: FRB (2009. 2.). Changes in U.S. Family Finances from 2004 to 2007: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미국의 총 가계자산 구성>

- 미국의 가계자산 총액은 2009년 말 기준 약 68.2조 달러이며, 이 중 금융과 비금융 자산이 각각 45.1조 달러(66.2%), 23.1조 달러(33.8%)를 차지¹⁵⁶⁾
- 부채는 약 14.0조 달러, 순자산은 약 54.25조 달러

항목	자산 (십억 달러, %)	
현금·예금	7,749	17.2
채권	4,203	9.3
주식·펀드	12,114	26.9
보험·연금	13,055	28.9
기타 금융자산	7,993	17.7
금융자산 합계	45,114	100

주: 기타 자산은 총 자산에서 구분된 항목을 제외한 값

자료: FRB (2010. 3. 11.). Flow Funds Accounts of the U. S. FEDERAL RESERVE statistical release.

156) 미 FRB가 발표하는 통계는 가계부문에 가계 및 비영리법인이 포함

2.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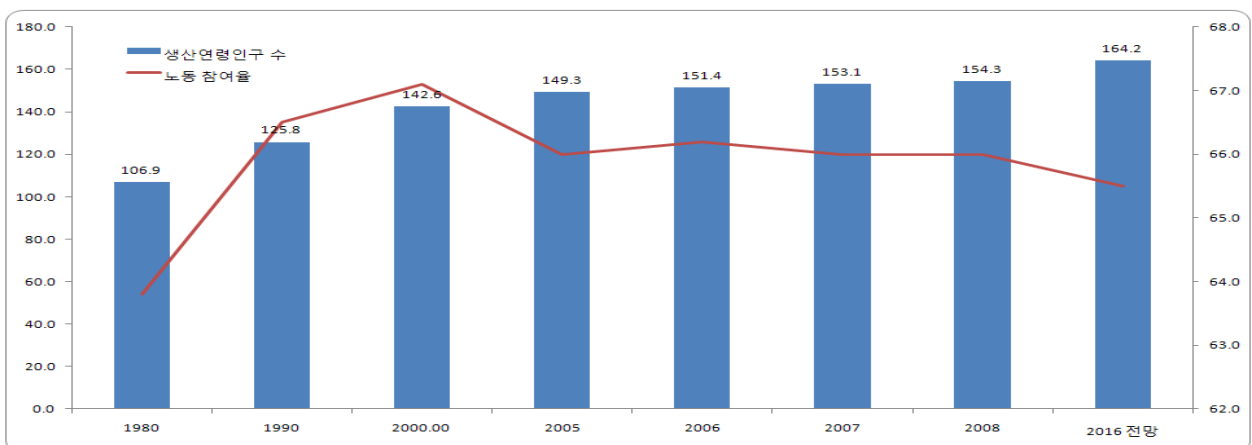
1) 노동시장

향후에도 노동력 공급은 안정적으로 증가

- 2000년대에 들어서도 노동력의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공급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
 - 16세 이상의 생산연령 인구 수와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동시에 증가하는 등 노동력 공급이 매우 안정적
 - 16세 이상 생산 가능연령 인구 수는 2008년 기준 약 1억 5,400만 명이며 2016년에는 1억 6,400만 명으로 1,000만 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¹⁵⁷⁾
 - 베이비붐 세대가 속한 45~64세 연령층의 생산연령인구도 꾸준히 증가
 - 동 세대의 노동자 수는 2008년 약 3,000만 명이었으며, 2016년 약 3,200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

생산연령인구 추이

(백만 명, %)



자료: U.S. Census Bureau, The 2010 Statistical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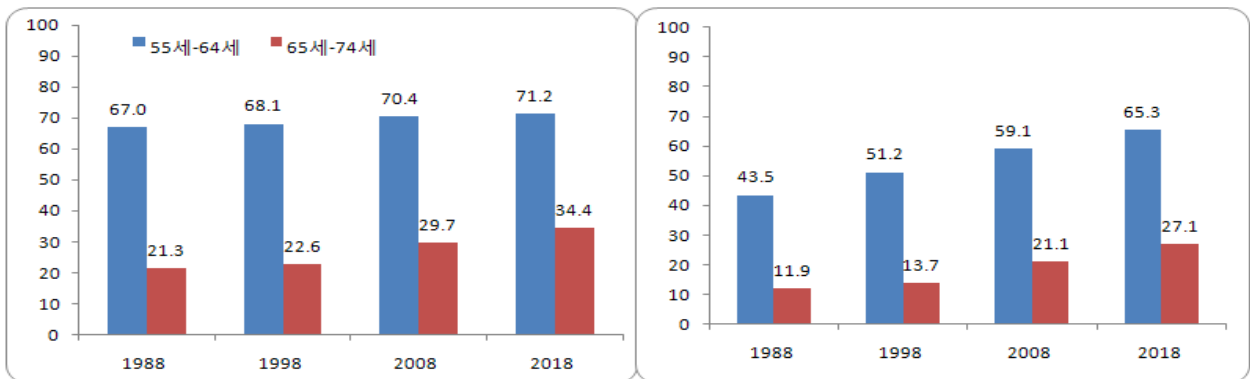
157) 노동시장 참여율은 점차 감소하지만 생산연령인구 수의 증가로 전체 노동력 공급은 완만하게 상승

은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

- 미국은 정년제도 자체가 불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고용 및 노동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1986년 「고령자보호법」¹⁵⁸⁾을 통해 정년제를 폐지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갑작스런 충격보다는 점진적인 진행으로 축적되는 형태로서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도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노동력 수급의 측면에서도 영향이 제한적¹⁵⁹⁾
 - 베이비붐 세대는 ‘부분적’ 또는 ‘점진적 은퇴’ 방식¹⁶⁰⁾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경향
 -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가 속한 55~64세 연령층의 노동참여율은 최근 10년간 약 2.4% 상승¹⁶¹⁾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참여율 (남, 여)

(단위: %)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ivilian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by sex, age, race, and ethnicity.; U.S. Census Bureau, The 2010 Statistical Abstract.

158) The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 (Pub. L. 101-433)

159) 이민 등 기타 요소에 의해 노동력이 증가하는 등 전체 노동시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160) 'partial or phased retirement'로서 일을 지속하면서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급하는 것을 의미

161) 65세 이상 고령자의 평균 노동참가율은 1998년 11.9%에서 2008년 16.8%로 상승했으며 2018년 22.4%까지 증가할 전망

2) 자산시장

자산시장의 가격붕괴 가능성은 희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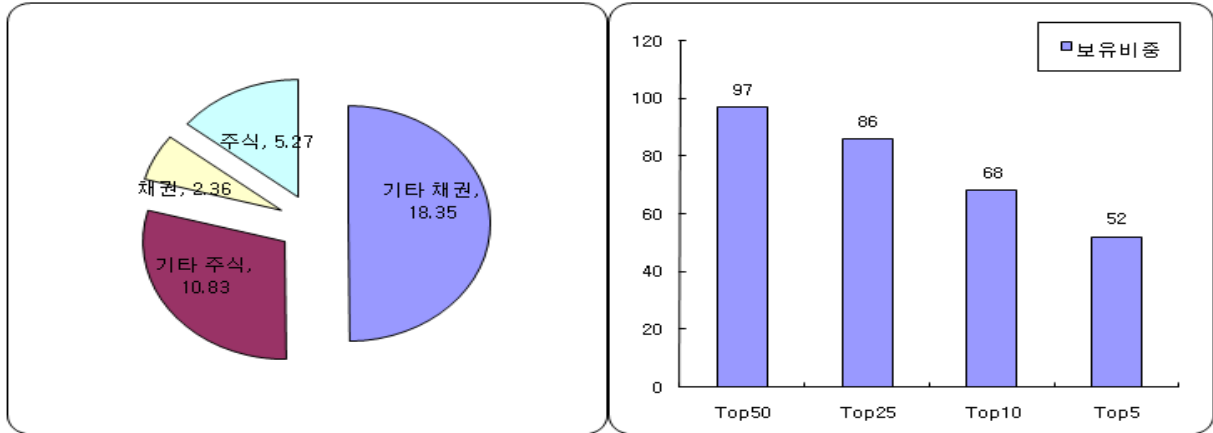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와 더불어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자산시장에 가격 하락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과 펀드 등의 금융자산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주장
 - 베이비붐 세대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이 급증할 경우 자산 가격의 붕괴(melt down)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
-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자산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가하거나 장기적으로 하락 압력을 제고할 가능성은 저조
 - 금융자산의 보유자 구성, 이전세대의 행동 양식, 부동산자산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보유 자산의 매도할 가능성은 미미
 - 은퇴시기의 분산, 길어진 수명, 고령자 고용의 증가 등도 장기적으로 자산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일정량의 공급 증가를 가정하더라도 이민자와 신흥국 등에 의한 신규수요가 등장

소수가 금융자산을 집중 보유

- 베이비붐 세대 중 소수의 부유층이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보유
 - 상위 10% 내에 해당하는 소수 부유층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보유
 -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금융자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7.6조 달러 규모의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을 보유

- 이들 부유층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적으로 약 120만 달러의 금융자산과 기타 부동산 증권 및 투자 소득 약 200만 달러를 소유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계층별 보유 비중



자료: FRB (2009. 2.). Changes in U.S. Family Finances from 2004 to 2007: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 부유층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와 더불어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은 낮으며 처분 가능성이 높은 층은 보유재산이 적음
- 1946년 이전에 태어난 베이비붐 이전 세대 부유층의 경우에도 행동 방식이 유사
 - 상위 10%의 자산가 중 약 16%만이 소득보다 높은 지출로 인해 자신의 저축과 투자 소득을 활용
 - 65% 이상은 지출보다 소득이 커 자산이 증식
- 따라서 부유층 베이비붐 세대는 ‘생애주기설(life-cycle model)’과는 달리 은퇴 이후 보유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산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소득으로 생활할 가능성
- 은퇴와 더불어 금융자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위 10% 이외의 베이비붐 세대의 보유자산은 전체의 약 32%에 불과

VI. 정책제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나 은퇴 이후에 대한 완충장치가 필요

- 노동, 자산, 재정의 3개 부문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은퇴의 충격이 시차를 두고 고령화 문제와 동반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정책의 과잉대응(Overkill)¹⁶²에 유의하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되는 시점에 대비해 점진적으로 정년연장 및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

구분	은퇴 쇼크(기존 논조)	분석 결과	대응방향
노동	-노동력 공급난 심화 -기능/노하우 손실 및 질적 저하	-노동력 공급 감소 효과 미미 · 은퇴자 수 연평균 15만 이하 ·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 증대 -일부에서 기능/노하우 손실 · 기능 승계 시스템 미비	· 기업자율 선택 · 정년 연령의 점진적 제고 (일본식)
자산	-매도우위(가치 하락) -부동산 가격붕괴론 (melt down)	-자산 지속 보유 가능성 高 · 부유층 베이비붐 세대 집중 보유 · 매도 가능성이 높은 층에서 보유 비중이 낮은 경향 -주택 보유 지속 · 가구원 수 감소, 이민 증가	· 부동산 정책 일관성 유지 (한국 특수) · 역모기지 촉진
재정	-사회보장비용 급상승 -재정 건전성 악화	-비용 상승 미미 (GDP 1.4%P) -재정에 미치는 효과 미약 · 성장률 하락 연평균 약 0.15%p	· 수급연령 제고 · 수급액 삭감 (일본식)
개인	-고령 빈곤층 급증 -고령 실업자 증가 (실업률 상승)	-미취업 고령층의 취약계층 전략 · 의료/개호 비용 증가 -고령 빈곤층 (실업자) 증가 위험	· 개인책임화 · 고령일자리 창출 (미국식)

162) 최근 Y2K, 신종플루 등 불확실한 공포로 과잉대응을 함으로써 사회적 피해가 커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ex. 검은 백조: Black Swan, 인디언 추장의 딜레마: Dilemma of an Indian Chief).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문제도 충격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정책의 과잉대응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1. 노동시장

단기적으로는 노동력의 질적 유지가 숙제

-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대량 인력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
 - 상용직근로자 중 정년퇴직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가 통상적인 인식만큼 크지 않은 상황
 - 향후 10년간 연간 14만~15만 명이 은퇴하여 이전 세대의 2배 미만¹⁶³⁾
 - 최근 55세 이상 고용률 추이에서 보듯 정년퇴직자의 재취업률이 높고 있음을 감안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효과도 제한적
 - 2000~2009년 사이 55~59세 고용률은 62.2%에서 65.6%로 증가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경우 인사적체 해소, 대졸 미취업자의 신규채용 확대 등으로 이후 세대의 고용사정은 개선될 가능성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 기업에서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조기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이 상시화¹⁶⁴⁾
 - 매년 11.3만 명의 신규 대졸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 대기 중¹⁶⁵⁾
-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경우 기업에게는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기능 및 숙련이 단절될 우려
 - 제조업 기능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들이 은퇴할 경우 숙련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 1993~2008년 사이 기능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고졸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30.0세에서 38.2세로 증가¹⁶⁶⁾

163)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까지 고려할 경우 매년 5만~7만 명 수준으로 추정

164) 2002년에 연령과 근속연수를 조기퇴직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한 기업이 각각 55.5%와 68.4%를 기록

165) 2007~2009년 평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166) 반면 대졸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34.0세에서 35.8세로 소폭 증가(노동부 (200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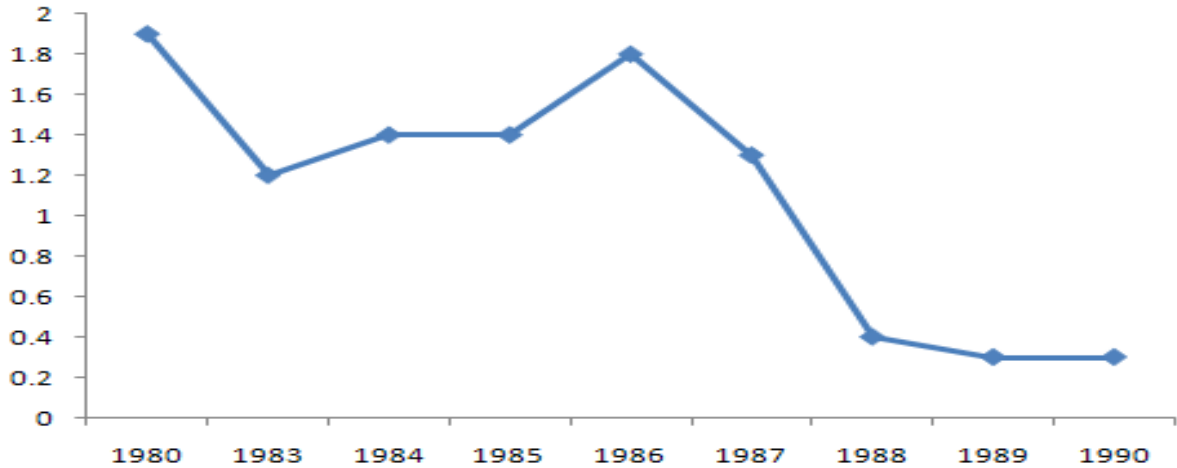
- 생산현장에서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을 대체할 신규노동력이 숙련도 면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 경쟁력이 잠식될 우려
- 고등교육 확대에 따른 제조업 생산직 기피현상과 대기업 노사관계의 변화가 생산 현장의 고령화를 야기
-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업고등학교 등 전문계고에서 배출된 베이비붐 세대가 자동차, 조선 등 생산현장의 중추로 자리매김
 - 전문계고 학생 수는 1965년 17.2만 명에서 1980년 76.4만 명으로 급증¹⁶⁷⁾
 - 1980년대 이후 대학교육의 확대와 실업계 교육의 약화로 신규로 양성되는 기능인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
 - 1980~2009년 사이 전체 고등학생 가운데 전문계고 학생의 비율은 45.0%에서 24.5%까지 하락했고, 전문계고 학생의 대학진학률은 11.4%에서 73.5%로 상승
 - 1987년 민주화 이후 대기업 내부 노동시장이 강화되면서 대규모 제조업 생산 현장에 신규고용이 감소
 - 한국 대형 조선사인 H사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이직률은 1987년 이후 5분의 1로 급감
 - 노동조합과 임금 상승, 연공임금제 도입, 복리후생의 확충 등 생산직의 장기근속을 유인하는 노사관계의 변화가 이직률 감소 요인으로 작용
- 사무관리직에 비해 생산직의 숙련단절 문제가 심각
- 사무관리직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은 범용성이 높은 일반적 숙련(general skill)이기 때문에 결원 시 필요한 인재를 외부 노동시장으로부터 충원할 수 있어 숙련 단절 문제가 크지 않음

16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반면, 제조업 생산직에게 요구되는 숙련은 제조 과정의 특성상 외부노동 시장에서 충원이 어려운 기업특수적(firm-specific) 성격이 강해 숙련 기능공을 기업 내부적으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

H조선사의 생산직 이직률 추이

(단위: %)



자료: 노병직 (2004). “한국 조선산업의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발전, 전망”. 한일 조선산업 임금 및 인사제도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6월 16일. 한국노동연구원 9층 대회의실.

직능급제를 도입해 생산현장을 학습조직화

□ 근로자의 자기개발욕구를 저하시키는 연공 중심의 평가보상제도 대신 직능급제도¹⁶⁸⁾를 도입

- 근속연수 대신 직무능력의 향상에 따라 임금인상, 승진 등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학습 인센티브를 강화
- 노사협력을 통해 평가보상의 기준이 되는 직능자격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성공적인 제도 정착의 관건

□ 직능자격 취득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생산현장의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

168) 숙련등급별로 설정된 자격기준에 따라 개인의 직무능력을 평가해 급여와 승진을 실시. 숙인적 평가라는 점에서 담당 직무의 난이도와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직무급제와 차이

-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각 직능자격별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기술 변화에 맞추어 이를 개정
- 직능자격지표를 활용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에도 후속 세대에게 필요한 숙련을 체계적으로 교육

직능급제 도입사례: 동화엔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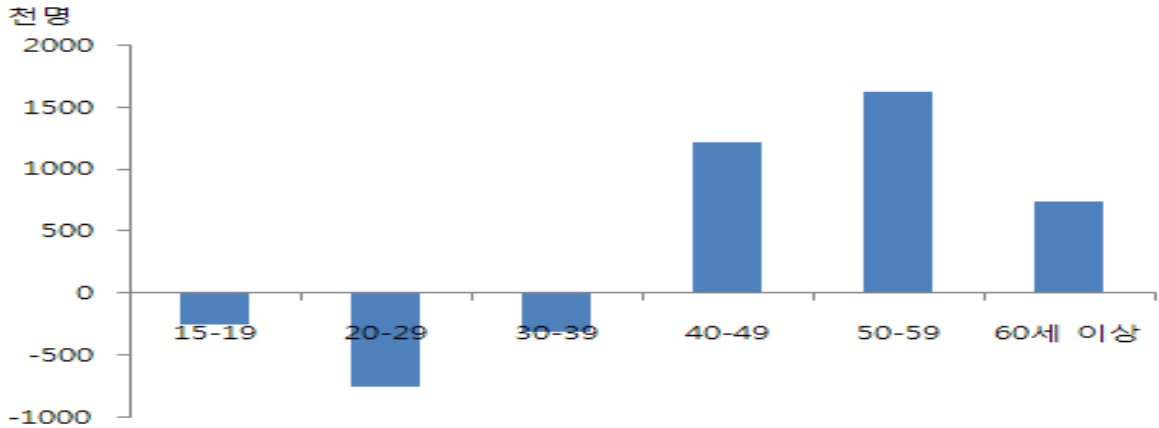
- ▷ 동화엔텍은 부산 녹산공단에 위치한 직원 300명 규모의 선박용 열교환기 제조업체
 - 한국 5대 조선회사와 중소형 조선소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서 2008년 1억 달러 수출대상을 수상
- ▷ 동화엔텍은 1972년 창립 이래 지속 운영해온 연공서열제를 2006년에 직능급제로 전환
 -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한 평가는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업적, 능력, 태도, 자기개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
 - 호칭과 직급체계를 분리하여 직급은 인사고과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올라갈 수 있도록 규정
 - 인사고과규정을 공개하고 투명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능력 정체자에 대해 분발을 유도
- ▷ 기존 직원들 사이에 반대가 심했으나 CEO가 직접 반대하는 직원들을 설득하여 새로운 인사제도를 과감히 도입

자료: 길인수 외 (2009). 『작은 기업 큰 사람 이야기』. 우정디자인기획.

10년 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우려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종결되는 2020년 이후에는 노동력의 양적 감소로 인한 경제의 활력 저하가 우려
 - 저출산의 영향으로 신규 노동력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발생할 노동력의 공백을 메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베이비붐 세대가 중고령화되면서 2000~2009년 사이 40~50대 경제활동 인구는 284만 명 증가한 반면, 20~30대의 경우 107만 명 감소
 -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 급속한 고령화 등은 경제성장을 저하시키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

2000년 이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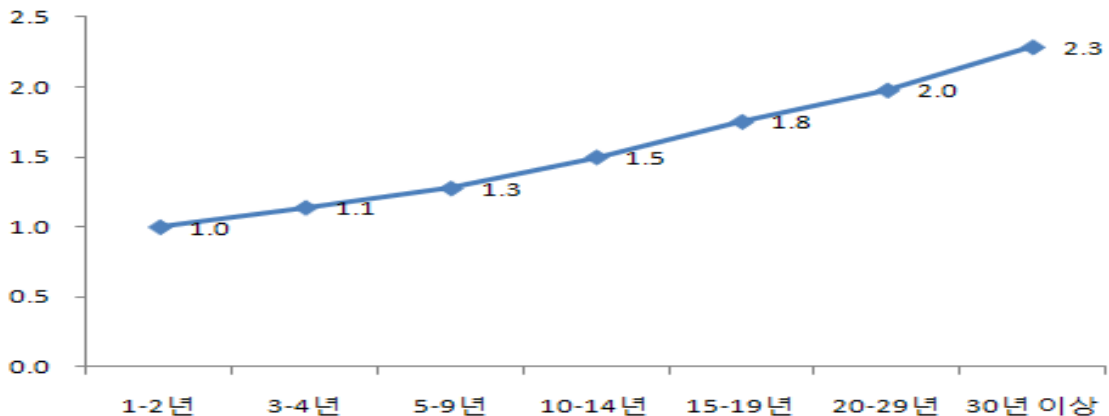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경제적 · 심리적 불안에도 노출

□ 기업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의 계속고용을 기피

-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제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나, 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중고령자의 고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
- 근속기간 15~19년차 근로자의 기본급(보너스 제외)은 1~2년차 근로자의 1.8배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주: 세로축은 근속기간 1~2년차의 월급여액 대비 각 근속기간별 월급여액의 배율 (2008년 기준)

자료: 노동부 (200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중소기업보다 기업 내부의 노동시장이 발달한 대기업에서 더욱 심각
 - 대기업은 매년 5~10%의 인력을 구조조정하며 상대적으로 임금부담이 적은 신규 인력을 채용¹⁶⁹⁾

-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미달하는 50대 중반에 은퇴할 경우 소득불안 위험에 노출
 - 현재 60세인 연금수급 연령을 2013년에 61세, 2033년에 65세로 상향 조정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수급액이 30% 이상 삭감
 - 과거 조기 퇴직자들이 대거 진입한 자영업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득원이 되기에 미흡
 - 2007년 현재 45~49세 취업자 중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53%에 불과 (25~29세의 경우 87.9%)

- 정년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는 갑작스러운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부적응으로 심리적 불안을 겪을 소지가 농후
 -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정년퇴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사회로부터의 단절감, 무력감 등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¹⁷⁰⁾
 - 베이비붐 세대를 노동시장에서 퇴장시키기보다는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근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필요

정년연장 의무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 정년연장 방안을 두고 노사 간에 이견이 지속

169) 이병욱 (2010. 2. 17). “출향제도를 활용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문제 완화”. KERI 칼럼.

170) 이승원·김동배·이주연 (2008).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107-125.

- 2010년 3월 노사정위원회 내에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정년연장 방안을 논의 중
- 노동계는 2004년에 정년연장을 법제화한 일본처럼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해 정년연장을 법적으로 강제할 것을 요구
 -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정한 경우 60살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 경영계는 인건비 증가, 인사 적체, 인력운용 경직화,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정년연장에 반대¹⁷¹⁾
- 정년연장은 노사 간 합의점이 도출되기 어려운 문제로 단기적인 해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유연함이 필요

일본의 정년연장 의무화 사례

- ▷ 일본은 2004년 노사합의로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0세 정년을 2013년 3월까지 65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화
 -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단카이 세대의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 대부분의 기업들이 1990년대 불황을 거치면서 연공서열 대신 담당 직무의 난이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한 결과 정년연장의 비용 충격이 제한적
 - 관리직에 대해 직무급을 적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1999~2005년 중 21.1%에서 61.0%로 증가

자료: 허동한 (2007). “일본 기업의 임금체계 혁신”. 『일본 기업의 고용형태 다양화와 임금체계 혁신 세미나』, 6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현 인사제도에서 임금 및 고용의 유연화 없이 기업에 정년연장을 강제할 경우 신규채용 감소와 인사적체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
 - 현행 연공서열적 인사제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연장을 법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신규채용 감소와 청년취업난이 심화될 우려
 - 중소기업에 비해 노동 이동이 경직적인 대기업의 경우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사적체의 심화도 문제

171) 대한상공회의소 (2010. 4. 15.).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 2007년 기준 500인 이상 대기업의 이직률은 1.36으로 10~29인 중소기업 (2.78)의 48.9%에 불과

□ 정부는 정년연장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조선 등 일부 중공업 사업장에서는 기업 특수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연장, 정년퇴직자 재고용 등을 활용 중¹⁷²⁾
- 정년 연장 또는 폐지 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 및 재정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 정년연장의 차선택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¹⁷³⁾의 활용을 적극 검토

- 연공 대신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이 중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나 이해관계집단의 반대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
-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는 공공부문과 금융권의 사무직을 중심으로 도입
 - 생산직의 경우 노동조합이 주로 임금삭감을 이유로 반대
-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임박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심리를 자극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늘어났으나 도입률은 여전히 100인 이상 사업장의 10%에 못 미침
 -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005년 2.3%에서 2009년에는 9.2%로 증가¹⁷⁴⁾

172) 박동운 (2007). “정년연장 의무화는 또 하나의 노동시장 규제다.” 자유기업원.

173) 임금피크제도란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에서 중고령자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퇴직 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고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

174) 노동부 (2010). “정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과제”.

- 일본에서는 대기업을 77.5%가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¹⁷⁵⁾
-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년보장형¹⁷⁶⁾보다는 정년연장형이 노동계의 협조를 얻기가 용이¹⁷⁷⁾
- 노동계는 베이비붐 세대 고용을 위한 정년제도 개선방안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가장 선호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임금차별을 이유로 반대

바람직한 정년제도 개선방안: 노동계 입장

(단위: %)

현행 정년연장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타/무응답
33.0	14.0	38.0	13.0	2.3

주: 노동조합 상근 간부직 1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3월에 실시
 자료: 노사정위원회 (2010). “일자리 창출 인식조사 분석”.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¹⁷⁸⁾의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

- 현재는 정부가 연간 갑종근로소득이 5,760만 원 미만(2010년 기준)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어 대기업 근로자, 장기근속자들은 대부분 제외
- 또한 지원금액이 1분기당 150만 원 이하여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의 50%에 불과
-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퇴직할 경우 어차피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재정을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안정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175) “임금피크제 시행 1년을 돌아보다”. (2004. 11. 10.). 『참여와 혁신』.

176) 정년퇴직 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의 한 유형

177)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 관련 사항을 취업규칙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규정

178)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

- 임금피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은 대상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
 - 단순히 인사적체 해소,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대상자의 반발과 직무만족도 저하로 실패할 위험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감사, 컨설팅, 대민서비스 업무 등 고령자 친화적 직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

임금피크제 성공사례: 신용보증기금

- ▷ 신용보증기금은 2003년 7월 국내에서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 정년을 55세에서 59세로 연장하는 대신 55세에는 직전 임금의 75%, 56세와 57세에는 55%, 58세에는 35%를 지급
 - 2010년 현재 131명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이 채권추심, 소액소송, 신용조사서 감리, 컨설팅, 연수원 교수 등 ‘업무지원직’ 직군에 배치
- ▷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는 경영성과 향상과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에 기여
 - 특수채권 회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연간 1인당 평균 2억 5,600만 원의 구상권을 회수
 - 임금피크제 대상자 1인당 평균 3,700만 원의 인건비가 절감되어 신규채용이 확대

자료: 신용보증기금 (2005. 3. 15.). “신보, 임금피크제 2년의 성과”. 보도자료.

정년퇴직자를 위한 轉職지원 서비스 강화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베이비붐 세대가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 상담, 시설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퇴직자를 위한 전직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일부 대기업에 불과하나 인력의 고령화 문제는 중소기업이 더욱 심각¹⁷⁹⁾
 - 2008년 현재 30~299인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 중 45~54세 근로자의 비율은 21.0%로 500인 이상 대기업(15.1%)을 상회¹⁸⁰⁾
 - 전직지원장려금¹⁸¹⁾ 대상을 고용조정과 무관한 정년퇴직 예정자로 확대

179) 장승규 (2010). “KT 명퇴 6000명, 그들의 선택은?” 『한경비즈니스』, 738호.

180) 노동부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8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정리해고, 희망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해 이직하려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직접 또는 위탁으로 제공할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

- 현행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사업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고령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

- 경영컨설팅, 상담, 공공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 정년퇴직한 전문직 출신 베이비붐 세대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
- 대학은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지도를 위해 설립한 경력개발센터에 기업 인사담당자 출신을 상담사로 채용

□ 비영리부문에서 퇴직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자산으로 끌어안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선진국들은 비영리단체들이 고령 은퇴자를 흡수하는 방식을 통해 은퇴자에게는 사회공헌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
- 지자체들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비영리단체의 인력 수급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고령자 인재 뱅크(DB)를 운영해 가교 역할을 담당
- 선진 지자체들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도입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비영리단체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적극 개최
- 대기업 출신의 경우 사회적 기업¹⁸²⁾ 관리자가 되어 경영노하우를 전수
- 사회적 기업들은 이윤의 대부분을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낮아 인재난을 호소
- 정부는 사회공익을 위해 이모작(二毛作) 인생을 사는 퇴직자들의 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홍보

182) 기업이윤의 대부분을 소외계층 지원, 환경보전 등 사회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으로 영리기업과 비영리 사회단체의 중간적 성격을 가짐. 전자제품 조립, 봉제, 제빵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

미국 경험봉사단(Experience Corps) 사례

- ▷ 1996년 미국 5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노인층 사회참여 프로그램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임박하자 미국의 시민운동가 마크 프리드먼(Marc Freedman)이 창안
 - 55세 이상 고령자들이 초중등학교의 보조 교사, 빈곤층 학생의 일대일 멘토(mentor)로 활동
- ▷ 경험봉사단은 2010년 현재 미국 22개 도시에서 2,000명의 회원들이 운영
 -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제고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교육 강화, 세대 간 유대감 증진,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통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자료: Putnam, D. R. et al. (2003).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Experience Corps <<http://www.experiencecorps.org>>

2. 자산시장

1) 금융시장

동 세대의 은퇴가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

-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주식에 대한 수요하락으로 금융자산의 가격불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미
 - 주식을 보유한 소유주는 나이가 들면서도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
 - 중장기적으로도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주식시장 참여율이 변화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퇴직연금 규모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연기금 수요가 국민연금의 주식에 대한 수요하락을 대체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불안요인을 상당부분 해소
- 일부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이 빠른 속도로 고갈될 것으로 예상, 향후 주식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
-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율이 자본시장 외적인 측면에서 증가하여 주가를 떠받칠 가능성도 상존

-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20~40대 근로자들은 타 연령대보다 소득불안정성 정도가 낮아 향후 주식시장 참여도가 제고될 가능성¹⁸³⁾
- 또한, 젊은 근로자들일수록 최근 고학력 추세로 교육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¹⁸⁴⁾

교육 수준별 베이비붐 세대주 가구의 주식보유 비중

(단위: 비중 %)

구분	교육을 받지 않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4년제 미만)	대학 (4년제 이상)	대학원
구성비	0.76	7.05	15.92	43.78	7.45	20.59	4.45
주식 비중	0.0	0.4	22.0	4.9	5.8	9.1	9.7

주: 1)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생으로서 2006년 당시 만 43~51세

2) 금융자산은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액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통계청(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은퇴 이후 재무 및 건강 리스크에 노출

□ 소득을 통한 자산축적 기간이 짧아지고 소비기간은 길어져 퇴직 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재무리스크(financial risk)’가 현실화

- 재무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과 기업연금(퇴직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3.5%이지만 기초수급자와 전업주부 등을 포함하면 50.1%로 노후소득 보전책이 긴요한 상황¹⁸⁵⁾

183) 자영업주 가구 총소득의 소득격차는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보다 크고,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주 중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이 많다는 것이 특징 (손민중 (2007). “최근 자영업 취업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148호). 삼성경제연구소.)

184)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185) 국민연금 가입률 산정 시 국민연금법상 가입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등은 제외. 베이비붐 세대 국민연금가입률(2009년 기준)은 국민연금소득신고자(338만 명)를 국민연금가입대상자(458만 명)으로 나누어서 계산. 국민연금가입률을 기초수급자와 전업주부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국민연금소득신고자(338만 명)를 국민연금가입대상자(458만 명)와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중 기초수급자 및 전업주부 등(215만 명)의 합인 673만 명으로 나눈 수치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실태 (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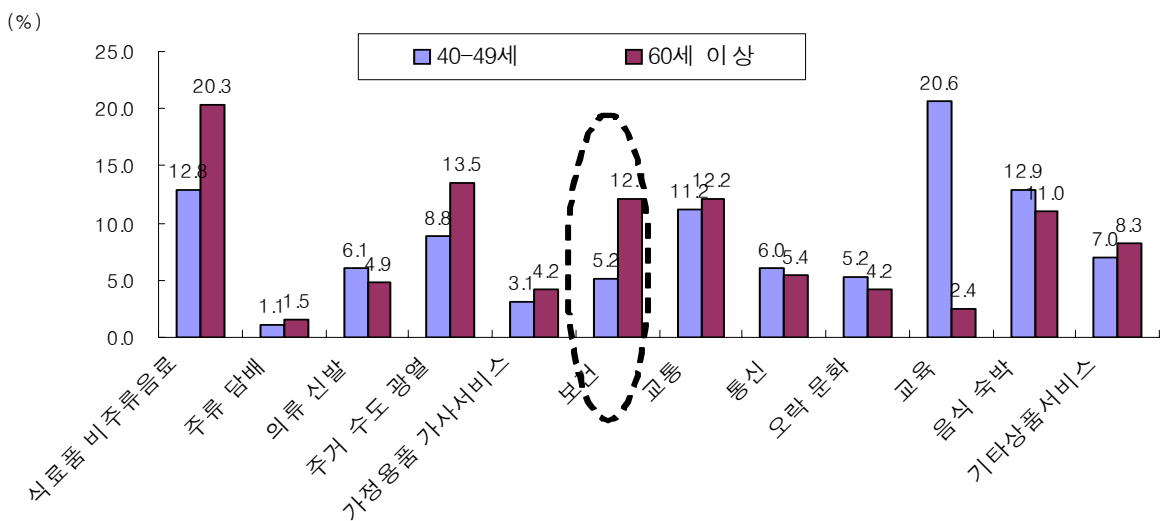
(단위: 만 명, %)

구분	베이비붐 세대 (1955~1963년)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타공적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기초수급자 전업주부 등	소계		
인원	714	39	215	254	460	338

주: 가입대상 제외는 국민연금법상 가입대상 제외자를 지칭
 자료: 국민연금공단

- 또한 은퇴 이후 ‘건강리스크(health risk)’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확대될 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 민영건강보험 및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
- 은퇴 이후 의료비 지출이 확대되면서 공적연금 외에 다양한 보험 상품의 가입을 고려,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점증될 전망
- 2009년 현재 60세 이상 보건의료비가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로 40대 수치(5.2%)의 2배를 상회
 - 베이비붐 세대도 은퇴 이후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

40대와 60대 이상의 소비 지출 구조(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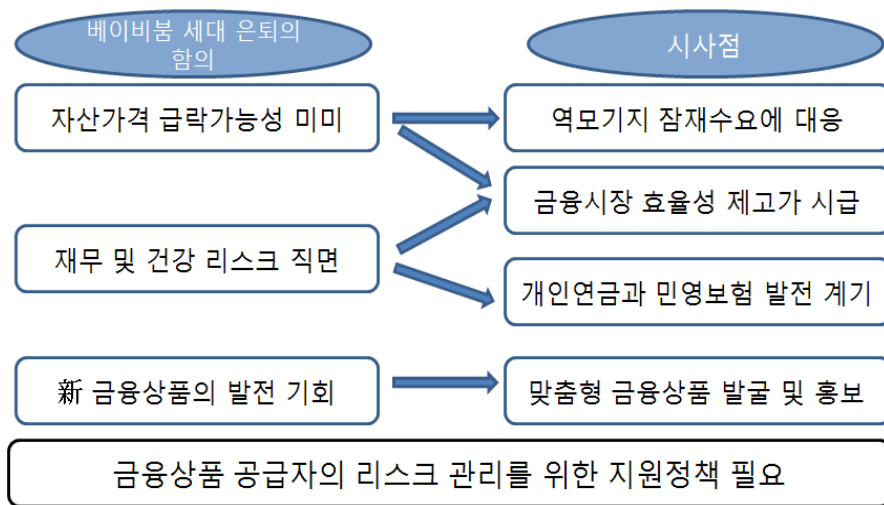
주: 수치는 전체 소비 지출에서 각 소비 지출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KOSIS.

- ‘재무리스크’ 대응을 위한 기업연금, 개인연금, 자산관리서비스 등과 ‘건강리스크’ 대응을 위한 민영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부문의 발전이 예상
 - 이들 분야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기존에 있던 관련 상품들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맞춤형 금융상품의 발전을 유도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자산 및 소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자산시장의 역모기지 잠재수요에 대응, 개인연금과 민영보험의 발전기회 활용, 맞춤형 금융상품 발굴 등의 필요성을 시사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함의와 부문별 시사점



퇴직금을 新금융상품 발전의 촉매제로 활용

-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금 예상규모는 38.6조 원 수준으로 기존 금융상품의 발전과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래를 견인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 2007년 기준으로 45~54세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기준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35.3만 명을 기록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2007년 당시 만 44~52세로 상당수가 전술한 연령에 포함
- 베이비붐 세대의 전체 퇴직금 규모는 38.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근속연수, 1인당 임금, 근로자 수를 곱하여 계산

베이비붐 세대 前後 세대의 퇴직금 추계

연령	근속연수(년)	1인당 월 임금(천 원)	근로자 수(천 명)	전체 퇴직금(억 원)
45~49세	8.9	3,068	828	226,066
50~54세	9.9	3,076	525	159,837
전 체	-	-	1353	385,903

주: 전체 퇴직금 = 근속연수 × 1인당 월 임금 × 근로자 수
 자료: 노동부 (200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체감리스크 확대, 퇴직금 수령에 따른 현금보유액 확대 등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이를 관리하려는 니즈도 가시화
- 현재 성인남녀는 은퇴자금의 부족을 재무계획의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자산관리서비스의 발전동력으로 작용

재무계획에 대한 위협으로 은퇴자금 부족을 꼽은 각국 비율

(단위: %)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홍콩	대만
61	42	38	26	26	20	18

주: 아시아 7개국의 35~65세 성인 남녀 3,563명(한국 532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하나 HSBC생명 (2010. 3. 18.). “아시아 7개국 장기저축계획 설문조사.” 보도자료.

개인연금의 가입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모색

-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다양한 니즈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
- 은퇴 후 소득마련을 위해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원이 필요

- 평균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¹⁸⁶⁾이 45% 수준으로 OECD 평균(84.1%)을 크게 하회해 노후대비 수단으로 부족¹⁸⁷⁾
- 개인연금은 가입하면 노후까지 지속해야 할 장기상품이어서 은퇴를 앞두고 있어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큰 동 세대의 가입이 확대될 전망¹⁸⁸⁾

개인연금제도

구분	개인연금저축제도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판매중지)	연금저축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만 15세 이상(회사별 상이)
취급기관	은행(농수협 우체국 포함), 보험사, 증권사		보험사
납입한도	분기 300만 원		한도 없음
운용방식	실적배당형(은행/증권사), 원리금보장형(증권사)	실적배당형,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금리연동형
담보대출	가능(금융권별 담보비율, 대출금리 차이)		가능(해약환급금 범위 내)
계약이전	금융회사 간 계약이전 가능		불가
연금수령조건	납입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수령		45세 이후 본인선택 시점부터
연금지급방법	확정연금형(은행/증권사) 확정종신 상속연금형 선택 (보험사)		확정종신 상속연금형 선택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의 40%, 72만 원 한도	연간저축금액의 100%, 300만 원 한도	불가
연금수령시 과세	비과세	연금소득세 과세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중도해지 불이익	과거 소득공제분 추징 이자소득세(15.4%) 부과	5년 이내 해지가산세 (2%)부과, 기타소득세 (22%) 부과	이자소득세(15.4%) 부과

자료: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은퇴를 본격적인 연금시장 발전의 계기로 활용

-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퇴직보험의 연금으로 전환 등으로 연금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전망¹⁸⁹⁾

186) 소득대체율 = 연금수령액/퇴직 전 평균 세후소득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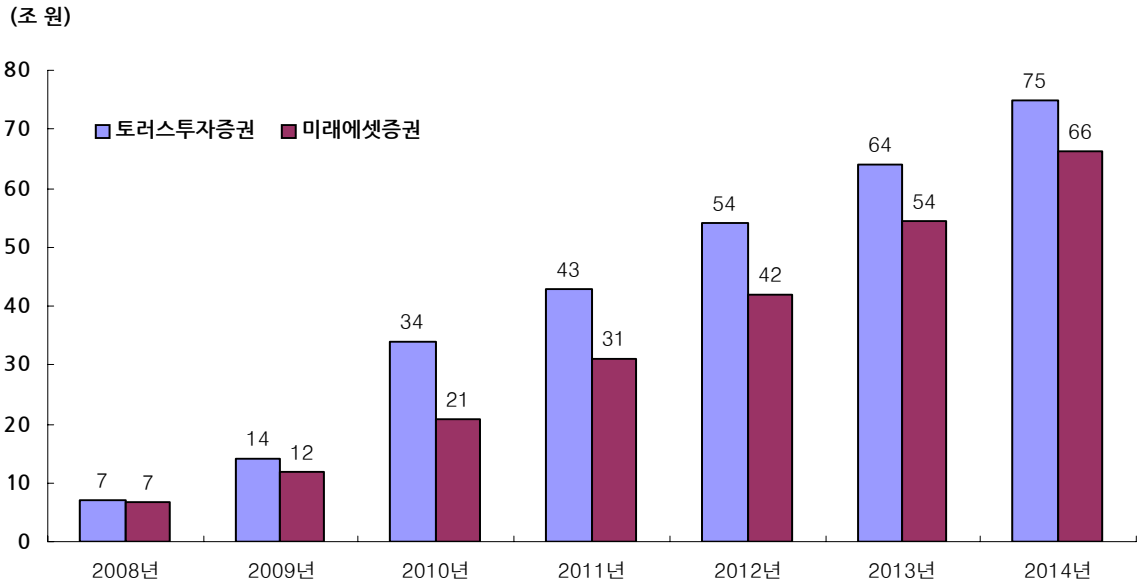
187) 천애정 (2007). “인구고령화에 따른 금융부문의 대응현황과 감독방안.” 금융감독원.

188) 개인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연금저축제도’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인 ‘연금보험’으로 구분. 개인연금저축제도는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2월부터 도입된 ‘연금저축’으로 구분. 연금보험은 탄력적인 설계가 가능하지만 가입 초기 보험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부과로 일정기간 이전에 해약할 경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낮아 손해가 발생. 은퇴 이후 다른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소득공제 금액이 많지 않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은 연금저축의 가입을 선호하고 은퇴 이후 다른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들은 연금보험이 유리하여 연금보험 가입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

189) 2005년 말 5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한 퇴직연금제도는 2010년 3월 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상용근로자 774.0만 명의 36.92%인 285.7만 명이 가입, 가입률이 낮은 실정. 근로자 입장에서 기존의

- 퇴직연금의 시장규모는 2009년 14조 원에서 2014년 75조 원으로까지 급격하게 확대될 전망
- 퇴직보험의 효력기간이 2010년 12월 말이어서 퇴직보험 적립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퇴직연금 시장규모 예상



자료: 토러스투자증권 (2010. 월. 일.). “퇴직연금시장 DB/DC형을 보면 답이 보인다.”; 신세라 (2009. 12. 21.). “2020년 한국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향후과제.”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중장기적으로 민영건강보험 시장도 확대될 가능성

- 또한 은퇴 이후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다양한 민영건강보험 상품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
-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영건강보험 상품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전망
-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계소득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

퇴직금 제도에 비해 장점이 뚜렷하지 않고 기업은 퇴직적립금 사외적립에 따른 법인세 감소효과가 종전의 사내적립을 통한 경상경비의 원활한 조달효과보다 클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이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유지하면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적정 투자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운용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정착이 어려운 상황 (노동부 (2010). “2010년 3월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현황.”)

연령대별 은퇴 후 가계 지출 구조 비교

(단위: 십만 원, %)

구분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평균	비중	평균	비중	평균	비중	평균	비중
소비 지출	기본생활비	13.4	60.9	10.4	63.1	9.6	64.5	10.9	62.9
	의료비	2.1	9.0	2.2	13.6	2.4	14.6	2.2	12.7
	문화생활비	1.9	8.0	1.4	7.1	1.6	9.2	1.6	7.8
	자녀 친지	1.4	6.3	0.7	3.9	0.7	4.0	0.9	4.6
	기타	0.4	1.8	0.2	1.0	0.2	1.1	0.2	1.2
저축과 투자		3.7	14.0	2.3	11.3	1.3	6.7	2.4	10.8
계		22.9	100.0	17.2	100.0	15.8	100.0	18.3	100.0

주: 1) 가계 지출 내 지출항목별 비중은 가계별로 산정한 지출항목별 비중을 평균하여 구한 값
 2) 항목별 지출규모 평균의 상대적 크기와는 다른 수치
 자료: 신세라 (2009. 12. 21.). “2020년 한국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향후과제.”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 최근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의향자가 확대되는 등 수요 확대가 기대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의향 설문결과

구분	2001년	2002년	2005년	2010년
가입 의향 있음	30.3	36.3	43.4	43.7

자료: 보험개발원 (2010).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노인의 90.9%가 만성질환을 인지하지만 수발서비스 수혜자는 13.4%에 불과, 수발서비스 잠재수요가 상당하여 실제수요로 연결될 가능성¹⁹⁰⁾
 - 간병필요인구가 2000년 79.7만 명에서 2020년 254.5만 명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규모가 확대되고 산업도 크게 발전될 전망
 - 장기간병보험 시장규모(수입보험료 기준)는 2005년 300억 원에서 2020년 3,2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장기간병보험 시장전망

(단위: 만 명, 억 원)

간병필요인구			수입보험료 규모			
2000년	2010년	2020년	2005년	2007년	2010년	2020년
79.7	174.9	254.5	300	1,200	2,200	3,200

자료: 삼성금융연구소 (1997). “고령자 개호시장규모 추계.”

19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성장가능성이 높은 맞춤형 금융상품을 발굴하고 홍보

-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펀드상품인 연금펀드, 라이프사이클 펀드, 매월 분배형 펀드는 현 상황에서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대표적 금융상품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연금펀드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현재 크게 확대되지 못한 라이프 사이클 펀드(life cycle fund)의 운용규모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계기로 이들의 주목을 끌 가능성
 - 라이프 사이클 펀드는 만기시점으로 갈수록 고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축소하고 저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펀드
 - 매월 분배형 펀드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 직후보다 10년 이후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성장전망이 유망한 상품
 - 매월 분배형 펀드는 목표분배율에 따라 펀드에서 투자자에게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유형의 펀드로서 2007년 1월 도입
 - 일본의 경우 2006년 말 현재 26조 엔으로 전체 공모펀드 시장의 36%를 차지하여 한국에서의 성장전망도 매우 양호

미국의 라이프 사이클 펀드

- 라이프 사이클 펀드(LCF: Life Cycle Fund)는 1996년 최초로 미국에서 개발된 펀드
-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초기에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 연금제도가 대세였지만 1990년대에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benefit)형 연금제도가 더 큰 비중을 차지
- 이에 확정기여형 퇴직제도를 선택한 종업원, 즉 투자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운용방법 중의 하나로 대부분 라이프 사이클 펀드를 선택
- 한편, 미국인들은 라이프 사이클 펀드의 2가지 유형 중 자산재분배가 자동으로 되어 투자하기에 상대적으로 편한 목표만기(targeted maturity) 전략펀드를 선호

라이프 사이클 펀드의 2가지 유형

유형의 종류	유형의 특징
목표만기 전략 (Targeted maturity) 유형	시간이 지나면 펀드 내에서 자동으로 자산을 재배분하는 SIFI(set-it-forget-it)
적정분배 전략 (Static allocation)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저위험자산이 더 많이 편입된 펀드로 이동해야 하는 DIY(do-it-yourself)형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09) “미국 뮤추얼펀드들의 퇴직연금상품 출시 현황 및 주요 특징”. 『주간 금융 브리프』, 16(42), 18-19.

금융상품 공급자도 리스크 관리가 시급

-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헤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지원책 마련도 중요
 -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소득 리스크를 금융상품 공급자인 금융기관이 분담한다는 의미
 - 정책당국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행태정보를 공급자에게 전달해 향후 발생 소지가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와 선호상품 정보들을 무기명으로 일부 공개하고, 동 세대들의 투자행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 등
 - 중장기적으로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 자산시장의 리스크 모니터링 및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장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동시 추구

- 금융부문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
 -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역량 강화, 상품 개발, 금융서비스 질 향상 등이 중요
 - 펀드 판매채널의 정비와 판매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방안 등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 금융상품 관련 투자자 교육, 재무설계 컨설팅 서비스 등을 확충
 -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산수요계층 변화에 대응한 자산시장 안정화 방안 모색도 중요
 - 인구고령화로 주식, 부동산 등에 대한 선호도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

2) 부동산 시장

주택가격 급락을 초래할 가능성은 제한적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로 재무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주택을 처분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게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상황이 타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
 - DTI 비율은 베이비붐 가구가 87.9%로 평균 수치(84.2%)를 상회하지만 40대(94.1%) 수준에는 미달
 - 가계부채가 조정될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중 약 6% 정도가 주택처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가지고 있는 전체 가구 대비 1.2% 정도 규모
 -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향후 약 10년에 걸쳐 실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처분을 급속하게 실행해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미미
 - 한국의 가계는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5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까지 주택수요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
 - 주택가격은 소득과 수급요인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구조만을 고려해 주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

주택수요모형 추정결과 요약

	모형1: 세대주 연령만 고려	모형 2: 가구원 연령구조도 고려	모형 3: 소득과 주거비용 고려
결과	주택수요가 50대 후반에 정점	주택수요가 60대 초반에 정점	주택수요가 60대 후반에 정점

- 한편, 가구 수 증가와 수도권외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수요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도 일정 수준 내에서 유지될 가능성

- 향후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주택수요의 기본단위인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에도 주택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
 - 전체 추계가구 중 1~2인 가구의 비중이 2010년 43.3%에서 2030년 51.8%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는 고령부부 가구와 1인 싱글가구 등 단독가구 수의 증가로 기존 주택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

- 또한, 전체 가구 대비 수도권 가구의 비중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당기간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수도권 추계가구 수는 2010년 837만 가구(전체 가구 대비 48.8%)에서 2030년 1,056만 가구(전체 가구 대비 53.1%)로 확대

추계가구 전망 추이

(단위: 만 가구, %)

구분		2010년	2020년	2030년
전국 추계가구		1,715.2	1,901.1	1,987.1
가구원수별	1인 가구(A)	347.3 (20.3)	410.9 (21.6)	471.3 (23.7)
	2인 가구(B)	395.7 (23.1)	484.4 (25.5)	558.2 (28.1)
	1인 및 2인 가구(A+B)	743.0 (43.3)	895.3 (47.1)	1,029.5 (51.8)
지역별	수도권	836.5 (48.8)	975.9 (51.3)	1,055.7 (53.1)
	비수도권	878.6 (51.2)	925.2 (48.7)	931.4 (46.9)

주: ()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KOSIS.

다만 중장기적으로 주택처분압력이 제고될 가능성에 대비

- 중장기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주택처분압력 상승 가능성에 대비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부동산 자산의 일시적인 처분 가능성을 낮추는 차원에서 역모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 역모기지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완화 및 제도 정비가 선행될 필요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로 인해 사무실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오피스 투자 유인책도 마련
 - 사무직 근로자의 감소는 오피스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오피스 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부동산 경기에 전반적인 악영향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를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객관화하여 투자처로서 오피스 매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
 -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업용부동산지수 및 이에 대한 통계를 보완해 오피스가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역모기지¹⁹¹⁾의 잠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이들의 노후소득 유지가 어려워짐을 의미하므로 향후 역모기지 등 부동산 상품의 필요성이 제고될 전망
 - 역모기지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노후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부동산 금융상품
 - 부동산 자산의 일시 대량처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역모기지의 모기지 비교

구분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	모기지 (mortgage)
주이용자	60대 이후의 고령자	30~40대 경제활동인구
대출목적	노후생활자금의 효율적인 조달	주택구입자금 조달
대출기간	일정기간 확정(공적보증 역모기지는 사망 시까지)	일정기간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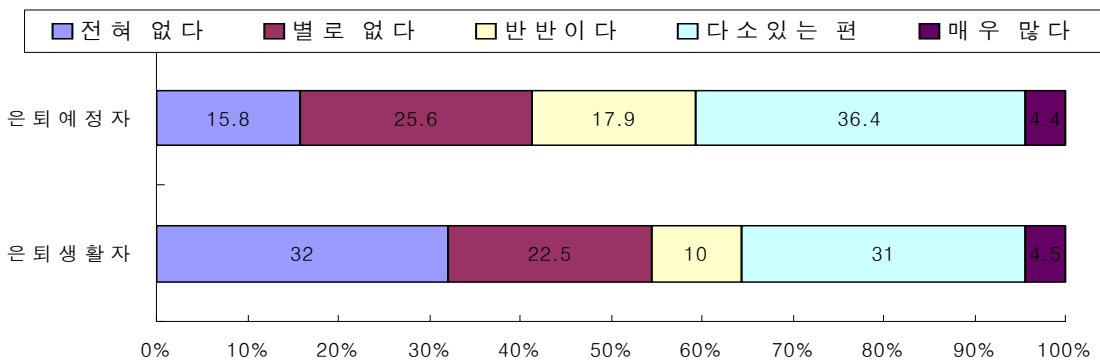
- 2007년 7월부터 역모기지 제도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2010년 3월 말 현재 총 누적 건수는 2,562건에 불과¹⁹²⁾

191) 역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평생 살면서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은행 역모기지는 논의에서 제외 (은행 역모기지는 4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대출기간을 5~15년 정도로 정해 대체로 만기 일시상환을 특징으로 함)

192) 한국주택금융공사 (2010). 『주택금융월보 통계편』. 3월호.

- 가입자는 증가하지만 부모의 집은 자녀유산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가입조건이 엄격하여 아직까지 가입자가 크게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¹⁹³⁾
-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역모기지 상품의 가입할 의향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역모기지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가 포함된 은퇴예정자의 40.8%가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어 은퇴생활자(35.5%)의 의향 수준을 상회

역모기지 상품 가입의향



자료: 하나은행 & 한국갤럽(2007). “한국인의 은퇴준비 현황과 의식”

- 향후 역모기지 잠재수요를 실제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역모기지 활성화 대책이 시급
- 역모기지 수요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모기지의 대출한도와 수시인출 비율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
 - 현재 5억으로 되어 있는 역모기지 대출한도와 50%로 되어 있는 수시인출비율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
 - 역모기지 가입대상 연령을 2009년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신규 가입대상 폭을 확대¹⁹⁴⁾한 것도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

193)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국 역모기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미국의 역모기지론인 ‘HECM’(주택자산전환모기지)의 경우 1989년 10월 출시 이후 2년 동안 546건, 3년 동안 1,565건 가입에 그쳐 초기 역모기지의 가입건수가 부진하지 않다는 의견도 상존

194) 미국은 역모기지 가입대상을 62세 이상으로 제한. 역모기지 가입대상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할 필요(한국금융연구원 (2009). “최근 미국의 역모기지 이용 실태 및 감독 방향”. 『주간 금융 브리프』, 18(24), 14-15.)

현행 역모기지의 장점과 문제점

	장점	문제점
역모기지 (주택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담보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낮고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면제로 초기비용 절감 ▷ 세제혜택: 연간 200만 원까지 대출 이자비용이 소득 공제되고 재산세의 25%를 감면 ▷ 연금뿐 아니라 중도 자금 필요 시 필요자금의 인출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조건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 보증신청일 현재 1세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시가 9억 원 이하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는 주택만 가능. 저당권, 전세권, 주택임대차계약도 있으면 안 됨 ▷ 주택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함

자료: 주택금융공사

- 향후 민간금융기관들이 출시할 다양한 형태의 역모기지 상품에 대비해 소비자와 공급자 보호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
- 역모기지를 제공하는 미국은행들은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했는지 확인해 제도를 둘러싼 문제를 방지하고자 노력
- 美 정부도 역모기지 문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공인 전문가를 통한 역모기지 감정 의무화 법안을 마련

미국의 역모기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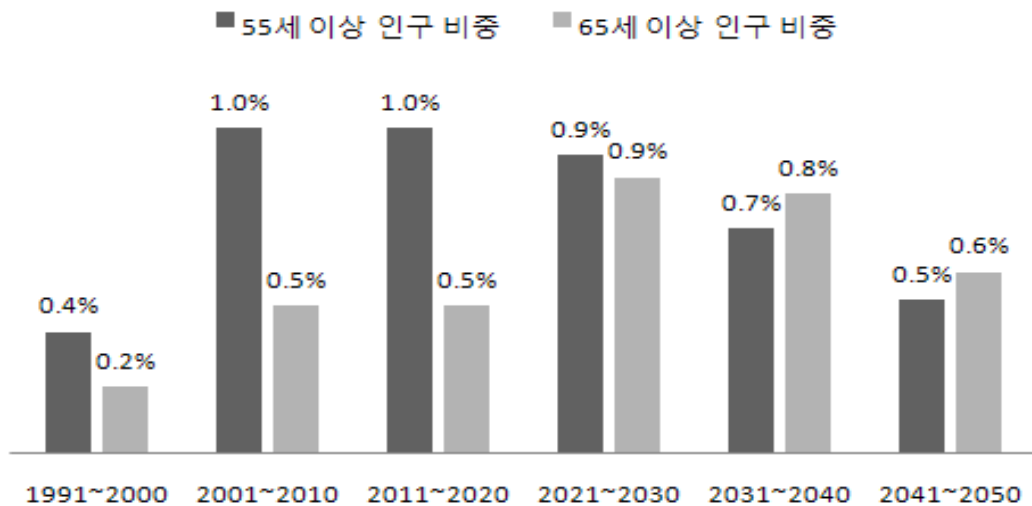
- ▷ 자금지급의 안정성 기준으로 연방정부보장형 자금대출자보장형, 비보장형으로 구분
- ▷ 연방정부보장형: 주택자산 전환 역모기지 보험(HECM: The housing equity conversion mortgage insurance)으로 불리며, 연방정부가 보장하는 유일한 역모기지 제도로 1987년부터 시행. 대출금 지원 방법으로는 일시금 대출방법 한도액설정 대출방법, 확정기간 대출방법, 종신대출 방법 등이 있으며 이들 간의 결합도 가능. 주택의 평가액은 「연방주택법(The National housing act)」에 따라서 지역 별로 그 지역 주택 값의 중간 값에 근거하여 제한
- ▷ 대출자보장형: 대출자보장형(Lender-insured)은 차입자가 발생이자 이외에 위험부담금 혹은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며 소수의 금융회사만이 취급. 패니메이 유형이 대표적이며 이 제도는 대출자로부터 모기지를 구입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2차 모기지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대출자들이 그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역모기지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 대출금 지급방법으로는 일시금 대출방법 종신 대출방법 등이 가능하며 이들 간의 결합도 가능
- ▷ 비보장형: 비보장형(uninsured) 역모기지 제도는 연방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확정기간 역모기지 유형

3. 재정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효율적 활용이 관건

- 1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영향은 경미하나 추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므로 현재의 재정을 활용해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할 필요
 - 5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0~2040년 동안에도 연 0.9~0.7%p로 상승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0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대
 - 202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연 0.5%p 상승하나 2020~2040년간 연 0.8%p 이상 상승하여 재정 부담 급증 우려
 - 2018년에는 55세 이상 인구가 29.5%, 65세 이상 인구가 14.3%였으나 2050년에는 각각 53.7%, 38.2%에 달하여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
 - 2025~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1.7%로 OECD 선진국 평균을 넘어설 전망¹⁹⁵⁾

연평균 연령별 인구 비중 증가 추이 (1990~2050년)



자료: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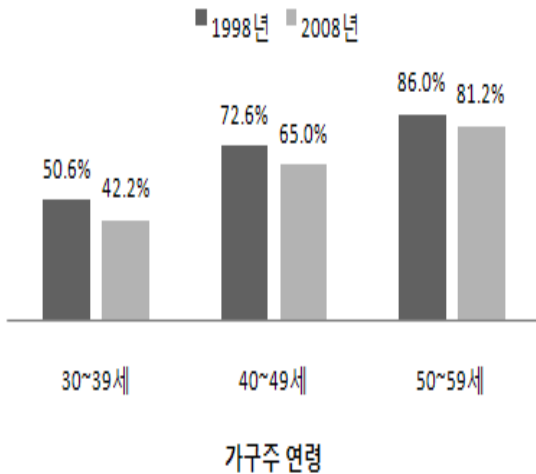
195)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http://www.un.org/esa/population>>

□ 단기적으로 재정을 활용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령자 빈곤을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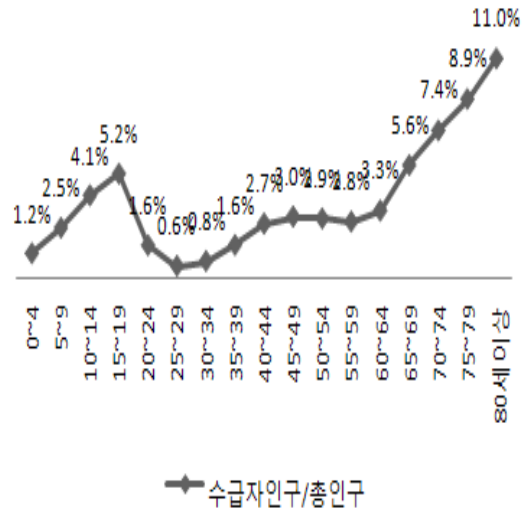
- 교육개혁을 통해 미성년 세대의 인적자본 축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여 1인당 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
 - 현재 10~20세 연령층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2020~2040년에 20~40대가 되어 노동공급을 주도하므로 이들의 1인당 생산성 제고 필요
-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이 있으므로 은퇴준비가 미비한 저소득층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
 - 가족 부양은 약화되는데 은퇴 후 소득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여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제도 수급자가 될 확률이 상승
 - 국민기초생활보상제도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형제, 자매를 부양의무자 범주에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정책을 검토

부모 부양 경향 변화와 고령자의 빈곤화

부모 지원 가구 비중



연령대 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중 (2008)



자료: 통계청, KOSIS.; 보건복지가족부 (2009. 7.).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향후 10년 내에 지출 증대를 주도하는 사회보험제도를 개혁

- 연금 및 보건 지출 증대가 고령자 관련 지출 증대를 주도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
 - 2010~2018년 고령자 관련 지출 증대의 90.4%를 연금 및 보건 지출이, 80.1%는 사회보험¹⁹⁶⁾인 공공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대가 차지
 - 공공연금 급여를 일정 기간 수령한 후에는 수급기간에 반비례하도록 조정하여 평균연령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연금 재정 부담을 경감
 -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 시 평균연령 연장을 반영하여 가입 시 평균연령보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 급여를 비례적으로 삭감
 -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을 위해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경증 진료에 대한 의료 서비스 남용을 억제
 - 2009년 현재 보험급여 지급일의 97.6%, 지급액의 65.6%는 외래진료 및 약국 이용에서 발생할 정도로 경증 진료가 압도적인 지출 항목¹⁹⁷⁾
 - 개인별로 경증진료를 전담하고 病歷을 관리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동일 질환을 다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서비스 남용 억제¹⁹⁸⁾
 - 고령자 건강 검진 및 재활투자를 확대하여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장기 입원 진료비 지출 억제
 -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하면 의료비 증가분의 3분의 1가량 절감 가능¹⁹⁹⁾
 - 한국은 65세 이상 연령층의 활동 제한률이 미국보다 2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²⁰⁰⁾ 건강 개선을 통한 의료비 절감 가능성이 높음

196)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입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 제도를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노인생활안정사업,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수준 및 연령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되므로 제외

197)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00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198) 주치의 제도 도입은 의료비 지출을 18%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 (Ulf-G, G. & Bengt, J. (2000).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ealth Expenditure; Theory, Data, and Econometric Analysis.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1, 1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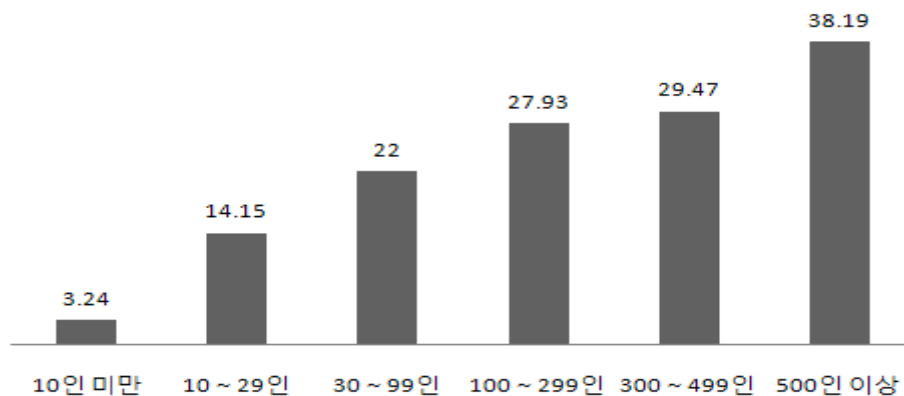
199) Cutler, D. M. (2001). Declining Disability Among The Elderly. *Health Affairs*, 20(6), 11-27.

200) 선우덕 외 (2005).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적으로 고령자 시장소득기반을 확대

- 중산층 이상 고령층은 소득기반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용한 소득기반인 주택연금 및 퇴직연금을 확충하고 재정 의존도 축소
 - 비교적 풍부한 부동산 자산²⁰¹⁾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이용 대상을 기존의 부부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1명이 60세인 가구로 확대
 - 남성 가장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부부간 연령 격차가 있는 현실을 반영
 - 연령 격차가 커서 지급기간 연장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스스로 급여를 삭감할 유인이 존재하므로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은 제한적
 - 2010년 3월 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중 14.7%만 가입한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
 -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이 20% 이하로 저조한 상황
 - 동일 지역 및 업종의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집단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협상력을 강화

기업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 비율(%)



자료: 노동부 (2010). “2010년 3월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현황.”

201) 2006년 현재 가구 평균 2.1억 원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55~64세 연령층은 3.1억 원, 65세 이상 연령층은 2.5억 원의 부동산 자산 보유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4. 실버산업

부유한 은퇴층을 타깃으로 하는 신시장 대비

- 향후 기업의 고령자向 신상품 개발 시 전반적인 조화·안심·감성 니즈를 고려하되, 부유한 은퇴층과 일반 은퇴층을 구분한 양면적 접근이 필수적
 - 육체와 정신 건강의 조화를 추구하는 新트렌드에 맞춰 건강 클리닉, 숙면 상품 등을 개발
 - CCTV 등 안전/안심 상품을 정교화하는 것, 고령자에 맞는 프티 테크 (Petit Tech)²⁰²⁾를 추구
 - 은퇴 이후의 경제적 위축, 미래 불안감 등을 고려하여 부가 서비스 및 가격 거품을 제거한 도시락집, 휴면텔 등 실속상품 개발에 주력할 필요
- 은퇴한 VVIP 럭셔리 수요를 사전 조사 및 예측하여 시장 선점
 - 부모 봉양과 자녀 뒷바라지 등에 집중해왔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 적극 투자할 가능성
 - 벤틀리, 페라리 등 소량 한정 생산되는 자동차, 대표적 귀족 스포츠인 요트와 승마, 특급호텔 최고급 파티 등의 수요 증가가 예상
 - 재빠른 수요 포착 및 선점, 소비 명분을 적극 제시하는 기업의 마케팅력 이 승부의 관건
 - 특히 풍부한 금전 자원에 비해 바쁜 업무 때문에 소비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던 부유층일수록 은퇴 후 고가 체험 상품 니즈가 급상승할 전망
 - 2010년 1월 중국조사기관 후룬바이푸(胡潤百富)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2억 8,000만 원을 소비하는 중국 ‘신귀족층’의 현재 최고 소비항목은 패션 명품, 술,古玩술품 등이지만, 향후 계획하는 최고 항목은 자가용 비행기, 요트 등 체험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202) ‘프티 테크’란 ‘고도의 기술을 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기술의 얼굴을 하지 않은 감성적 기술’을 의미. 일본에서도 2002년 이후 고령자를 위해 글자 크기를 키운 휴대폰, 물리적인 터치나 시각, 소리, 온도, 자세에 따라 반응하는 귀여운 로봇 인형 등이 고령자들에게 대인기

- 증가하는 보안 및 안전 욕구에 대비하여 CCTV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주거 및 서비스 상품도 선호도가 높아질 전망
- 2009년 경찰관 1인당 국민 수가 507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가파른 성장이 불가피

VVIP용 소비 투어 각광

▶ 지방 VVIP만을 위해 루이비통과 롯데백화점이 공동으로 개발한 특별 명품 투어 프로그램이 인기

- 2009년 9월부터 시행된 1박 2일 특별 투어이며 연간 백화점 명품 소비 지출액이 1억 이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급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매출을 제고하는 효과 달성

· 2010년 7월까지 총 16명을 초청했고 고객 1인당 평균 133만 1,000원을 들여 고급서비스를 제공, 결과적으로 1인당 수억 원어치의 매출을 달성

- 투어 내용: 지방 백화점의 퍼스널 쇼퍼와 동행하여 KTX 특실을 타고 서울역에 도착 → 재규어 리무진을 타고 소공동 롯데호텔로 이동 → 1박에 50만 원 이상의 스위트룸에 체크인 → 롯데 에비뉴엘 5층 VIP룸에서 국내 미공개 루이비통 가을/겨울 신상품과 국내에 3~4개만 들어온 한정판 10여 개 모델 소개받음 → 즉석에서 평균 7,000만 원어치 구입 → 롯데호텔에서 약 30만 원 상당 바비큐 파티, 20만 원 상당의 설화수 스파 이용

- 지방까지 스페셜 제품이 도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지방 VVIP를 본점으로 모셔와 쇼핑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향후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더불어 호응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
(윤형진, 롯데백화점 명품마케팅 과장)

▶ 루이비통과 유사한 방식으로 '티파니'는 롯데호텔 내 최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인 '피에르 가니에르'에서 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VVIP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로열티를 제고

- 300만 원에서 최고 18억 원에 이르는 하이주얼리 컬렉션을 공개한 결과 가장 많이 구매한 고객은 즉석에서 1억 5,000만 원어치의 보석 구입

부록 1. 은퇴 이후 고용 확률 추정

은퇴 이후 고용→비고용, 비고용→고용 확률 추정

- ▷ 2003~2007년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45세 이상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움직임 추적
 - 45세 이상 응답자들의 이동 패턴을 추정함으로써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내 예상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주목적
 - 2009년 시점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이 45~54세인 점을 감안하여 45세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

- ▷ 45세 이상 응답자들 가운데 취업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분석에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변수들과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포함
 - 유형①은 지난 설문조사 당시 보유한 직업을 현재에도 보유한 경우, 유형②는 지난 설문조사 당시 보유한 직업을 그만두고 현재 새로운 직업을 보유한 경우, 유형③은 지난 설문조사 당시 보유한 직업을 그만두고 현재 일자리를 갖지 않은 경우
 - 소득, 자산 및 부채 관련 변수들이 두 설문조사 기간 사이의 고용형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두 기간 사이의 소득변화율, 자산변화율, 부채변화율을 포함
 - 소득, 자산, 부채 변수들은 로그를 취하여 변환한 것이므로 두 기간 사이의 차이는 변화율을 의미함

- ▷ 45세 이상 응답자들의 취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취업자가 아닌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인 및 가구 변수들을 포함
 - 유형 ①은 지난 설문조사 당시 직업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직업을 보유한 경우, 유형 ②는 지난 설문조사 당시 직업을 보유하지 않았고 이후 새로운 직업을 가졌으나 현재에는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유형 ③은 지난 설문조사 이후 전혀 일자리를 갖지 않은 경우
 - 지난 설문조사 당시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과 관련한 개인 변수들은 제외

2. 주택수요에 관한 선행연구 및 M-W모형

주택수요와 관련된 선행연구

저자	분석내용
Mankiw and Weil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주택수요를 추정 - 개별가구의 주택수요를 그 가구의 연령별 가구원 수의 함수로 가정 - 연령별 가구원 수에 대한 회귀계수를 추정 - 이를 이용 연령별인구의 장기적 변화에 따라 향후 주택수요를 예측
Swan(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수요 예측 시 인구변수 외에 실질소득, 상대가격 및 이자율 등의 변수도 포함시켜야 함을 제기 ▷ 주택가격 예측 시 공급측면의 변수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
김경환(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증가 속도가 낮아지고 노령인구의 구성비가 높아지면 주택수요의 증가 속도는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결과적으로 주택 상대가격의 하락을 전망
건설교통부(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W 모형으로 연도별 주택수요의 흐름을 전망 - 지역별 수요는 가구 설문조사에 의한 주택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추정
정의철, 조성진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W 방법론을 보완 - 가구 주거비용과 소득을 추가하여 주택수요함수를 추정 ▷ 지역단위의 장기주택수요 예측이 필요함을 제안
임종현(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수요특성을 전망 - 서울시를 4개 지역으로 구분 지역별 특성과 인구구조에 따른 주택수요 특성을 분석
이수욱(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처분가능성을 검토 -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 소득 및 소비를 추정 -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 이후 3차에 걸쳐 주택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
조윤성 외(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W 모형을 원용하여 주택점유형태별, 지역별 주택수요를 전망

자료: 조윤성, 이주형 (2008).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수요 전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825-832), 10월 31일~11월 1일. 대구대학교.를 토대로 재구성

(참조)

M-W 모형 및 수정 모형

1. M-W 모형

▷ Mankiw and Weil(1989)의 주택수요 예측 방법

- 개별가구의 주택수요를 그 가구의 연령별 가구원 수의 함수로 가정하고 연령별 가구원 수에 대한 회귀계수를 추정

$$\cdot D = \alpha_0 \sum_j Dummy0_j + \alpha_1 \sum_j Dummy1_j + \dots \alpha_{99} \sum_j Dummy99_j$$

- 여기서 D 는 자가(임차)가구인 경우 거주주택의 매매가격(월 임대료의 100배), $Dummy\ i_j$ 는 j 가구원이 i 세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α_i 는 연령이 i 세인 가구원의 주택수요량

- 이를 이용하여 연령별 인구의 장기적 변화에 따라 향후 주택수요를 예측

$$\cdot D_t = \sum_i \alpha_i N(i, t)$$

- 추정된 α_i 값에 각 연령별 인구($N(i, t)$)를 곱하여 각 연령별 주택수요의 총량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합하여 t 년도의 총 주택수요를 추정
- 특정시점에서 추정된 연령별 가구원의 주택수요량이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과 소득 및 주거비용 등 주택수요의 핵심적 결정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점은 모형의 한계

2. M-W 수정모형

▷ 연령별 인구구조 대신 세대주의 연령을 사용함과 동시에 추가로 가족구성원의 연령구조를 최대한 감안하기 위해 세대주의 성 가족 수, 배우자 유무를 고려

▷ 추가적으로 정의철 외(2005)처럼 주택수요의 핵심적 결정요인인 소득 및 주거비용을 포함

- 소득은 가구의 연간소득을 사용

- 가구의 주거비용은 자가가구의 경우 사용자 비용을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를 주거비용으로 설정

- 자가가구의 사용자 비용은, $C_t^0 = V[(1-t)\alpha i + \tau + \delta + \pi]$ 로 V 는 현 주택의 평당 매매가격, t 는 한계소득세율, α 는 주택가격 대비 용자금 비율, i 는 명목이자율, τ 는 재산세실효세율, δ 는 주택가격 대비 유지관리비용비율, π 는 주택가격 상승 예상률

- 전세가구의 주거비용은 전세보증금에 명목이자율을 곱하고 이를 주거면적으로 나누어 계산

- 월세가구의 경우, 월세에 12를 곱한 1년 총 월세액을 주거면적으로 나누어 계산

- t 는 20%, i 는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5.2%, τ 는 0.5%, δ 는 3.0%, π 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지수 변화율(국민은행,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을 사용

▷ 수정 모형은

$$- D = \alpha_0 HD30_j + \alpha_1 HD3034_j + \dots + \alpha_8 HD6569_j + \alpha_9 HD70_j \quad (\text{모형1})$$

$$- D = \alpha_0 HD30_j + \alpha_1 HD3034_j + \dots + \alpha_8 HD6569_j + \alpha_9 HD70_j + \sum_k \beta_j^k X \quad (\text{모형2})$$

$$- D = \alpha_0 HD30_j + \alpha_1 HD3034_j + \dots + \alpha_8 HD6569_j + \alpha_9 HD70_j + \sum_k \beta_j^k X + \gamma_j^i I + \gamma_j^c C \quad (\text{모형3})$$

- D 는 주택면적을 기준(평)
- $HD(\text{연령대})_j$ 는 j 가구의 세대주가 연령대에 포함되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1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 X 는 가구의 인구구조적 요인을 나타내는 벡터로, 세대주의 성 가족 수, 배우자 유무 변수를 포함
- I 는 가구의 연간소득을, C 는 가구의 주거비용을 의미

참고문헌

<한국자료>

- 고광수·김근수·김재철 (2006). “인구고령화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가계의 주식보유와 3층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 (2007). 『교육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2007년도 건강검진 결과분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2008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00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2009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2008 국민연금재정 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 국회예산정책처 (2009).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I [중점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09).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V [교육과학부 외].”
- 기획재정부 (2009). “2009 나라살림 예산 개요.”
- 기획재정부 (2009).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안).”
- 길인수 외 (2009). “작은 기업 큰 사람 이야기.” 우정디자인기획.
- 김재경·김정록·황정아 (2006).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김종두 (2009).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Ⅲ-Ⅱ. 사회복지분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노동부 (200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노동부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노동부 (2010).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10. 3월 말 기준).”
- 노병직 (2004). “한국 조선산업의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발전, 전망”. 한일 조선산업 임금 및 인사제도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6월 16일. 한국노동연구원 9층 대회의실.
- 노사정위원회(2010). “일자리 창출 인식조사 분석”.
- 대한민국정부(2009).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지식경제·보건복지가족).”
- 대한상공회의소 (2010. 4. 15.).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 대한상공회의소 (2010).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 문형표 外 (2004).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인구고령화 협동연구과제 04-01). 한국개발연구원.
- 문형표 外 (200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연구보고서 06-05-01). 한국개발연구원.
- 박동운 (2007). “정년연장 의무화는 또 하나의 노동시장 규제다.” 자유기업원.
- 박형수 外 (2008).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20-01). 한국조세연구원.
- 박형수·류덕현 (2006.12)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한국조세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08년 의료급여통계.”
- 보험개발원 (2010).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원 (2008. 6. 9.). “은퇴 이후의 삶과 노후대책.” 보도자료.
- “베이비붐 세대 은퇴쇼크 시작됐다.” (2010. 2. 2.). 『매일경제신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09). “사학연금 재정분석연구.”
- 삼성금융연구소 (1997). “고령자 개호시장규모 추계.”
- 손민중 (2007). “최근 자영업 취업구조의 특징과 시사점”(경제포커스 제148호). 삼성경제연구소.
- 신세라 (2009. 4. 10.). “은퇴자의 은퇴준비 과정 및 생활실태 분석.”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 신세라 (2009. 12. 21.). “2020년 한국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향후과제.”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 신용보증기금 (2005. 3. 15.). “신보, 임금피크제 2년의 성과”. 보도자료.
- 유경원 (2004).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선택 결정요인 분석”(금융경제연구 제185호). 한국은행.
- 유경원 (2010).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분석: 미시자료를 중심으로.”(금융경제 논총 2010-2). 한국은행.
- 이민훈 外 (2009). “경제위기 이후의 新소비트렌드”(CEO information 723호). 삼성경제연구소.
- 이병욱 (2010. 2. 17.). “출향제도를 활용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문제 완화”. KERI 칼럼.
- 이승원·김동배·이주연 (2008).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107-125.

- 임경목 (2002). “한국 가계금융자산 구성의 결정요인 분석: 주식보유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장승규 (2010). “KT 명퇴 6000명, 그들의 선택은?” 『한경비즈니스』, 738호.
- 조운성, 이주형 (2008).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수요 전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825-832), 10월 31일~11월 1일. 대구대학교.
- 정의철·조성진 (200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주택수요 전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0(3), 37-46.
- 증권거래소 (각 연호). “주식투자인구 및 주식보유현황 조사.”
- 천애정 (2007). “인구고령화에 따른 금융부문 대응현황과 감독방안.” 금융감독원.
- 최공필 외 (2005).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대응.” 『금융연구』 19권 별책, 한국금융연구원.
- 최숙희, 藤井英彦 외 (2007). “한일고령화 현황과 파급효과”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JRI 공동연구.
- 통계청 (2005). “총인구조사.”
- 통계청 (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 통계청 (2009).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2010. 5. 7.).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도자료.
- 통계청 (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보도자료.
-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하나 HSBC생명 (2010. 3. 18.). “아시아 7개국 장기저축계획 설문조사.” 보도자료.
- 하나은행 & 한국갤럽(2007). “한국인의 은퇴준비 현황과 의식.”
- 한국거래소(2009). 『KRX Market』, 5월호.
- 한국금융연구원 (2009). “미국 뮤추얼펀드들의 퇴직연금상품 출시 현황 및 주요 특징”. 『주간 금융 브리프』, 16(42), 18-19.
- 한국금융연구원 (2009). “최근 미국의 역모기지 이용 실태 및 감독 방향”. 『주간 금융 브리프』, 18(24), 14-15.
- 한국주택금융공사(2010). 『주택금융월보-통계편』. 3월호.
- 홍종문, 이주형 (2007). “주택가격 안정에 관한 연구-인구구조 및 경제변수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15(2), 133-148.

허동한 (2007). “일본 기업의 임금체계 혁신”. 『일본 기업의 고용형태 다양화와 임금체계 혁신 세미나』, 6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토해양부, 오피스빌딩 공실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

통계청, KOSIS.

한국거래소, 주식통계.

한국거래소, 주식투자인구 및 주식보유현황 통계.

한국은행, ECOS.

<일본자료>

南武志 外 (2009). “家計金融資産の動向と前望”. 農林金融.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7). “団塊世代の就業生活ビジョン調査結果.”

日本國會圖書館 (2007). “2007年問題—団塊の世代の退職をめぐって” (ISSUE BRIEF No. 561).

日本 經濟産業省 (2007). “地域經濟回生のための緊急プログラム”.

內閣府 (2000). “國民經濟計算: 2000年度連鎖價格GDP需要項目別.”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9). “2007年 社會保障給付費.”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8). “日本將來人口推計2010.”

厚生勞動省 (2008). “高年齡者雇用實態調査.”

厚生勞動省年金局數理課(2009). “2009年財政檢證結果.”

厚生勞動省 (2010. 1.) “人口動態統計.”

總務省 (各 年度). “勢調査”.

總務省 統計局 (2005). “2004年全國消費實態調査.”

總務省 統計局 (2009. 10.). “人口推計.”

總務省 統計局 (2010. 4.). “勞動力調査.”

總務省 統計局 (2008). “就業構造基本調査 2007年.”

熊野英生(2005. 7. 5). “團塊マネー追跡, 高齡者貯蓄の向方”. 第一生命研究所.

日本不動産研究所, 市街地價格指數.

日本銀行, 資金循環 (2009年 3月末).

<중국자료>

林文杰 外 (2010). “千万富豪品牌傾向調査”. 『胡潤百富』, 1月.

<미국자료>

- Ameriks, J. & Zeldes, S. P. (2004). How do household portfolio shares vary with age (Working Paper). TIAA-CREF.
- Barry, P. B., Brayant, R. C. & Burtless, G. (2004). The impact of aging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economy: a survey. The Brookings Institution.
- Mankiw, N. G. & Weil, D. (1989).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9(2), 23-258.
- Myers, D. & Ryu, S. (2007). Aging baby boomers and the generational housing bubbl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4(1), 17-33.
- Poterba, J. M. (2001). Demographic structure and asset retur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565-584.
- Ulf-G, G. & Bengt, J. (2000).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ealth Expenditure; Theory, Data, and Econometric Analysis.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Vol. 1.(pp. 11-53). North Holand: Elsevier.
- FRB (2009). Changes in U.S. Family Finances from 2004 to 2007: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http://www.federalreserve.gov/pubs/bulletin/2009/pdf/scf09.pdf>>
- FRB (2010. 3. 11.). Flow Funds Accounts of the U. S. Press Release.
<<http://www.federalreserve.gov/releases/z1/>>
- AARP (2004). Baby Boomers Envision Retirement II: Survey of Baby Boomers' Expectations for Retirement. AARP Environmental Analysis by Roper ASW. Survey.
- OECD, OECD Stat.
- OECD, Social Expenditure DB.
-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U.S. Census Bureau, The 2010 Statistical Abstract.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ivilian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by sex, age, race, and ethnicity.
<http://www.bls.gov/emp/ep_table_303.htm>